

제429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7 호
(정기회)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11월12일(수)

장 소 제2회의장

의사일정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3.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12632)
- 부별심사: 비경제부처

상정된 안건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1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1
3.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12632) 1
- 부별심사: 비경제부처

(10시01분 개의)

○위원장 한병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3.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12632)

- 부별심사: 비경제부처

○위원장 한병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은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질의시간은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주질의는 답변시간 포함 17분, 보충질의는 답변시간 포함 5분입니다. 국무위원 등 정부 관계자분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고 일목요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비경제부처에 대한 서면질의는 내일까지 이어지는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회의 산회 시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내일 회의 산회 이후에는 서면질의를 접수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일을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도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

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옹진 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영 위원** 배준영 위원입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님, 이번 대장동 사건 재판 관련해서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이 사건이 문제가 돼 갖고 법무부 출근할 때 여러 기자들이 이 사건에 관해서 물어봐 갖고요. 성공한 수사라고 하는 것은, 수사나 기소의 목적이 최종적으로는 범죄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받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명의 피고인과 관련해서는 구형된 형보다 더 나왔습니다. 구형량이라고 하는 게 수사 검사들이 봤을 때 이 정도 최고로, 이 정도로 선고해 달라는 요구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구형보다 절반 이상의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수사에 있어서는 성공한 거고 또 공소유지도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성공한 공소유지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배준영 위원** 민주당에서는 이번 사건 수사가 잘못돼서 국정조사·특검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좀 결을 달리하시는 것 같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리고 이 1심 판결은 7800억 중에 400억 정도만 환수해야 한다고 판시했는데 이것도 성공적으로 보시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만석 대행이 용산과 법무부의 관계를 고려해서 항소 포기 결정을 했다고 했는데 ‘나도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은 9월 30일 날 국무회의에서는 ‘제가 항소·상고를 제한하고 있고 주요 사건 관련해서는 지휘하고 있다’고 했고 ‘제가 재심 사건 관련 항소 포기를 시키거나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취하시키는 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매일 사건을 체크하고 있다. 매일 구두 지시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11월 10일 날 기자들 앞에서는 구체적 사건 이래라저래라 지시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셨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묻겠는데요. 법무부차관에게 대장동 1심 사건 관련해서 어떤 지시를 하셨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저는 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는 제가, 공수처가 세 번 정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 이게 10월 30일 날 선고가 있었고요. 월요일 날, 주말이어서 월요일 날 아침에 여러, 매일 아침마다 사건 보고가 옵니다. 사건의 보고를 받고 ‘이 사건 중하게 선고됐구나. 잘됐군’ 뭐 이런 정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았고 이게 언론에서 여러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한 이삼 일 정도 후에 판결문을 대충 훑어봤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11월 6일인데 그때 국회에서 예결위 종합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와 있는데 예결위 끝나고 나서 대검에서 항소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의견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 이게 중형 선고됐는데 신중히 판단할 필요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정도 얘기를 하고 끝나고 저희들은 다시 돌아갔고요. 그다음 날 11월 7일 날 마찬가지로 저녁에 예결위가 저녁 식사를 위해서 잠시 휴정했을 때 구두보고로 이게 검찰에서 항소할 것 같더라는 보고를 받았고요. 그 이후에, 실제로 이거는 뭐 보고라기보다

도 식사 시간에 얘기를 들은 거였고 그날 저녁에 예결위가 끝난 이후에 최종적으로 항소하지 않았더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배준영 위원 동문서답하시는 것 같습니다.

법무부차관이 검찰총장대행에게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니까 항소를 알아서 포기하라고 했다고 한다, 이렇게 법무부차관에게 지시하셨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런 사실 없습니다.

○배준영 위원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해서 신중한 결정 하라고 세 차례 보고받은 자리에서 이야기하셨는데 만약에 장관님이 대통령한테 특정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합시다라고 세 번 보고했는데 대통령이 모두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하면 보고한 대로 집행하시겠습니까, 장관님?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가 신중하라고…… 처음에는 그냥 단순하게 사건 보고만 받았습니다. 두 번째도 뭐 거의……

○배준영 위원 두 번째, 세 번째는 신중한 결정을 하라고 말씀하신 게 다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신중한 결정이라는 게 국회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 잘 아시지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동의 아니면 신중한 검토라는 거는 하지 말라는 얘기고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어쨌든 받아들이는 분의 의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배준영 위원 이재명 대통령도 저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밑에 보시지요. 안 됩니까라는 뜻입니다. 두 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휘권을 행사하셨는데 검찰총장에게만 특정 사건을 서면으로 하게 돼 있는 법과 정면 배치됩니다. 위법한 거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이게 제가 지휘를 하려고 했다면 서면으로 했을 겁니다. 만약 일선 청에서도……

○배준영 위원 서면으로 안 하셨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일선 청에서도 이걸……

○배준영 위원 그것 위법입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지휘로 받아들였다고 하면 서면으로 지휘할 것을 요구했을 겁니다. 그런 사실 없습니다.

○배준영 위원 대검찰청 비공개 예규에 따라서 항소하셨어야 되는데, 물론 형량이 넘는 사람도 있지만 못 미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항소하셨어야 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왜 대장동 사건 항소에 반대하셨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저는 뭐 반대한 건 없습니다.

○배준영 위원 반대하지 않으셨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최종적으로는……

○배준영 위원 사실상 반대하셨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이거 사실상이라는 거하고 법적인 얘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배준영 위원 그리고 PPT를 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의 정점

에 있는 피의자이며 법무부장관을 지휘할 수 있는 인사권자입니다. 이번 1심 판결에서 400번 넘게 언급되었고요. 이번 항소 포기의 최대 수혜자가 사실상 누구라는 것은 국민들이 압니다.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지금 멈춰 있습니다. 1심 결과대로 특정경제 가중처벌법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벗어난다면 업무상 배임만 남고, 업무상 배임도 민주당이 지금 범을 없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은 완전히 무죄가 됩니다. 이게 최대 수혜가 아니면 누가 최대 수혜자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일방적 주장 같습니다. 판결문 어디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돼 있다는 언급은 없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리고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안을 대통령실, 그러니까 이 사안을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직원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저는요 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논의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배준영 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간접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법무부 간부와 대통령실 직원과의 만남 또는 전화도 포함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이런 적 있습니까? 이런 관련 보고 받으신 적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가 그런 말은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배준영 위원** 전혀 없습니까? 책임지실 수 있으세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배준영 위원**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비서관 4명 중에 3명이 이재명 대통령 변호하시던 분입니다. 그중에 1명은 대장동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였어요.

민정수석실까지 보고됐다는데 대통령께 보고가 안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아니, 이 사건의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실에 어쨌든 항소했다, 안했다 그 보고 여부는 제가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거와 관련해 갖고 대통령실과 의논해 갖고 한 바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배준영 위원** 7400억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이번 항소 포기의 가장 큰 쟁점은 전체 추정액 중 473억을 뺀 나머지 금액 약 7400억인데 이거 사실상 받기 힘들어졌습니다.

성공한 재판 맞습니까, 장관님?

(한병도 위원장, 박형수 간사와 사회교대)

○**법무부장관 정성호** 이게 7400억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사건 수사나 기소가 문제 있었던 게 이게 3년 정도 수사한, 4년 가까운 기소가 있었습니다. 핵심적인 게 대장동의 피고인들이, 그 혐의자들이 어떤 수익을 얻었는지에 집중된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데 집중했던 겁니다. 그래서 범죄피해액, 배임수재액에 대한 수사가 좀 부족했고 법원에서도 그런 면에서 입증이 부족하다, 불명확하다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7000억이 넘는다는 주장도 그냥 검찰의 주장이었던 거고요.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걸 입증하려고 최선을 다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것이 그동안 4년에 걸친 수사·기소에도 불구하고 입증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무죄된 거고.

다만 제 입장에서는 범죄자들이 수익을 가져가는 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2000억 정도가 추정 보전돼 있고 성남도시공사에서 지금 소송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이 있기 때문에 이게 특정법이 적용 안 된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다시 입증을 해 가지고 범죄피해액이 민사소송에서라도 저희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배준영 위원** 민사소송 통해서 받으시면 된다고 그랬는데 법조인으로서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형사판결이 확정돼야지 민사 손해배상소송도 맞물린다는 것 잘 아시잖아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렇지 않습니다.

○**배준영 위원** 민사소송에서는 손해액 입증책임이 피해자한테 있지요? 그래서 형사에서 확정되고 국고 환수하고 이를 민사 피해당사자한테 돌려주는 것이 피해구제를 가장 신속하게 정확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아니, 1심 판결이 그대로 항소심에서 뒤집어진다는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건요.

○**배준영 위원** 지금 성남도시공사가 5억 1000만 원을 청구했는데 이게 13개월째 멈춰 있습니다. 공사 측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 금액이 사업 전반에서 추정되는 전체 손해액을 반영한 것은 아니며 향후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서 청구액을 확정할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공사에서는요 이 사업 관련해서 약 4895억 원 규모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검찰 기소의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도 형사재판에서 확정되어야지 이걸 받는 겁니다.

제가 좀 안 됐지만 옛날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추정 관련해서 얘기하겠습니다. 형사소송에서 2205억 원을 추정했는데 돌아가신 후에도 956억 원이 남았습니다. 추정업무만 지금 28년째 하고 있어요. 고인한테도 받고 있습니다. 이것 어디서 하는지 아세요? 서울중앙지검에서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추정한다는 원칙이 왜 대장동 앞에 서는 멈췄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배준영 위원** 참고로 전두환 대통령 추정사건 관련 1심, 2심, 3심, 최종심 모두 다 추정금은 2205억 원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왜 항소하고 상고했는지 아세요? 검찰이 한 이유는 법리 및 공범관계 일부 정리가 필요해서 그래서 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7800억 중에 400억밖에 인정 못 받았는데 항소하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아니, 뭐 저는 그렇습니다.

○**배준영 위원** 노태우 대통령 말씀드릴게요.

관련된 2628억 원도 마찬가지로 추정액은 1심, 2심, 3심 다 똑같았어요. 그런데 검찰은 항소하고 상고했습니다. 그때 검찰하고 지금 검찰하고 다릅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래서 그 사건이 달라진 바가 있습니까? 달라진 바 없습니다.

○**배준영 위원** 지금 서울중앙지검하고 다릅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아니, 1심에서 그렇게 판결이 났다고 해서 1심 법원 판결은 전부

잘못된 거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형사사건에 있어서의 증거의 증명력하고 민사소송이 다릅니다. 형사소송이 엄격하기 때문에 바로 그대로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전두환·노태우 대통령하고 다른 게 이미 민사소송이 돼 있고요. 일부 그 2000억 검찰에서 추정 보전한 부분에 대해서 가압류를 또 해야 됩니다.

다른 부분에 관련해서 거기에 차질이 없게 저희들도 항소심에서 더 엄밀하게 사실을 입증하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왜 이재명 정부가 하룻밤에 우리 국고 7400억을 날렸는지 우리 국민들은 궁금하게 생각할 겁니다.

이재명 정부가 지금……

○법무부장관 정성호 아니, 1심 판결이 전면적으로 잘못됐다는 전제로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배준영 위원 잠깐만요.

장관님, 이재명 정부가 지금 국유재산 헐값 관련해서 매각을 다시 되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세를 하려고 노력하고 계시고 세금도 확보한다고 몇백 명씩 뽑아 가지고 수백억 원 되는, 세금환수특별기동대인가요 이런 것도 만들어 가지고 세금을 더 확보 하려고 하고 있고 혈세도 지금 짜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7400억을 하룻밤에 그렇게 안 받겠다고 날리는 게 이재명 정부가 할 일이냐는 말입니다.

(박형수 간사, 한병도 위원장과 사회교대)

○법무부장관 정성호 아니, 법원 판결에 의한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무죄 부분 관련해서 저희들이 입증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특히 범죄수익에 관련해서 부족한 부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공소유지를 해야 됩니다, 왜 무죄가 났는지 저희들 밝혀 가지고요. 그것은 무죄 여부와는 관계없습니다. 성남도시공사에서 범죄수익 환수에 차질이 없게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형사소송에서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473억보다 더 받을 수 있습니까, 항소심에서?

○법무부장관 정성호 항소심에서 몰수·추징은 이게 필요한 몰수·추징 부분이 아닙니다.

○배준영 위원 아니, 제가 여쭙본 것만 대답해 주세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물론 부패재산법에 의해서 몰수·추징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원칙은.

○배준영 위원 2심, 3심을 통해 가지고 473억보다 더 받으실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몰수·추징 선고가 더 나올 수는 없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게 범죄수익의 환수입니다. 그거는 어쨌든 민사소송에서 저희들이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여기서 판결이 어떻게 나든 간에 관계없이 이미 피고인들이 중형 선고받았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일선 청에서 판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배준영 위원 장관님, 이 결정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는 국고 손실에 따른 배임죄로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될 거라는 게 국민적인 판단이고 이번 여론조사라든지 심지어

는 한겨레신문 사설에서도 항소 포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이렇게 이론을 펼쳤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 범죄자의 불법수익 7400억을 이재명 정부가 째짜미해서 범죄자들에게 안겨 줬다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업 당시 헐값에 땅을 수용당하고 집에서 내몰린 많은 사람들 보기가 부끄럽지도 않은가 이렇게 얘기가 팽배하고 있어요.

중앙지검장이 사퇴했습니다. 이제 검찰총장직무대행도 사퇴 압력을 받고 있어요.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검사장급 이상 대부분이 검찰총장직무대행에게 사퇴를 촉구하거나 잘못됨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 검사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줌도 안 되는 친윤 정치검사들의 쿠데타적인 항명’이라고 했는데 장관님은 동의하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저는 이런 개별 사건의 항소 여부와 관련해 가지고 검사장들이 집단적으로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 중대한 사건도 많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내란 비상계엄의 수괴로 재판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야말로 관행에 완전히 어긋나게 구속 취소됐는데도 한마디도 안 했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부분은, 항소 여부는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일선에서 그런 의견이 있다고 하면 저는 내부적으로 해야 될 문제지 집단적으로 의사 표시하는 것은 검찰 발전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배준영 위원 원내대표의 의견에 동의하신다는 말씀으로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또 여쭙보겠는데 1심 재판부는 김만배 씨 428억 원 뇌물 약속 혐의에 대해서 배임의 범죄수익을 분배한 것에 불과해서 별도로 뇌물죄는 구성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죄로 판단했지요? 그런데 업자와 공무원이 결탁해서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나눠 갖는데도 뇌물이 아니라는 이 판결에 대해서 검찰이 왜 안 다룹니까? 다루지 않는다면 향후 공무원들의 부패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법리가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하고 업자가 있는데 뇌물로 주고받으면 처벌을 받는데 너무 친해서 너무 경제공동체가 돼서 수익을 분배한다고 해 가지고 공동체니까 뇌물이 성립 안 된다는 이게 항소를 안 하셔 가지고 법리로 굳어지고 판례로 굳어지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앞으로 업자들하고 공직자들하고 서로 법망에서 벗어나려고 그러면 뇌물로 주고받는 게 아니고 ‘그냥 아예 우리 경제공동체로 똘똘 뭉쳐 가지고 수익을 나눴시다’ 그러면 처벌 안 받지 않습니까? 이런 판결에 대해서도 성공한 재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법무부장관 정성호 너무 그렇게 일반화시킬 수 없는 사안이고요. 법원 판결 내용에서도 이것은 뇌물이라기보다는 사전에 둘이 공모해 가지고 수익을 취한 것이기 때문에 배임죄에 포섭되는 부분이다. 배임죄에 포함됐기 때문에 별개로 뇌물죄로 선고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게 죄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배준영 위원 장관님, 제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굉장히 답답함을 느낍니다.

장관님은 대한민국 검찰의 인사권을 행사하시고 재정적으로 서포트할 수 있는 최고 책임자신데 검찰과 법무부는 다르고 이재명 정부에 검찰이 항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

든 사태가 있다라는 그런 핑계로 돌리시는 것 같아서 좀 가슴이 아프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장관님, 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셔야 된다는 국민적인 여론이 있고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가 어쨌든 정치적인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이게 검찰이 처리한 수많은 사건의 일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 정권하에서 일종의 정치 보복적인 수사 하나 때문에 장관이 이걸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할 일은 검찰 개별 사건의 당부를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법무부에서 하는 일은 다른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배준영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갑의 정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욱 위원** 광주 동·남갑 국회의원 정진욱입니다.

정성호 장관님, 7400억 원이 무조건 국고에 귀속돼야 되는 돈이었는데 귀속이 안 된 겁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방식대로라면 어떤 사건의 대상이 되는 돈의 금액이 나오면 그 돈이 어떤 판결이 나오든 무조건 국고에 귀속돼야 되는 겁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렇진 않습니다.

○**정진욱 위원** 그 7400억 원에 대해서 다시 좀 더 말씀해 주시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어쨌든 검찰의 공소 내용이긴 한데 이게 저는 그렇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이게 명확하게 확정된, 그 당시 배임죄가 성립될 때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정진욱 위원** 우리 국민을 여러 가지로 호도했던 사건이 대장동 사건인데 지금 국민의힘의 주장도 그 연장에 있습니다. 표적수사, 조작수사로 일관했던 사건이 본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자 친윤 라인 검찰 전체가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똑같이 반발하고 있는데요.

장관님, 검찰의 항소 포기 사례가 전에도 있었지요? 얼마든지 있는 일이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무죄가 나 갖고서 항소 포기한 사례는 적지 않게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도 국민의힘의 당대표인 장동혁 의원에 관련해서도 공직선거법에서 1심에서 100% 무죄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나 항소하지 않았습시다.

○**정진욱 위원** 장동혁 의원도 그렇게 했고요. 장동혁 의원의 무죄가 나왔을 때 검찰이 그렇게 했고 지난달에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 선고받았을 때 검찰 항소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항소 포기를 검찰이 수시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검사장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친윤 라인의 조직적 반발이고 결국은 정치검찰을 반드시 걸러 내야만 검찰이 바로 설 수 있다 그리고 정치수사, 조작수사 해도 된다고 믿고 오랫동안 그렇게 해 온 검사들이 검찰에 있으면 안 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사건이다, 그래서 검찰청 해체의 정당성만 보여 주고 있다고 봅니다.

김건희 명품백,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무혐의라고 했을 때 공개적으로 항의한 검사

얼마나 있었습니까? 검찰개혁 후에 언젠가 검찰이 돌아올 수 있도록 보완수사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직적 반발이라면 꿈 깨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 검찰의 항소포기를 검찰 스스로 과거의 정치수사, 조작수사, 표적수사 또 피의사실 공표 관행 같은 것을 끊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검찰이 성찰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봅니다.

12·3 계엄에 흔들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었듯이 정치검사들의 망언과 망동에 흔들릴 국민이 없다는 것, 12·3 계엄이 대한국민에 의해 진압됐듯이 정치검사들의 조직적 반발과 망동도 국민들에 의해서 저는 진압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장님 계신가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나와 있습니다.

○정진욱 위원 지난 9월 3일 김건희 씨가 종묘 망묘루에서 사적인 차담회 가진 사실 알고 계시지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정진욱 위원 이렇게 사적 차담회 앞두고 대통령경호처의 지시로 차담회 당일 CCTV를 켜셨습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녹화를……

○정진욱 위원 CCTV가 문화유산 지키는 아주 기본 안전장치인데 이렇게 주요 인사 방문 시에 녹화 중단한 사례가 있을까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지금까지 없습니다.

○정진욱 위원 그렇지요?

물론 궁이나 능을 관람할 때도 국가유산청장 또 궁능유적본부장 허가 이런 게 있어야 하고 또 국가원수 등의 공식 일정 아니면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지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그렇습니다.

○정진욱 위원 그렇게 김건희 씨 또 남편 윤석열 대통령 함께 경복궁 근정전 방문했을 때 임금 어좌에 착석하고 일반인 출입이 금지된 경회루, 덕수궁 석조전, 국립고궁박물관 제2수장고 내부까지 무단 방문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유산 훼손이 윤석열, 김건희에서 그쳐야 하는데 이번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금 또 같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종묘 인근 지역에 대해서 오 시장이 초고층빌딩을 개발하면서 종묘를 또다시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가유산을 사적으로 함부로 이용하고 훼손하는 것이 본업입니까? 서울시는 종묘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때 유네스코와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가 종묘의 시야와 주변 경관은 제례의식의 공간적 연속성을 이루는 핵심 요소이므로 건축물의 높이와 배치를 제한해서 시각적 조화를 유지한다고 권고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은 지방선거용 급조 치적 쌓기, 대권놀이를 위해서 서울의 안전과 문화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렇게 유네스코 권고도 무시하고 지방정부가 일방적 개발 논리로 국가유산을 훼손할 때 국민적 심판을 받아야 할 텐데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저희 국가유산청에서 2006년부터 거의 최근까지 서울시와 계속 협의해 가면서 거기에 대한, 경관에 대해서 유네스코가 권고하고 요청한 것에 대해서 협

의했고 그렇게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 갑자기 조례를 바꾸고 그런 여러 가지 행위를 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간단합니다. 지금이라도 유네스코가 권고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으면 됩니다.

○정진욱 위원 그렇군요.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을 네 번이나 했는데 한 게 뭐가 있냐, 이걸 지금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 획기적인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강버스 하고 있는데요. 한강버스 사고 내용을 국감에서 숨겼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밝혀진 게 16건의 크고 작은 사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을 넘어서서 도시개발을 통해서 세계문화유산을 훼손하는 것, 그런데 훼손하면서 오 시장이 내놓은 논리가 종묘가 있는데 초고층빌딩이 있으면 더 돋보인다 이런 논리거든요. 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세운상가 주변에는 아직도 지금 저층들도 많고요. 여러 가지로 유산들도 있고 우리지역이라든가 서울시 유산도 많고요. 또 거기에 북촌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름다운 경관과 전통이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 경복궁이라든가 창덕궁, 종묘 옆에는 세계인들이 지금도 수백만 명 몰려오는 그런 곳입니다. 이런 곳의 앞에다가, 그것도 바로 180도 길만 건너면, 종묘 길 건너면 되는 바로 앞에다가 40층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이것은 아닙니다.

○정진욱 위원 종묘는 조선왕조와 대한제국의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국가 사당 아니겠습니까? 종묘의 어떤 장엄함, 신성함은 주변의 창덕궁, 창경궁 등 전통공간과의 경관이 함께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완성이 되고 또 그 아름다움이 더 높아진다고 봅니다.

정말 한 사람의 어떤 정치적 야욕에 의해서 앞으로 수백수천 년을 갈 우리의 세계적인 문화유산이 훼손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문체부장관님 계신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정진욱 위원 광주는 오랫동안 문화수도로 불려 왔고 2014년에는 유네스코가 인정한 국내 유일의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로 선정됐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알고 있습니다.

○정진욱 위원 그런데 지금 광주시민들은 광주가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냐 또 문화수도냐 이걸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련 활동이나 예산이 지금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활동하는 미디어아트 미술 작가들은 AI가 새롭게 나오면서 본인들의 어떤 미술 작업에 AI를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그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굉장히 고심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마땅히 가르쳐 줄 곳이 없는데 마침 광주미디어아트센터에서 디지털아트 킬처랩이라는 이름으로 AI와 미디어아트를 결합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서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K-드라마, 케이팝이 있다면 K-미디어아트도 사실은 세계적 수준입니다. 이이남 작가 잘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정진욱 위원 그래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한데, 디지털아트 컬처랩 구축 운영 사업비에 대한 예산 지원이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꼭 장관님께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주 남구 송암산단과 호천역 일대에 콘텐츠 특화 문화산업단지 구축을 지원하는 콘텐츠스퀘어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문화수도 광주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마련된 사업인데 앞의 사업과 마찬가지로 전혀 내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우리 미술인들의 또 예술가들의 절실한 요구가 있는 이 두 사업 예산 확보하고 사업 진행 연속성 있도록 챙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외교부장관님이 나오셨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차관입니다.

○정진욱 위원 박윤주 차관님.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그렇습니다.

○정진욱 위원 지난 1987년 11월 29일 발생한 대한항공 KAL 858기 폭파사건 알고 계시지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그렇습니다.

○정진욱 위원 우리 국민 115명이 희생된 비극인데요. 아직 진상규명도 안 되어 있고 또 유해 수습도 전혀 안 되어 있는 국가적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당시 탑승객들이 어떤 분들인지 알고 계시지요? 가족을 위해서 떠나면 타지로 일하러 떠난 중동 근로자였습니다. 중동 근로자였기 때문에 진상규명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 탄 분들이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힘 있는 분들이었다면 이렇게까지 외면받고 소외될 수 있었을까 싶습니다.

지난 9월 1일 제가 예결위 결산심사 때 질의했었는데요. 대구MBC가 2020년에 미얀마 안다만 해역의 바다를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KAL 858기 잔해로 추정되는 동체가 고스란히 남아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이후에 국회와 외교부가 협의해서 정부합동조사단 파견 계획을 수립했고요. 그리고 관련 예산까지 배정했던 사실 알고 계십니까?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정진욱 위원 그런데 2021년에 미얀마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이게 다 사업 진행이 멈췄지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정진욱 위원 다행히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 KAL 858기 추정 동체의 수색 의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진상 파악에 나설 것을 시사하셨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KAL 858기 유가족들과 만났는데요. 유가족들은 대한민국정부가 KAL 858기 희생자들을 잊지 말아 달라 그리고 동체 수색에 나서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차관님, 여기서 더 미루면 저는 직무유기라고 보거든요. 외교부가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위원님이 저보다 더 사안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2021년 초에 저희가 조사단을 파견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2월 달에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서 상당히 정정이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었습

니다. 그래서 파견단이 가지를 못했고 그 이후에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 민병대와 군부간의 내전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전 자체가 사실은 조사단 파견 자체의 상당한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12월 말부터 미얀마 내부에 총선이 예정되어 있어서 또 이런 상황 자체가 저희 조사단 파견을 조금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는 상황을 잘 살피면서……

○정진욱 위원 그렇지요. 내전도 있고 또 거기의 어떤 정치 정세도 있는데 미얀마 정부와는 접촉하셨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저희는 지금 이 상황 자체를, 어떻게든 파견단을 빨리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진욱 위원 아니, 파견단을 보내는 것과 별개로 미얀마 정부하고는 소통하고 있느냐고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저희가 일단 상세한 말씀은 좀 드리기 어려운데 어떻게든 지금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진욱 위원 방법 중의 또 하나는 태국 푸껫 쪽에서 해상으로 들어가서 해상에서 입국하는 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그 방법도 알고 계시지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에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저희 국민이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근로자였기 때문에 어떤 차별을 두는 그런 의식은 전혀 없습니다. 최대한 빨리 이 문제의 사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정정이라든가 상황 판단을 해서 파견단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욱 위원 그 안에 있는 동체가, 대구MBC가 취재한 화면을 보면 원래 7, 8번 사이에 폭탄을 설치하고 나왔다고 했기 때문에 김현희의 증언대로라면 산산조각이 나서 동체 자체가 사라져야 됩니다. 그런데 동체가 그대로 고스란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진실규명 차원에서도 또 저는 추측하기로는 피해자들이 그 동체 안에 고스란히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걸 지금 우리 유가족들이 바라봤을 때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동안 우리 정부 또 외교부가 너무 무심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적극적인 동체 수색을 위한 준비에 나서시기를 바랍니다.

재외동포청장님, 계십니까?

○재외동포청장 김경협 예.

○정진욱 위원 김경협 청장님, 재외동포청이 생긴 지 지금 2년 5개월 됐지요?

○재외동포청장 김경협 예, 그렇습니다.

○정진욱 위원 약 86만 명의 국내 체류 동포도 마찬가지로 관리하고 있지요?

○재외동포청장 김경협 지금 법의 목적에 국내 체류 동포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지원체계나 조직체계가 안 갖춰져 있습니다.

○정진욱 위원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재외동포청장 김경협 그래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진욱 위원 저도 이번에 조사하면서, 재외동포청에서 해외에 체류하는 우리 동포에 대해서만 재외동포청이 책임을 맡고 있는 줄 알았는데 또 국내에 체류하는 동포도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보니까 전체 재외동포청 예산에서 국내 체류 동포 지원 관련 예산이 단 1%데요. 딱

10억 원에 불과하다는 걸 봤습니다. 86만 명 기준으로 보면 1160원, 실제로 사업을 하기가 어렵게 돼 있지요?

○재외동포청장 김경협 그냥 임시조직 정도로 운영하고 있는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진욱 위원 청 내 임시조직에 다섯 분의 직원이 있고 사실상 어렵다고 보는데, 국내 체류 동포 지원국 같은 걸 신설하고 예산 비중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재외동포청장 김경협 예, 정말 시급히 필요합니다. 국내 귀환 동포 정착 지원을 위한 조직체계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지금 그 조직이 없어서 임시 TF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걸맞은 예산도 확보가 필요한데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진욱 위원 기재부차관님.

○기획재정부예산실장 유병서 예산실장입니다.

○정진욱 위원 국내 체류 동포 대부분이 계속 한국에 살고 싶다, 한 70% 정도가 본인이 거의 한국인이라고 느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그분들 대부분은 계속 한국에 살 분들입니다. 결국은 사실상 우리 국민인데……

그러나 우리 국민으로 편입했을 때 어떤 여러 가지 재정 부담이 있지 않을까, 86만 명이나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재외동포 수준에서라도 이분들에 대한 어떤 통합정책 내지는 지원정책 또 관리정책을 재외동포청이 제대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에 따르는 적절한 예산 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획재정부예산실장 유병서 예, 예결위 소위 과정에서 잘 논의해 보겠습니다.

○정진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힘 울산 울주의 서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범수 위원 울산 울주군 출신 서범수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임은정 검사장이 검찰개혁을 방해하는 주요 인사로서 검찰개혁 5적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봉욱 민정수석, 이진수 법무부차관,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노만석 대검 차장, 김수홍 법무부 검찰과장 이 사람들이 법무부장관과 대통령을 포획해서 검찰개혁을 방해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무부장관님, 그때 불편한 심기를 노출하셨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바로는 크게 그때 말씀 안 했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래서 그때 보니까 임은정 검사장이 사람은 보기는 봤으나 좀 제대로 잘 못 본 것 같다.

오히려 법무부장관님을 비롯해서 이진수 법무부차관, 노만석 대검 차장 이런 분들은 검찰 개혁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오히려 검찰을 빨리 해체시키려고 하는 주요 인사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법무부장관님, 거기에 대한 생각이 저하고는 다르시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저는 여러 차례 사실은 저희 지지자나 당의 일부에서 비판을 받았는데요. 검찰 해체라기보다도 검찰이 그동안 갖고 있던 수사·기소권들, 전 이걸 좀 분할해 갖고 권한의 오용·남용을 막자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서범수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렇지 않아도 시한부 목숨인 검찰을 법무부장관님이 필두로 아예 현시점으로 공중분해시키려고 하는 분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서 도대체 진실이 뭘니까? 말씀하시는 분마다 이야기가 다릅니다. 대검 차장이 하는 이야기도 다르고요. 대검 차장이 또 왜 법무부와 대통령실 관계를 고려했다, 요즘 검찰이 대통령실과 법무부 관계를 고려하는 그런 검찰입니까? 그렇게 정무적으로 판단을 하는 검찰입니까? 그리고 사의를 표명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도 또 이상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서울중앙지검은 의견이 달랐다. 그리고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했다.

외교부차관님 나오셨습니까?

우리 법안소위 심사할 때 행정부에서 법안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사안입니다’라고 하면 그거는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까?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그거는……

○**서범수 위원** 법안소위 때는 보면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라는 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입니다. 법무부장관님이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소리는 결국 하지 말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검사들이 여러 가지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검찰 자체적으로 이걸 판단해서 결정했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또한 법무부장관님 혼자 독자적으로 결정했다고도 보지 않고요. 더 보이지 않는 뒷선이 있다라고 많은 국민들께서 생각을 하십니다.

특히 다른 거는 몰라도 78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범죄자 일당에게 도로 돌려주는 그런 결정을 하셨단 말입니다.

여가부장관님, 나오셨나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서범수 위원** 우리 내년에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총 얼마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6000억이거든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서범수 위원** 그만큼 7800억이라는 돈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 돈이 있으면 대한민국 부모들이 좀 더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돈을 왜 범죄자 일당에게 돌려줘야 되는지 국민들은 그게 제일 묻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공수처장님,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비리를 수사하는 기관이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서범수 위원**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 공수처에서 수사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지

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지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타 기관의 결정에 대해서 논평하는 거는 좀 어렵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수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지금……

○**서범수 위원** 공수처가 왜 있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고발장 접수된다는 보도를 봤는데요. 만일 들어온다면 저희들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이건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공수처의 존재 이유가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공수처가 꿈쩍도 안 하고 있거든요. 이러니까 공수처를 자꾸 없애자, 폐지하자, 있으나 마나 한 조직에 왜 예산을 넣느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존재의 가치를 좀 보여 주세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고발장 접수된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접수되면 저희들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꼭 고발장이 접수가 돼야 됩니까? 왜 인지를 안 하십니까? 인지 사건으로 수사하시면 되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서범수 위원** 하실 겁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그런 부분 저희들 고발장 접수되면 검토하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총리실 나오셨습니까?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1차장 나와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총리실 주관으로 헌법준중 정부혁신 TF 만든다면서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예.

○**서범수 위원** 이 목적이 뭐니까?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저희가 내란이 1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언론이나 국회에서도 조금 공직사회 정리……

○**서범수 위원** 공직사회를 어떻게 정리하자는 겁니까?

저는 어떤 말로 포장하더라도 이것은 정치보복 TF고 이재명판 블랙리스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2의 적폐청산 아니냐, 제2의 적폐청산. 정부 출범 5개월이 지나도록 특검 등에서 별 효과가, 별 성과가 없으니까 직접 칼을 빼 든 것이다. 그리고 이게 과거 적폐청산과 뭐가 다른니까? 행정부판 정치보복이다.

그리고 정권 초기에 겁박을 통해서 공무원 군기 잡기, 줄 세우기 아니냐. 입법부도 장악하고 사법부도 겁박하고, 그런데 행정부도 지금 못 믿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서범수 위원** 그런 이야기가 왜…… 저한테는 그렇게 들리거든요. 정말 일당독재로 가는 길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것 총리실에서 주관하는 거지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좀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그런 관련한 공직자들이 승진명부에 들어 있다는 지 내부에서조차도 그런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에……

○서범수 위원 결국은 남의 편 숨아 내고 내 편 잘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 이야기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짧은 기간 동안 신속하게 정리를 해서……

○서범수 위원 그런 식으로 공직사회가 지금 바짝 긴장을 하고 있거든요. 왜 공무원 사회를 갈라치기를 합니까, 네 편 내 편으로?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갈라치기보다는 빠른 시일 내 조치를 해서 민생과 경제 성장에 빨리 저희 정부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서범수 위원 뭐가 지금 행정부가 잘 안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아닙니다.

○서범수 위원 그런데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지금 1년 지난 시점에서 이게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확실하게 짧은 시간에 정리를 하고 가자 그런 취지입니다.

○서범수 위원 그 부작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작용을.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최대한 부작용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다음, 경찰청에서는 누가 나오셨습니까?

○경찰청기획조정관 손제한 기획조정관이 나와 있습니다. 청장직무대행은 행안위 참석 중입니다.

○서범수 위원 APEC 행사 치른다고 고생하셨는데요. 겉으로는 경호나 경비에 큰 사고, 안전사고가 없어서 성공했다고 자평을 하시지요?

○경찰청기획조정관 손제한 예, 최선을 다했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런데 왜 동원된 경찰관들은 저렇게 화가 날까요? 제가 예결위 오기 전에 국회 앞에서 경찰직장협의회 사람들이 사진전 하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엄청나게 열이 받아 있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찰관을 이렇게 푸대접해도 되느냐 이거지요.

1년 동안 준비를 했다면서요? 경찰청 APEC 기획단도 만들고 모든 준비를 했다면서요?

○경찰청기획조정관 손제한 위원님 말씀대로 동시에 대규모 인원이 동원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서범수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10월 21일 날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80년간 일궈 낸 눈부신 성취의 바탕에는 경찰관들의 희생과 헌신이 자리하고 있었다. 국민주권정부의 경찰관 한 명 한 명이 국가이자 정부라는 마음가짐으로 사명감을 다해 달라’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결국 경찰관 한 사람 한 사람이 국격이다 이야기이지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지요?

○경찰청기획조정관 손제한 예, 그렇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런데 대한민국 국격이 이 정도 수준입니까? 사진 한번 보십시오. 숙소입니다.

다음.

저게 뭘니까, 도대체?

기획조정실장은 저기 가 봤어요?

○**경찰청기획조정관 손제한** 저는 현장에 가지는 못했습니다.

○**서범수 위원** 다음.

저런 러브모텔에 재웁니다. 이라고도 지금 경찰에서는 APEC 행사 잘 치렀다고 자평을 합니까?

유 대행도 7월 30일 날 갔다 왔고요, 김민석 총리도 아마 여섯 번인가 갔다 오셨다 하대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열 번 다녀오셨습니다.

○**서범수 위원** 열 번이요?

열 번 가서서 뭐 했습니까? 그때 드러난 것만 보셨어요? 왜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저런 것조차도 점검을 안 해 주십니까? 열 번 가면 뭐 합니까, 열 번 가면.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총리께서도 점검하실 때 경찰이나 소방이 예산 문제로 저런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를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서범수 위원** 지시하면 뭐 합니까, 안 따르는데 지금.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그래서……

○**서범수 위원** 행안부, 행안부장관 나오셨습니까?

안전본부장님, 행안부장관도 갔다 오셨다면서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예, 다녀오셨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래서 다들 뭐 보고 오셨어요, 가서 가지고? 꼭 몇 년 전의 잼버리 사태랑 비슷합니다. 책임을 통감해야 될 것 아닙니까, 책임을.

실제로 이 부분이 예산이 부족해서 저렇습니까, 아니면 준비하는 사람들이 부실하게 준비해서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님?

○**경찰청기획조정관 손제한** 위원님, 숙소는 경주뿐만 아니라 포항·울산·대구 등에 한 1만 개 정도의 객실을 확보했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런데 왜 저런 모양이 납니까? 왜?

○**경찰청기획조정관 손제한** 실내 대기 장소가 부족하다 보니 생겼던 문제인데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보완책을 마련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어떻게, 한 번 지나간 것을 저것 어떻게 보완을 해요?

여기에 있는 국무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내 아들딸이 공무수행을 하기 위해서 갔는데 저런 푸대접을 받았다, 어떻게 생각이 되시겠습니까? 핑계 없는 무덤이 없고요. 군에서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국방부장관님,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되나 보급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될 수 없다’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서범수 위원** 명확하게 저것은 보급에 실패한 겁니다. 그런데 경찰청에서는 그냥 유감의 표시만 하고 ‘다음에 잘할게요’ 이런 식으로 지나갑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경찰관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거고요. 그러한 경찰관을 지켜 줘야 되는 게 국가고 정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찰청기획조정관 손제한 그렇습니다, 위원님.

○서범수 위원 과거에 경찰에서 이런,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위해서’라는 구호가 있었습니 다. 한 20년, 15년 전쯤 됩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은 뭐냐 하면 ‘아니, 내가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받아 봐야 국민들한테 어떤 최상의 서비스를 할 것인가를 알 건데 내 자신이 최상의 서비스를 한 번도 받아 본 적이 없는데 국민들한테 어떻게 최상의 서 비스를 제공할 것이냐’.

지금 마찬가지로요. 현장에 있는 경찰관한테만 친절하게 해라, 정확하게 해라, 공정하 게 해라, 정말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줘서, 드려서 신뢰를 확보해라라고 하지 만 내 자신이, 현장에 있는 경찰관 한 사람 한 사람 자체가 이런 푸대접을 받으면 결국 그게 국민들에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국민들만 피해를 본다구요, 국민들만. 그런데도 지 금 경찰 지휘부든지 우리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합니다.

행안부에서 오셨지요, 차관님?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예.

○서범수 위원 이것 경찰청에만 맡겨 놓을 겁니까?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저희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행안부에서 직무감사를 해 보세요. 직무감사를 하셔서 정말로 뭐가 잘못 됐는지, 예산이 문제였는지 아니면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해서 일인당 숙박료 7만 원, 식 비 8000원·1만 원 이런 규정이 과연 지금 현시점에 우리 대한민국 공무원들한테 맞는 규 정인지도 한번 보셔야 될 거고요.

두 번째, 실제로 어떻게 집행을 하고 어떻게 했기에 그 동원된, 1만 명이 넘는 직원들 이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느냐.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예, 저희 경찰청하고 협조해서 경위를 한번 과 약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진짜 이것은, 기재부도 나오셨고 다들 나오셨는데 이것은 경찰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복지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다들 써 주 셔야 됩니다. 특히 제복 부서인 경찰, 군인 그리고 소방에 대해서는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해서 이분들이 정말로 ‘아, 내가 공직자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만큼, 거기에 합당한 대우 를 받고 내가 좀 더 국민들에게 봉사를 해야 되겠다’는 경각심 내지는 만족감을 가질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경찰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도 나서야 되겠지만 같이해서 다시는 이 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책임 있는 사람이 나와서 반성도 하고 잘못됐다는 이야기도 하 고, 그냥 통 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통 치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찰청기획조정관 손제한 예, 위원님 지적 유념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어제 제가 금융위원장 나왔을 때 ‘민중기 특검에 대한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에 대해서 금융위원회에서 조사를 잘해 주세요’ 하니 금융위원회에서는 ‘지 금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수사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경찰에서 합니까?

○경찰청기획조정관 손제한 예, 경찰에서 하고 있는……

○서범수 위원 경찰 어디서 합니까?

○경찰청기획조정관 손제한 구체적인 수사기관은 제가 확인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이게 아마 종로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일선서에 맡기지 마시고 서울청이든지 국수본에 직장을 하세요. 이 부분을 왜 종로서로 넘기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지요?

○경찰청기획조정관 손제한 국수본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다음에 이춘석 의원 건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경찰청기획조정관 손제한 그것은 서울청 광수단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공수처장님, 또 말씀을 드려야……

공수처에서 이것 안 보십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공수처는 그냥 고소 고발만 기다리면서 하늘만 쳐다보는 기관입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물론 고위공직자의 뇌물 범죄라든지 이런 부분,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는 저희들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지금 이 부분 관련해서는 주식거래가 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범수 위원 실제로 공수처에서 뭘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들이 없어요. 고소 고발 접수 수사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수처라는 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유념해서 저희들 고위공직자 범죄가 있는지 항상 그런 부분 살펴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갑 김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원 위원 법무부장관님, 지금 대장동 건에 대한 항소 문제로 국민의힘에서 여러 가지 공격을 하는데 저는 대장동 건 하면 가장 먼저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분들이 생각입니다.

대장동 건 사업자들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1400억 원을 대출을 받아서 이 땅에다가 예컨대 계약금을 걸고 그 증거로 근저당권 설정을 했지요. 그런데 이 사업이 또 부산저축은행이 부실대출로 망가졌을 때, 그때 부실대출이라든가 불법대출에 대한 수사가 대검중수부에서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때 담당자가 혹시 누구인지 아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 당시 대검의 과장이 윤석열 대통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원 위원** 예, 윤석열 씨잖아요.

윤석열 씨가 저축은행 모든 비리에 대해서 다 수사를 했으면서도 이 대장동 건만은 비켜 나갑니다. 그 녹취록에 보면 가서 윤석열 씨를 만나서 커피 한 잔 하고 오면 된다고 든가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녹취록이 당시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때 윤석열 과장이 제대로 수사를 해서 이 불법대출, 부실대출…… 또 이게 커미션까지 들어간 대출 아니겠습니까? 부산저축은행 실질적인 오너의 친인척인 조우형한테 20억, 20억 돈을 줘서 1000억이 넘는 대출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 대출을 받은 민간 사업자가 그것으로 비자금을 만들어서 여기저기 썼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대출금을 갚지 못했을 때 윤석열이가, 대검 중수부가 제대로 수사를 했으면 민간업자로부터 권리를 다시 뺏아서 저축은행 피해자, 부산 분들에게 돌려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그 민간업자, 처음에는 이강길 씨였지요. 이강길 씨로부터 남옥이라든가 정민용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그 권리가 넘어가서 대장동 건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씨 당시의 이 불법행위는, 범죄행위는 특가법상의 특수직무유기죄에 해당합니다. 범인이 누구인지 알면서, 혹은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수사를 안 하고 유기를 했을 때 1년 이상 유기징역형에 처할 수 있고 공소시효는 10년 이상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3년 동안은 공소시효가 정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것 수사를 해서 이 대장동 건으로 인한 민간업자들의 불법 수익을 그 당시 저축은행에 예금을 했던 피해자분들에게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정의롭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어쨌든 정확한 사실관계는 다시 파악해 봐야겠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문제가 없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원 위원** 아니, 이것은 윤석열 정권 내내 저희가 주장했던 것이고 대선 전에도 저희가 주장했던 것입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알고 있습니다.

○**김승원 위원** 이것 공소시효가 아직 안 지났다. 그리고 당시 불법 대출한 사람들 범죄를 파헤쳐서 예컨대 기소를 하면 부산저축은행 피해자한테 이 돈을 돌려드릴 수 있다. 지금은 추징을 해도 그분들한테 돌려주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가압류를 해 갖고 불법 수익을 환수하겠다고 지금 법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피해자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아니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도시개발공사 설립하면서 투입한 금액이 아마 1억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마저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공공개발을 하겠다고 몸부림쳤기 때문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이 되어서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이것을 공공개발 하겠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나마 지분의 50%를 갖고 있어 갖고 지금 그 수익을 얻고 있는 구조를 만든 거 아닙니까.

이재명 성남시장이 당시 그대로 했으면 그 수익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다 얻어서 그것을 공공에 썼을 텐데 그때 당시 성남시의회 다수당이었던 국민의힘이 그것에 반대를 했고, 그래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결국에는 타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돼서 결국 이 지경에 이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잘 알고 있는 국민의힘이 지금에 와서 마치 국민

을 위한 척, 7000억이 마치 대장동 업자들에게 다 돌아가는 척, 포기한 척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보고 저는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분노마저 불러일으킵니다.

그전으로 더 돌아가면 이 대장동 건, 원래 LH가 공공개발 하려고 했던 걸 당시 국민의힘 이명박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LH가 민간개발업자와 경쟁하지 말라고 해서 LH가 손을 떼게 하는 명분을 만들어 썼고 또 성남시 그때 국회의원, 국민의힘 신秉秉 그 동생이 업자들에게 억대의 돈을 받아서 신秉秉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위에서 대장동 건에 대해서 LH 손 떼라고 그렇게 공격적인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LH를 포기시켜 갖고 민간업자들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을 대출을 받아서 이 땅에다가 계약금 십어 놓고, 그래서 이게 민간업자의 사업이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관님, 이것 잘 알고 계시잖아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승원 위원** 검찰도 그렇습니다.

이것 제대로 수사를 해서 민간업자와 그다음에 유동규와 정민용이라든가 그들의 불법 카르텔 이 고리를 밝혀내는 데 최선을 했으면 벌써 수사 끝났고 기소했고 재판 판결 나왔고 수익 환수했을 겁니다.

이것을 그냥 이재명 성남시장, 지금 대통령님과 억지로 연결시키려고 376번의 압수수색하고 계속 털고 엮으려다 보니까 사건이 이상하게 돼 갖고 지금 법원에서도 ‘야, 검찰 너희들이 계산한 불법 수익 그거 맞지 않아. 이재명 당시 시장하고 이 업자들하고는 큰 관련이 없어. 관련이 없어’라고 판결문에도 적시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또 별건 수사로 진행하고 있는 FC 건, 대장동 건 또 이번에 무죄 나온 이해충돌 관련 된 청탁금지법, 다 이거 별건 수사하고 압수수색 불법이다라고 해서 증거로 아예 채택도 안 한 거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승원 위원** 증거로도 쓸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해 갖고 무죄 나온 것을 항소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미 수사할 때부터 그렇게 불법 수색, 별건 수사로 인한 수색으로 증거 능력이 다 날아갔는데. 그러면 본인들이 수사를 덮고 과잉 수사하고 인권침해 수사하고 실질적인 뇌물을 받은 유동규는 봐주면서 구형 낮춰 주고 이렇게 수사를 개판으로 만들어 놓고 나서 뭘 지금 항소를 안 한 걸 갖고 이 난리를 치는지 저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질적인 피해는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이 정말 땀 흘려서 번 돈을 묻어 놓은 것, 그것을 불법 대출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왜 윤석열은 그것에 대한 수사를 안 하고 있고 직무유기까지 하면서 대통령까지 되고 이 수사를 아예 원천적으로 막아 놓은 그거부터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수익을 부산저축은행 그 피해자들에게 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점부터 검토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알겠습니다.

○**김승원 위원** 특수직무유기죄 아직 공소시효 살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추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징은 개별 추징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장관님?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김승원 위원 민사적으로 가압류를 걸고 소송을 하면 공동불법행위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승원 위원 어쨌건 국가적인 입장에서는 개별적으로 얼마 얼마를 나누어서 추징하는 것보다 이들을 공동불법행위 책임으로 만들어서 같이 손해배상 책임으로, 불법행위로 환수하는 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거 지금 민사소송 가압류 다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이미 한 2000억 정도에 대해서는 추정보전이 돼 있고요.

○김승원 위원 검찰에서도 2000억 정도 몰수·추징 보전을 이미 해 냈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파악 가능한 모든 재산에 대해서는 몰수·추징 처분이 돼 있습니다, 파악 가능한.

○김승원 위원 그래서 지금 남옥라든가 정영학 등이 그 돈을 빼다 쓸 수 없는 구조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런 상황입니다.

○김승원 위원 다 막아 놓고, 다 잠가 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김승원 위원 그러면 이 형사 판결 혹은 민사소송 판결에 따라서 언제든지 국가가 그걸 환수해서, 그 불법 수익을 다 환수할 수 있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일단 검찰이나 또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대장동 개발 사건의 전체 수익이 다 몰수·추징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중에서 50 대 50으로 나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게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범죄 혐의자들이, 피고인들에게 수익이 가지 않게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미 업무상 배임이 유죄로 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 좀 더, 또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항소심에서도 원심 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중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승원 위원 그렇습니다. 불법 수익은 이미 다 묶여져 있습니다. 가압류건 뭐건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서 다 묶여져 있기 때문에 이런 형사재판, 민사재판을 충실하게 수행하면 되는데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 시장이 신상진 국민의힘 시장이지요. 검찰에서는 2024년도에 이 불법자금의 범위, 배임 액수를 확장을 했는데 성남시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1심 판결 나니까 그때서야 가압류 액수를 확장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성남시에서는 최대한 가압류를 많이 해서 어쨌건 불법 수익이 불법행위자들에게 돌려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놔야 되는데 장관님, 그것까지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김승원 위원 마지막으로, 저는 대장동 건을 보면 항상 비교가 되는 게 엘시티 건인데요. 부산 엘시티, 2조 원이 넘는 사업비가 들어가고 사업자가 수천억 혹은 1조 원의 수익을 얻었다는 것인데 엘시티 건 제대로 된 검찰 수사 일어나지 않았고 결국 그 책임자는 잠깐 구속되었다가 나왔고 또 당시 박근혜정부 정무수석이지요. 뇌물을, 역대 뇌물을 받았음에도 역시 그냥 그것으로 인한 형만 살다 나왔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불법 수

익에 대한 환수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 왔던 것들이 검찰입니다.

이 대장동 건도 호트러진 게 사실 박영수 전 검사장이, 윤석열의 아빠라고 불리는, 멘토라고 불리는 박영수 검사장이 개입을 함으로써 대장동 일당의 불법행위를 싹 봐준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제대로 서야 정의가 살아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사와 기소는 분리가 되어서 이중 체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정책을, 법 제도를 만드는 것이고요.

그래서 장관님께서는 이런 국민의힘의 비난에 연연하지 마시고 평소 업무대로, 신조대로 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저희도 하여튼 대장동 피고인들이 1심 판결대로 또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고요. 또 걱정하시는 범죄수익 환수 관련해 갖고 항소심에서도 필요한 자료를 더 적극적으로 내겠습니다.

○**김승원 위원** 다음은 행안부장관님 혹시 나오셨나요? 행안부에서……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예, 행안부 나와 있습니다.

○**김승원 위원** 윤석열 정부에서 참 미스터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중의 하나가 경찰청 외사국과 또 지방경찰청 외사청을 폐지한 일입니다.

외사국, 외사청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해외 범죄라든지 해외에 있는 교민 보호라든지 이런 업무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승원 위원** 그리고 우리 산업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도 역시 수사하고 그것도 막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1100명이 외사국 또 외사청에 근무를 하다가 윤석열 정부 때 다 흩어져 버리지요. 그러면서 어디로 갑니까?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제가 정확히 지금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아마……

○**김승원 위원** 자료 화면 보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외사기능 인력이 기동순찰단 그다음에 집회·시위 경비로 갑니다, 540명이. 절반 이상이 본인의 전공과는 무관한 경비 업무, 집회·시위 관리 업무 또 기동순찰 업무에 투입이 됩니다.

캄보디아 건에서 재외국민 실종신고라든가 또 범죄신고가 많이 오는데 윤석열 정부 몇 년 동안, 2023년, 24년, 2025년까지 갑자기 급증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저는 캄보디아 ODA 건 관련해서 눈을 감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응하지 못한 그 이유가 외사국과 외사청 폐지에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외국민 사건·사고 지금 얼마나 증가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아까 말씀하신 대로 캄보디아라든지 동남아에서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구체적인 통계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승원 위원** 자료 화면 보시면 2022년도에 1만 7000건에서 지금 이제 2만 4000건까지 거의 증가하고 있고, 특히 납치와 감금 건수가 3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것은 아까 말

썸드렸는데 외사국·외사청 기능이 지금 경찰청 여기저기로 흩어져서 일관된 업무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지금 그런 측면에서 경찰청에서 전반적인 조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도 저희 조직국에 요청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승원 위원** 외사국과 외사청 폐지를 주도한 사람이 누군지 자료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윤희근, 조지호. 조지호 경찰청 차장으로 있을 때 외사국·외사청 폐지를 주도했구요. 그래서 그런지 인수위 파견부터 경찰청장까지 정말 초고속 승진을 합니다. 인수위 파견 되고 나서 2022년 6월 치안감 승진하고요, 2022년 12월 치안정감으로 승진을 합니다. 그 때 외사국·외사청을 다 폐지하는 그런 일을 주도적으로 했구요. 윤희근 청장 역시 2021년 12월 치안감 승진한 후에 6개월 만에 치안정감 승진하고 8월 달에 경찰청장으로 또 승진합니다.

다 윤석열 지시에 맹종한 사람들이 경찰청의 최고 수뇌부에 있으면서 결국에는 불법계엄과 내란사태에 경찰 병력을 보내서 국회의원들과 시민들이 민주주의와 국회 사수하는 걸 막은 것도 저 조지호 경찰청장 아니겠습니까? 저는 외사국 폐지와 외사청 폐지가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캄보디아 ODA 불법자금 지원 혹은 캄보디아라든가 다른 데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마약이라든가 향정신성 약품에 대해서 윤석열 일가가, 김건희 일가가 관여했다는 것도 외사국과 외사청의 폐지와 무관하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외사국과 외사청을 부활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다음에 마약 관련해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 수사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위원님, 그 조직 관련해서는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만 경찰청하고 잘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갑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 위치 확인을 좀 해야 돼서요, 감사원장님 계시고 기획재정부 나와 계시고.

경찰청장님은 어디 계시나요?

○**경찰청기획조정관 손제한** 기획조정관이 대신 참석하고 있습니다.

○**김성희 위원** 기획조정관님 와 주셨고요.

행안부는 본부장님 나와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예.

○**김성희 위원** 에게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적절하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경기 고양시갑 김성희입니다.

먼저 경찰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입국 과정에서 실탄이나 총기가 발견되는 일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연 400여 건 발생하고 있습니다. 23년부터 25년까지 통계를 보면 그러하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외국인 입국·출국 과정에서 실탄이 발견되고 있는데 이게 국내에서 유통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사실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경찰청기획조정관 손제한** 그 부분 저희들이 확인되면 철저히 수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희 위원** 말씀은 그러신데 실제로 벌어지는 일을 보면요 지금 환승하는 과정에서 적발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그냥 출국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국내에서 실탄을 소지하고 있다가 나가다 걸리는 경우들이 있는 겁니다. 지금 보면 국적별로 통계가 다 관리되고 있지는 않지만 2025년 김포·김해·대구 공항에서 적발된 케이스만 보더라도 국내에 입국해 있던 외국인들이 상당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게 입국할 때는 저희가 검사할 수가 없으니까 들어와서 이런 총알이 있다가 나갈 때 걸리는 경우는…… 열심히는 한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게 지난 5월 28일, 그러니까 대통령선거 직전이었습니다. 14시 15분경에 김해공항에서 미국으로 나가는 대한항공 수화물 캐리어에서 9mm 실탄 1발이 발견됐습니다. 대상자는 미국인이었고요. 본인의 진술은 실탄이 왜 있는지 모르겠다, 믿을 수 없는 진술인데요.

여하튼 14시 25분경에 공항경찰대, 국정원, 방첩사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30분 동안 해서 대테러 및 대공 용의점이 없다고 판단해서 원래 예약돼 있던 비행기를 그냥 타고 이분 나가셨어요. 그리고 부산 강서경찰서에서는 총포 소지 및 관련 법 위반으로 입건만 하고 출국을 했으니까 바로 수사중지가 돼 버렸지요. 29일에 입국해서 한 달 동안 머무르다 나가던 미국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때는 대선후보에 대한 테러 위협 등으로 긴장이 굉장히 고조된 상태였는데 30분 동안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냥 내보내 버린 것입니다. 이게 현장에서 매일 발생하는 일이니까, 400건 정도 되니까요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말씀드렸던 대로 대선후보에 대한 테러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빨리 판단하고 내보낼 수 있는 문제였나라는 것에도 좀 의문이 있고요.

이게 출국하는 외국인을 붙들고 강제수사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 합동수사를 거치고 나가는데 그런데 그들의 국내 동선이라든지 행적 등에 대해서는, 경찰이 이 부분은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경찰청기획조정관 손제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행적 여부 등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확인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희 위원** 그리고 행안부 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탄소중립법 관련해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국가는 잘 하고 있습니다. 기재부가 하고 있고 어제 제가 질의를 드렸었고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도 의무사항인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저희 지방재정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지방재정법의 근거는 명확하지 않은……

○**김성희 위원** 그렇지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본부장님 말씀 주신 대로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5월에 전남연구원이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54곳에 불과하다는 것이고요. 이게 어쨌거나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운영하지 않는 상황이 정상적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예, 말씀하신 대로 관계 법령에 따라서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법이 좀 미비한 점이 있어서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것들도 있고 해서 관련 법률이, 빨리 근거가 마련돼서 시행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희 위원** 근거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지방재정법이 아니더라도 예산제도를 운영하도록 녹색성장 기본법에 되어 있어서 행안부가 실패 파악이라도 하고 계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법이 없으니까 우리가 실패를 파악할 필요가 없다는 태도는 조금 곤란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인권위가 9월에 행안부장관님에게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 개정을 하라고 추진하고 권고했고 국회에 해당 법안도 발의되어 있으니까요 법이 통과가 되는 것은 되는 거지만 실패 파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법만 통과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 행안부에서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예, 위원님. 실패 파악도 하고 또 시범도 하고 해서 제도가 신속하게 도입돼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성희 위원** 어제 경제부총리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지난 7년 동안 감축한 온실가스가 8800만t인데 앞으로 5년 동안 291만t을 감축을 해야 됩니다. 이재명 정부가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2030 NDC, 2035 NDC를 달성하고 2050년 탄소중립 사회로 갈 수 있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돼서요. 온실가스 감축은 어느 한 부처의 업무가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행정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되는 공통 과제임을 인식해 주시고 지방자치단체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희 위원** 제가 행안위다 보니까 행안부에 계속 질의하게 되는데요.

그다음 질의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지방행정시스템 다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예.

○**김성희 위원** 저희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화재를 놓고 보니까 지금 여기도 문제가 큰 것 같습니다.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라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국가 및 둘 이상의 지자체 간의 정보화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1등급 시스템이 7개, 2등급도 11개나 됩니다. 주요 시스템을 보면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이것은 아주 기본인데 이게 불이나거나 하면 아주 큰일이 나겠지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그렇습니다.

○**김성희 위원** 자료화면 보여 주십시오.

지방세 및 부과·징수·채납을 관리하는 지방세입정보시스템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지방공기업 예산회계시스템 그리고 시도 및 시군구 연계 시스템도 전부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다 불이 날 경우에는 지방행정이 마비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지금 재해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김성희 위원** 그래서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방금 말씀 주신 재해복구시스템 DRS가 36개 중에 0개가 구축돼 있습니다, 0개가. 충격적인 수치인데요. 2개가 구축 중이라고 하시는데 이것도 26년에나 완성이 되고 있고.

그리고 개발원이 현재 지역 클라우드센터의 서버실하고 업무 공간을 동일 건물 안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알고 있습니다.

○**김성희 위원** 이게 예산 문제라고 하지만 이미 불이 나서 큰일이 났는데, 소를 잃으면 외양간을 고쳐야 되는데 소를 잃었는데 외양간을 고칠 계획이 없는 상태가 아닌가 지금 걱정이 됩니다.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까 말씀 주셨습니다만 아주 초보적인 수준에서 데이터를 백업받고 그것을 원격지에 소산하는 정도의 대책을 가지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근본적인 대책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좀 투입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그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못 했기 때문에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 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희 위원** 지금 소산 백업 같은 경우 월 1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의 자료가 다 날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카카오 데이터센터 이미 문제를 겪은 다음인데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아직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은 좀 시급한 문제라고 봅니다.

행안부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36개 지역정보시스템들의 원격지 백업 체계 구축에 당장 착수해 주시고 재해복구센터 마련을 위한 기본계획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협조할 일이 있으면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예, 알겠습니다.

○**김성희 위원** 그리고 문체부장관님께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국영화 지금 위기 상황이라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OTT가 부상해서 극장 산업이 침체하고도 있는데 이게 사실 극장으로 사람 끌어들이려면 양질의 영화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영화 산업 전반에 새바람을 일으키려면 독립영화의 필요성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장관님도 동의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 위원**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도 도전 만화에 나왔던 수많은 작가들이 도전을 하고 거기서 좋은 작품이 뽑혀서 유명 작가가 되는 경우들도 있고 인디영화도 이런 식으로 바람을 불어넣는 게 일인데 사실 인디영화라는 게 듣기에도 그렇지만 돈이 없으니까

인디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가가 지원할 부분을 좀 찾아야 될 텐데.

2019년 289만 명 관객을 달성한 이후로는 지금 반 토막이 나 있는 상태고요. CGV 명동 씨네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폐관까지 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두 배 이상 상승했다고 하지만 ‘건국전쟁’이 117만 명을 이끌면서 나온 것이지 그 외에는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문체부 저예산 독립영화 지원금을 120억에서 70억 원으로 대폭 삭감을 했습니다. 물론 이재명 정부가 원상회복하길 기대했는데, 지금 보니까 전체 영화 제작 지원금 예산은 170억에서 299억 원으로 76%를 증액했는데 독립영화 제작 지원금 증가분은 10%에 그칩니다.

이게 뭐냐 하면 기재부에서도 같이 좀 들어 주셔야 되는데 자꾸 돈 놓고 돈 먹기로 보니까, 독립영화에는 투자해 봐야 남는 게 없으니까 안 하겠다라고 하고 그래도 좀 될 것 같은 중박 영화나 대박 영화 쪽으로 자꾸 투자를 하시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문체부에서 예산을 깎은 이유는 제가 알겠거든요. 이런 다른 생각, 그러니까 지금 정부와 다른 불온한 생각을 갖고 있는 인디영화들은 싹을 자르면 자를수록 그냥 병병한 영화들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디영화라는 독립 분야를 자꾸 죽이면 죽일수록 이것이 자기들에게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극우 정권이나 보수 정권에서 그런 예산을 줄일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 문체부에서는 좀 다른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체부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영화·영상 산업의 토양이자 못자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독립영화에 대한 예산을 내년에는 좀 증액을 했고요. 이 부분 말고 또 관련된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했고. 그런데 하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여전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이번에 심의를 통해서 좀 더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희 위원 그리고 모태펀드도 보니까 지금 추경예산까지 포함해도 200억 원 규모의 출자금이 중저예산 한국영화에 투입됐는데 26년도에는 40억 원으로 이게 80%가 급감을 했습니다. 담당 부서에 확인을 해 보니까 그 모태펀드 영화계정 예산을 증액하는 과정에서 중저예산 펀드를 죽이고 메인 펀드에 집중하라는 기재부의 의견을 따랐다는 겁니다.

차관님,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재부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퍼포먼스가 나와야 된다는 강박이 있을 수 있지만 문화와 예술을 지금 돈 놓고 돈 먹기로 투자 대 산출의 비율로만 따지는 건 좀 부적절하지 않겠습니까? 차관님, 어떠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영화산업의 중장기적인 발전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당장의 사업성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영화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사회의 의미 그 부분도 균형되게 추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희 위원 기재부의 의견과 다르신 것 같으니까요. 기재부의 실무진에 다시 그런 말씀을 잘 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희 위원 그래서 인재 발굴 포함해서 예산을 늘리고 인디영화가 봄이 일어나면 거기서 좋은 감독들이 나오고 그런 감독들이 나중에 또 메이저 감독이 돼서 큰일을 내는 거니까요. 해리포터의 시작도 실업자금 받아서 노트 하나 들고 커피숍에 앉아 있었던 작

가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관님, 산업 전반을 진흥하는 것이 당연히 중요한데 영화 제작 지원사업의 경우는 본래 목적이 영화 문화의 다양성 증진 아니겠습니까? 독립영화에 대한 지원 방향 늘려 주실 걸 부탁드립니다.

모태펀드 사업의 경우에도 50%인 중저예산 한국영화 펀드 정부 출자 비율을 상향해서라도 투자 유인을 좀 높이고 10%에 불과한 저예산 의무투자비율을 확대해서 독립영화를 지원해서 풍성한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알겠습니다.

○김성희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안부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산하기관들이 퇴직 공무원들의 재취업 통로가 되어 버렸습니다, 원래도 있는 문제지만. 최근에 국정감사 때 본부장님도 들으셨겠지만 행안부의 부실한 관리감독 아래에서 지방세연구원에서 직장 갑질, 평가 조작이라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서 결국 피해자가 사망했습니다. 행안부의 산하기관 관리 방식에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감사 요구하라고 해서 감사 청구를 하셨지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그렇습니다.

○김성희 위원 감사원에서 답장이 왔습니다. 저도 봤거든요. 그런데 감사원 답장에 뭐라고 돼 있냐 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행안부 너희들 지금 보니까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서 감독상 필요하면 너희들이 감사할 수 있는데 왜 우리한테 감사를 하라고 하나라고 합니다. 감사원이 이 일을 한두 해 해 오신 곳도 아니고요. 행안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봤기 때문에 감사를 거절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행안부가, 제가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핑퐁 치다 넘어가면 그냥 어물쩍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서 이러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들 지경입니다.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위원님께서 국감이라든지 행안위 질의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필요한 조치를 적절히 해 나가고 또 그 진행……

○김성희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원에 감사 청구했는데 감사원이 법률적인 이유를 들어서 행안부가 하시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행안부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안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제가 지금 그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요.

○김성희 위원 그러시지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위원님, 저희……

○김성희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어쨌거나 지금 감사원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법률을 제시해서……

차장님, 이 건에 대해서 대략은 알고 계시지요?

○감사원장권한대행 김인회 예.

○김성희 위원 이렇다면 이건 그냥 행안부가 감사하면 된다고 보시는 거지요?

○**감사원장권한대행 김인회**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 위원**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변 주셨으니까요. 행안부에서 어떻게든 수를 내서 감사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계속 그냥 식구들끼리 짬짜미를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데요.

자료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현직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의 기관장 자리는 행안부 출신들이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이 전부 다 행안부 출신들이 하고 있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내무부 시절부터 이어졌던 거라서 그렇긴 합니다만 지방공기업평가원 같은 경우는 92년부터 지금까지 죽 보면 12명 중의 10명이 행안부 국실장급 이상의 퇴직 공무원이었고요. 대한지방행정공제회도 마찬가지로 14명 중 13명의 이사장이 행안부 출신이었습니다.

이러니 지방세연구원 포함해서…… 내가 곧 갈 자리인데, 내가 식구인데라고 생각을 하니 감사를 하나 요구해도 이쪽으로 핑퐁 치고 저쪽으로 핑퐁 치는 게 계속되는데 이걸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지금 제가 자료 같은 걸 안 갖고 있어서 답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합리적으로 기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가 운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희 위원** 아까 전에 인디영화에서도 말씀을 드렸습시다만 다양성이 있는 가운데에서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오는 겁니다. 맨날 했던 사람들이 ‘내가 잘하는 분야니까 내가 가서 해도 돼’라고 해서, 개방적으로 둔 자리를 전부 다 행안부 공무원들만 줄줄이 차지하고 있으면 그냥저냥 맨날 똑같은 조직이 된다는 점을 꼭 좀 명심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찾아서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예, 알겠습니다.

○**김성희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는 천하람 위원님, 황정아 위원님까지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개혁신당의 천하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하람 위원** 병무청장님…… 차장님이 계시네요.

국방부장관님도 같이 좀 들어 주십시오.

병무청 같은 경우에 지금 국민의 신뢰를 더 높이겠다, 세심한 배려 있는 병무행정을 하겠다 이런 말씀 계속하시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보다 보니까 국민들한테 당연히 지급되어야 될 비용이 누락되고 있는 걸 발견을 해 가지고요. 아마 모르시는 국민들도 있을 것 같아서 국민들한테 알릴 목적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기도 하는 건데 소위 신검이라고 하는 병역판정검사나 현역병 지원 신체검사 이런 것들을 받을 때 우리가 여비도 나가야 되고 혹시 내가 몸이 아픈 데가 있다 해서 진단서를 발급받으면 병무용 진단서, 수술기록지 이런 발급비용이 있으면 병무청에서 그걸 해당 국민들께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병무청차장 최규석** 예, 그렇습니다.

○**천하람 위원** 그래서 혹시 모르시는 국민들 있으시면 꼭 이것 받으시라는 말씀 이번 기회에 드리고요.

이것 애초에 병무청에서 알아서 드려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병역법 규정에 명확하게 되어 있지요?

○병무청차장 최규석 예.

○천하람 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금 보다 보니까 2024년 한 해 동안 미지급된 인원이 4800명이 넘게 있고 그래서 저희가 병무청에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왜 신검받으러 온 사람들 당연히 드려야 되는 여비랑 진단서 발급비용 안 드리냐라고 저희가 문제 제기를 했고 그래서 병무청에서 전수조사를 하겠다라고 하셨지요?

○병무청차장 최규석 예.

○천하람 위원 그래서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계시는데 전수조사가 아직 완료가 되지는 않았는데 중간값을 저희가 좀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 저희가 말씀드린 4800명 빼고도 21년에서 23년 사이에 이런 여비 그다음에 진단서 미지급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벌써 5900명이 넘게, 5906명이 넘게 확인이 됐고 지금 1억 5900만 원 정도가량이 미지급된 걸로 나오는데 차장님 맞습니까?

○병무청차장 최규석 예, 지금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

○천하람 위원 그래서 아직 확인이 덜 된 부분들도 남아 있는데 이 정도다 그러면 이게 지금 총 합쳐서 1만 명이 넘는 우리 국민들 또 대부분 다 신체검사를 받으시고 병역 의무를 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당연히 지급되었어야 될 비용이 안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병무청차장 최규석 예.

○천하람 위원 그리고 이게 제가 처음으로 지적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국정감사나 뭐 이런 데서도 여러 차례 지적이 됐던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병무청에서도 꼭 잘 챙겨 봐 주시고 이번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밝혀진 부분은 늦었지만 최대한 빠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챙겨 봐 주십시오.

○병무청차장 최규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하람 위원 국방부장관님, 이 부분 어쨌든 병무청 소관이긴 하지만 국방 의무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부분이니까 장관님도 좀 챙겨 봐 주시고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하람 위원 그다음에 이어서 오늘은 장관님께 안보에 관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PPT 한번 띄워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 의원실에서 동북아 6개국 국방력을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국방력이 강하지요. 전 세계적으로는 강한 나라인데 하필이면 우리 지정학적 위치가 너무 강한 나라들이 많이 있고 또 영향을 미치는 나라들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국방 강국들입니다. 특히 북한 같은 경우에는 국방비 지출이나 이런 부분, 재래식 무기나 이런 거는 뒤쳐져 있지만 어쨌든 핵이라고 하는 비대칭 전력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뉴욕한 그런 상황은 아니지요.

그래서 저희가 꼭 이렇게 통계 뽑아 보면서, 특히 장병 일인당 국방비를 한번 봤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우리나라가 징병제 국가여서 장병 일인당 워낙 이렇게 월간

보수 나가는 게 적어서 그렇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사병들 월급이 꽤 많이 올라간 상황 아니겠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렇습니다.

○천하람 위원 그런 상황인데도 아직까지는 장병 일인당 국방비가 비교 대상인 주요 국가들에 비해서 낮은 이런 상황, 장관님 알고 계셨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징병제 국가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하고 약간, 모병제 나라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천하람 위원 예, 물론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중국도 실질적인 모병제 국가지만 중국이 모병된 병사에게 주고 있는 월급 수준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의 징병제에서 나가는 월급 수준에 비해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은 또 논의를 하면 될 것 같고.

다음 장 한번 보지요.

지금 우리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예전에 통과시키면서 2020년까지 50만 명 규모로 군축하겠다고 하고 그다음에는 우리가 법령상 우리 군의 상비병력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를 법령에 우리가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장관님, 우리 상비병력 수준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상비병력 숫자는 저 당시에 2006년도에 국방개혁법에 의거해서 북한군의 여러 가지 재래식 무기와 우리 군의……

○천하람 위원 장관님, 가능하면 짧게 조금……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래서 3 대 1로 하는 게 맞겠다 이래서 북한군이 약 130여만 명, 우리는 50만 명으로 책정했던 겁니다.

○천하람 위원 지금도 그러면 50만이라는 숫자를 유지해야 된다, 아니면 유지하고 있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전반적으로 지금 요새 자문단에서 저걸 재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천하람 위원 그래서 제가 장관님께서 입장 내신 걸 보니까, 상비병력 35만에다가 민간 위탁으로 15만 정도의 병력을 해서 50만 정도를 맞추자 이렇게 입장을 내신 걸 봤는데 지금도 그 입장은 유효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래서 지금 우리 군 특별자문단에서 그걸 놓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적정 규모가, 전투력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최첨단 고가의 무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적정 병력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천하람 위원 그 말씀 이미 하셨고요.

그런데 지금 이거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출생아 수 중에 남성 수가 쭉 급감을 하고 있고 24년도에 0세, 그러니까 24년생이지요. 출생아 수 중에 남성이 다 합쳐 봐야 12만 밖에 안 돼요.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채 못 됩니다.

○천하람 위원 예, 12만도 안 되고.

우리가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징집을 하고 있지요. 징집 비율이 굉장히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병력자원이 굉장히 급감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러면 근본적으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렇습니다. 지금 2023년 기준으로 봤을 때 남아 출생아가 11만 8000명인데 1년 6개월 복무 기간이 계속 유지된다고 봤을 때는 약 17만 60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현재 현역 입영률을 약 90%로 봤을 때 2043년이 되면 약 16만 명이 유지 되기 때문에 그 나머지 잉여 병력자원에 대해서는 직업군, 간부와 장교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천하람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징병 대상인 자원이 확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다 합쳐 봐야 17만밖에 안 되는……

○국방부장관 안규백 16만.

○천하람 위원 16만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나머지 전부 35만이나 되는 것을 간부로 다 채울 수 있다고 보십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현재도 나머지 그러면 19만이지 않겠습니까. 19만인데 현재도 간부……

○천하람 위원 그러면 15만 민간위탁을 빼고 35만을 확보해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렇습니다. 예.

○천하람 위원 그런데 일단 저는 그 전제 자체에 약간 동의하기 어려운 게요, 다음 장 한번 볼까요. 지금 보면 병사만 붕괴되고 있는 게 아니고 간부도 계속해서 이탈되고 있잖아요.

사실 민간위탁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기업 생각해 보지요. 민간위탁이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하도급 아닙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정규직의 급여 수준이 너무 비싸서, 그런데 이 정규직 급여 수준을 떨어뜨릴 수가 없으니까 예를 들면 현대차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저렴한 인건비로 하도급을 해서, 다른 데 하도급을 주겠다 그거는 말이 돼요, 실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정규직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가 직고용하고 있는 우리 간부들, 장교와 부사관들의 임금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이 사람들도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지금 100% 이렇게 월급을 주고 있는 사람도 나가고 있는데 민간위탁을 하면 어쨌든 민간업체가 어느 정도 이윤을 남기고 나머지를 줘야 되는 구조 아닙니까? 그게 15만이나 충원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합리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요. 그래서 동렬 직급에 있는 경찰·소방대원에 맞게 우리가 급여와 복지체계를 상향시키려고 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천하람 위원 예, 저도 알겠는데 그렇게 해서 예컨대 우리가 간부 충원율이 높아지고 하면 그걸 간부로 직고용을 하면 되는 거지 굳이 왜 민간위탁……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장관님께서 민간위탁을 언급하시면서 ‘아, 이게 민간에서도 어느 정도 충원 가능하니까 이 정도만 더 높이면 된다’라고 목표를 설정하시는 게 오히려 안 맞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민간위탁 15만까지 포함해서 전체 상비병력의 대부분을 간부로 충원해야 된다는 전제를 갖고 그러면 이 정도로 나가는 간부를 붙잡는 것을 넘어서서 새로운 사람 충원을 이만큼 해야 된다는 목적을 가져야 간부들의 어떤 처우나 이런 것도 현실화가 되는데 ‘아니, 나머지 부족한 건 민간위탁 하지’ 그렇게 되면 저는 오히려

간부의 처우 개선하는 거에 목표가 좀 흐려지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미군에서도 민간위탁 많이 씁니다.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분들 대부분 보면 후방에서 관리해 주고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위탁에서 오는 병력이라는 게 전시상황에서 실제 간부들이랑 동일한 정도의 효용을 낼 거냐, 그 정도의 국방 전투태세에, 대비태세에 정말 도움이 되느냐? 저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근본적인 대전제가 전투와 비전투 분야로 나눕니다. 35만의 병력은 전투병력이고요 나머지 15만은 PMC랄지……

○천하람 위원 예, 저도 어떤 말씀이신지는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비전투 분야에 종사하는 분이라고 구분 지을 수 있겠습니다.

○천하람 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런데 당장 지금 상황이 민간위탁 이런 거를 언급하기에는 좀 엄중한 상황이다. 지금 있는 간부들도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서 민간위탁을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조금 안 맞지 않나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요.

넘어가 볼까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최근 들어서 일반직렬에 동렬 직렬의 급여를 책정해 주면 군 복무를 계속하겠다는 인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천하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아무튼 우리가 뭐든 정석적인 것에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 보면 군무원들한테도 무슨 군사교육을 더 시켜 가지고 막 이런 얘기들이 자꾸 계속 나오는데 군무원들은 군인이 아니잖아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군무원을 군사교육 시키지 않습니다.

○천하람 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계속해서 군무원들에게 더 많은 부담을 준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급할수록 어떻게 보면 정석을 따라가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상비병력 숫자 같은 부분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숫자나 구성 방식이나 이런 것도 기존의 질서에 매몰되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라는 거를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좀 같이 논의하고 또 소통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전방의 경계 개념에서 지역 개념으로 바뀌고요. AI를 가미한 첨단 과학기술로 지금 발돋움하려고 여러 가지 정책을 세우고 있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천하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안부장관님, 장관님은 안 계시나요? 본부장님 계시는군요.

여기 민방위 관련한 내용인데요. 민방위는 사실은 직접적인 군사훈련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예.

○천하람 위원 그러니까 민방위의 주된 취지나 이런 게 어떤 거지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적의 공격 또 대규모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하람 위원 그렇지요. 특히 재난상황, 전시·사변 상황을 포함해서 지금 재난도 굉장

히 복잡해지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 민간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같이 사전에 대비하는 그런 거지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그렇습니다.

○천하람 위원 그런데 기존에 아마 김기현 위원님이셨던 것 같은데 이제 민방위기본법에 여성의 기초군사훈련이 필요하니까 민방위에 여성 참여를 해야 된다 이런 법안을 내신 적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 조금 취지가 다른 게 민방위는 기초군사훈련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약간 법안 취지가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언급을 좀 드리는 건데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군사훈련이 아닌데도 남성들만 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군사훈련이면 ‘그래, 지금 체제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왜 지금 남성들만 참여하게 수십 년간 진행이 되고 있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제가 그 경위를 정확히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어떤 남성이 군에 가고 예비군훈련을 받고 또 그 이후에 민방위에 편성되는 것들이 이어져 온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다만 지금 현재도 여성들의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다 이렇게……

○천하람 위원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예비군훈련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현실적인 일도 있고 어떤 의미에서 저는 가부장적 관념이 반영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존에 보면 주로 세대주들이 남성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남성인 세대주가 이런 재난상황에서의 훈련, 대비훈련을 받고 와서 가족들한테 가장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하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 그러니까 남성인 세대주만 훈련을 받으면 어느 정도 가족 전체가 커버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제도를 짜고 운영해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보면, 한번 다음 장 볼까요. 문제가 요즘 세대가 갈수록 1인 가구도 많이 늘어나고 해서 세대 구성원 중에 남성이 아예 없는, 세대 구성원 모두가 여성인 세대가 전체의 22~23%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물론 본부장님 말씀처럼 원하면 자발적으로 해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이미 있기는 있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실 그걸 누가 합니까. 그렇게 많이 안 하게 되고요. 사실은 남성들도 민방위 자발적으로 하라 그러면 참여율이 많이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성이 세대주인 가구들도 재난상황이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디로 대피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숙지는 되어 있어야지, 23%에 가까운 국민들은 민방위와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좀 민방위제도의 취지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지금 여성들에게 민방위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의무화할 것이냐의 문제와 또 재난상황에서 여성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이냐의 문제는 조금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천하람 위원 민방위 말고 여성들을 대상으로 따로 재난교육을 의무화해서 하는 게 있어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의무화는 없지만 저희들이 재난상황에서는 자율로……

○**천하람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재난 관련해서 다양한 교육들이 있지요. 그런데 민방위 교육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드는 게 이거는 의무화된 교육이라서 그런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민방위는 교육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편성이 돼서 전시에 동원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교육과 그 이후의 어떤 의무가 같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천하람 위원** 아니, 이것 군사훈련 아니라면서요. 전시에만 문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민방위가.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예, 그렇습니다.

○**천하람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도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가부장적인 제도의 설계를 근본적으로 한번 재고민해 볼 시기가 됐다. 같이 한번 좀 고민을 해 보시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예, 위원님 말씀 한번 저희들이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하람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 황정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아 위원** 안녕하십니까?

대전 유성을 황정아 위원입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정치를 그렇게 오래 하지 않아서 그런지 검찰이 이렇게 목소리가 큰 집단인 줄 처음 알았습니다. 본인들을 마치 정의의 투사인 것처럼 포장하는데 최소한 부끄러움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2024년 7월 서울중앙지검이 명품백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하여 김건희 대면조사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소환도 하지 않고 비공개로 출장조사를 진행했었지요. 검사들이 조사를 하러 간 것인지, 조사를 받으러 간 것인지 정말 참담하게도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사전에 제출한 상태에서 조사실에 들어갔었습니다.

이 황제 조사의 결과물이 뭐였습니까? 무혐의였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황정아 위원** 권력의 시녀 역할을 아주 톡톡히 잘 해냈다고 보이는데 측천무후 즉위식을 깔아 준 것과 다름없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지금 특검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공범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정교 유착으로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을 받았고 서희건설, 이배용으로부터 반클리프 목걸이, 금거북이 등을 수수하고 김기현 국민의힘 전 당대표 배우자는 명품가방을 주고 최소 여덟 번의 뇌물수수를 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황정아 위원** 장관님, 너무나도 정의로운 검사장·검사들께서 당시 김건희 무혐의 성토

하는 집단행동에 나섰다는 것 들으신 바 있으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누구도 이의제기를 했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황정아 위원** 측천무후 김건희의 권력에는 고개 숙여서 ‘국민께 죄송하다’ 친운 검사들이 성명서 낸 것 보신 적 있으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황정아 위원** 장관님, 배를 갈라 장기를 다 꺼낼 수 있다라는 말을 들으시면 어떻겠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 입장에서 보면 매우 공포스러운 위협으로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황정아 위원** 예, 맞습니다. 완전히 협박입니다.

검찰이 사건의 실제적 진실을 밝히기보다 본인들의 정치 놀음에 활용하기 위해서 협박을 일삼았던 게 수면 위로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여하튼 이 내막은 잘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정아 위원** 게다가 검찰의 놀이에 협조했던 유동규는 7년을 구형했는데 8년이 나왔습니다. 법원에서 구형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하는 것 정말 이례적이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아주 이례적인 사안입니다.

○**황정아 위원** 누가 봐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검사들이 이에 대해서 자성의 목소리 낸 것 들으신 바 있으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듣지 못했습니다.

○**황정아 위원** 참 참담한데……

장관님, 71년 만에 형사소송법 원칙이 붕괴되었을 때는 또 어떻습니까? 내란수괴 윤석열만 일자로 계산하던 구속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해서 석방되었는데 즉시 항고조차 포기했었습니다. 그랬었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정아 위원** 장관님,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024년 9월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충성 맹세 질문에 모욕적이라고 답변한 것 알고 계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알고 있습니다.

○**황정아 위원** 그런데 정작 실상은 어땠습니까? 검찰총장이 음험한 내란의 도구였던 비화폰까지 들고 있었고 그 통화 시기는 도이치모터스 무혐의 처분 직전 그리고 상대는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었습니다.

장관님, 검사장들이 이에 대해서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공개적으로 해명을 요구한 성명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보거나 들은 적 없습니다.

○**황정아 위원** 윤석열 구속 취소, 즉시항고 포기에 검사들이 집단으로 공개적으로 항명한 것 아시는 바 있으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일선 검사들은 항고해야 된다는 의견을 표시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집단적으로 공개적으로 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정아 위원** 그랬습니다. 그래 놓고 지침으로 다시 구속기간 일로 계산하라고 내려보내기까지 했습니다. 너무 치졸하지 않습니까? 저런 게 바로 윤석열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정의를 포기한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타까운 일입니다.

○**황정아 위원** 장관님, 검사들이 김건희 봐주기 할 때, 내란수괴 윤석열 풀어 줄 때만 갑자기 눈이 멀고 그때만 갑자기 귀가 먹었던 걸까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선택적으로 행사하는 바람에 검찰에 대한 불신이 생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황정아 위원** 권력의 시녀가 되어서 진짜 규정과 법을 완벽하게 어겼을 때는 입꼭닫고 있더니 규정에 따라서 이루어진 항소 자체에 대해서는 검란 운운하며 뛰쳐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 검란이 윤석열 정권 시기에는 없었습니까? 수사기관이 막강한 기소독점권을 휘두르는 정치놀음에 중독되어 있었다는 방증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어쨌든 일부 검사들이 정치검사라고 하는 그런 비판을 받으면서 권력의 요구에 따른 것을, 수사에 맹종하고 또 그러한 요구에 그냥 따라갔다고 하는 그런 비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황정아 위원** 맞습니다. 검찰의 선택적 집단행동 그리고 정치놀음에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윤석열의 공범임을 자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니 검찰 개혁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게 대법원의 다수의견이라고 지속적으로 말씀 주시고 있습니다. 맞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렇습니다.

○**황정아 위원** 법원행정처장님, 윤석열 구속 취소한 날 언제였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정아 위원** 3월 7일입니다.

‘상급심의 판단이 필요하다’ 말씀 주셨던 것도 기억하실 겁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황정아 위원** 법사위에서 처음으로 그 말씀 주셨던 날짜 언제인지 아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 직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정아 위원** 예, 그 직후 3월 12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윤석열은 풀려났고 7월 11일 재구속될 때까지 자그마치 4개월이 걸렸습니다. 윤석열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특혜를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게 바로 지연된 정의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저희들도 정의가 지체되면 제대로 된 실질적인 정의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정아 위원** 한덕수 재판을 담당하는 이진관 판사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진관 판사는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와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이 재판에 불출석하자 재판부가 증인들을 반드시 불러내겠다라는 입장 밝혔습니다.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당연히 엄중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귀연 판사 어떻습니까? ‘저녁을 먹어야 해서 재판을 일찍 끝내야 한다. 추가 기일을 잡으려고 하다가 우리 변호사님들 간절한 눈빛에 마음이 약해졌다’, 무슨 말입니

까, 이게? 오히려 윤석열과 원팀이 되었습니다. 변호인 측이 반발하면 어렵게 잡았던 재판마저 취소해 버리고……

이진관 판사는 11월 중에 종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대외적인 메시지까지 냈습니다.

처장님, 법적 요건을 단 하나도 지키지 않은 불법계엄이 터졌습니다. 국민을 처단한다는 말을 담은 포고령까지 발령되었습니다. 상식이 있다면 계엄이 당연히 위법·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저희들도 그때 그런 입장을 가졌고, 제가 그 뒤에 국회 법사위에 나와서도 그런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

○**황정아 위원** 12·3 사태가 21세기 들어서 가장 엄중한 사안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매우 엄중한 헌법에 대한 위반사항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황정아 위원** 그런데 왜 재판이 이 정도까지 시간이 지연될 이유가 뭡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지금 이 시간에도 어쨌든 그것 관련한 사건 재판이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신속하게, 지연된 정의가 되지 않도록 결론을 떠나서 재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든 법관들이 공감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황정아 위원** 그 모든 법관에서 지귀연 판사가 예외인 모양입니다.

내란수괴에게 시간을 벌어 주는 지귀연 판사의 행태는 지연된 정의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원칙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황정아 위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싶으시면 법원이 똑바로 항변을 하셔야지요. 그래야 국민이 법원을 믿지 않겠습니까?

처장님, 지귀연 판사의 재판 중계 영상 보셨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일부 잠깐 봤습니다.

○**황정아 위원** 내란 재판이 무슨 동네 시장에서 흥정하듯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 누구나 계엄의 심각성, 이 재판의 엄중함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데 깃털보다 가벼운 지귀연 판사의 그 언행은 적절합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개별 재판의 진행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씀은 있지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황정아 위원** 국민의 주권에 역모를 꾀한 자를 보호하는 게 사법입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민들을 위해서 사법이 존재하고 국민 주권이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재판해야 되는 것으로 모든 법관들이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황정아 위원** 이래 가지고 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귀연 재판부가 1월에 기일을 추가로 잡겠다고 의중을 보였다는데 윤석열의 구속기한이 1월 중 끝납니다. 자기 기분에 거슬리면 자기 사람인 한동훈마저 총으로 쏘서 죽여버리겠다는 윤석열이 또다시 길거리를 활보하게 생겼습니다. 이게 바로 대법관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 지연되지 않은 정의입니까?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처장님, 새벽 5시에 휴대전화 몰래 바꿔 보신 적 있으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제 개인적인 일을 물어보시는 것이라면 그런 일은 없습니다.

○**황정아 위원** 새벽 5시에 유심칩을 빼서 갈아 치워 보신 적 없으시지요? 이게 일반적

입니까? 일반적이지 않지요? 답변을 하세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지 않겠습니까.

○**황정아 위원** 최신헌 휴대전화로 바꾼 지 두 달 만에 또 핸드폰을 바꿔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그것도 새벽 5시에? 없으시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개인적으로는 그런 일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황정아 위원** 그 기이한 행동을 독특한 시점에 지귀연 판사가 반복해서 저지릅니다. 지귀연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구속취소를 청구한 당일인 2월 4일 오후 3시 23분에 6년 동안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갑자기 그날 교체합니다. 6분 뒤에 다시 기존 기기로 돌아갔다가 다음 날 새벽 5시에 새 휴대전화로 완전히 갈아탑니다. 그리고 나더니 갑자기 70년 만에 처음으로 구속기간을 일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하는 역사적인 판결이 탄생합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처장님, 일반인이 이러면 증거인멸 했다고 바로 구속해 버리는 게 법원 아니었습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뭔가 있구나 싶은 구조 아닐까요,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안 그러면 굳이 새벽 5시에 휴대전화를 바꿀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연에 우연에 우연이 겹쳐서? 그런 우연이 겹치면 범죄 아닙니까? 판사님들은 원래 새벽 5시만 되면 휴대전화를 바꾸십니까? 진짜 궁금해서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바와 같습니다.

○**황정아 위원** 모종의 거래, 모종의 커넥션이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정황 아닙니까?

더 가관인 것은 지귀연 판사 본인의 유흥업소 접대 의혹이 불거지자 또다시 같은 패턴으로 새벽 5시에 휴대전화를 갈아 치웁니다. 5월 14일 존경하는 김용민 의원님의 접대 의혹 제기 이후에 이틀 뒤 5월 16일 오후 4시 2분에 S25 최신헌 휴대폰을 중국산 휴대전화인 샤오미 휴대폰으로 교체합니다. 지귀연 판사는 이번에도 5분 뒤 다시 기존 기기로 바꿨다가 이틀 뒤인 5월 18일 새벽 5시 19분에 샤오미 휴대전화로 최종 교체를 합니다. 이 패턴은 도대체 무엇인지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라면 매우 궁금할 것 같습니다.

천대엽 처장님, 지귀연 판사에게 휴대전화 왜 바꿨는지 확인하셨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하지 않았습니다.

○**황정아 위원**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왜 하지 않으셨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아시다시피 저희 사법행정이 개인의 사생활에 대해서 관여하게 되면 그 자체가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절차를 통하지 않고서 직접 개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정아 위원** 개인적으로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당연히 개인적으로든 공적으로든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귀연 판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을 냈던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황정아 위원** 왜 하필 새벽 5시에, 그리고 기존에 쓰던 이 전화기들은 다, 기기는 어떻게 했을지 너무 궁금한데 왜 확인 안 하십니까?

처장님,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신 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정말 정의라고 생각하

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의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해당 재판부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중요한 재판이라서 인사이드 전에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을 누누이 밝힌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저희들도 그렇게 믿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황정아 위원** 지귀연 판사에게 겹겹이 의혹이 쌓여 가고 있습니다. 왜 지연된 정의의 표본이 지귀연 판사가 되어 가고 있는데 법원에서는 조치하고 있는 게 없습니까? 조치를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또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은 그 해당 재판 또 같은 유형의 재판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당 중앙지방법원뿐 아니라 저희 행정처에서도 여러 가지 물적인 외적인 지원은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넘어서서 개별 재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한계를 잘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황정아 위원** 그 해명을 국민께서 이해하시겠습니까? 납득하실까요?

지금 법원이 법꾸라지의 방식을 그대로 본떠서 말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지귀연 부장판사 감찰 당시 소명을 들었던 일시를 확인해 달라고 저희가 질의를 했더니 ‘비공개 감사 업무라 못 준다’……

지귀연 부장판사에게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유, 새벽 5시경에 어디에서 휴대전화를 교체했는지 그리고 기존 휴대전화는 보유하고 있는지 폐기를 한 건지 답변해 달라고 질의를 드렸는데요. 지귀연 판사에게는 전달조차 되지 않았다고 하고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의 감사가 진행 중이라 지귀연 판사에게 답변을 요구하지도 않겠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법원이 지금 자기들 멋대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명언을 왜곡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면 곤란한데 감사 결과 문제는 없지만 공수처 수사 때문에 감사 종결은 안 하고 감사 종결은 안 했으니까 자료는 일체 제출할 수가 없고…… 이게 무슨 법꾸라지의 순환논리입니까?

감사 종결은 언제 됩니까, 그러면?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윤리감사관실은 독립된 기관입니다. 기관이고 지금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지만 국민들이 주시하는 사안이다 보니까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참고해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정아 위원** 그러면 오동운 공수처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란수괴 단 한 명만을 위해서 사법제도의 틀 자체를 지금 변화시켜 버리는 구속취소가 신청했던 날 갑자기 휴대전화 바꿉니다. 이것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시하고 또 지금 지귀연 부장에 대한 수사에 참고하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황정아 위원** 두 달 만에 접대 의혹이 터지자 또 휴대전화를 갈아 치우고, 예단해서는 안 되겠지만 정황상 뭔가 찢리는 게 있는 게 분명하다라는 그런 합리적인 추론이 누구나 가능하네요. 새벽 5시…… 너무나도 이상한 행동 패턴 아닙니까?

피의자가 지금 범죄 혐의 모두 부정하고 있고 의혹 시점마다 새벽에 일어나서 휴대전

화를 갈아 치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이런 것을 증거인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증거인멸이라고 판단되면 구속영장 발부 안 됩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저희들 수사하면서 그런 부분 주시하겠습니다.

○**황정아 위원** 유독 지귀연 판사에게는 영장 발부가 참 박절한 것 같습니다. 공수처 입장에서는 당연히 영장 청구했을 것 같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수사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황정아 위원** 수사에 더 속도를 내 주시고요. 지귀연이 내란수괴와 모종의 커넥션이 있다면 사법 붕괴 수준의 게이트 아닙니까? 관련해서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엄중하게 처분해 주십시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찬을 위해서 오전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발언해 주십시오.

○**박형수 위원** 예결위 야당 간사 박형수 위원입니다.

오늘 위원장님께 강력한 조치를 건의하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국회에서는 위원회 참석 대상 국무위원들이 이석할 때는 위원장과 양당 간사의 협의하에 이석하는 것이 오랫동안 전통이고 불문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최교진 교육부장관이 오전 예결위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이유는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예결위를 운영하면서 이석을 해야 될 경우에 모든 장관들이 여야 간사의 승낙을 받았습니다. 지난번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가 났을 때도 장관들이 대부분 내려갔습니다, 관련 장관들이. 그런데 그다음 날은 여야 간 협의에 의해서 예결위에 필요한 장관은 올라오시고 거기에 중수본을 구성하고 있는 노동부장관이 남아 있기로 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국무회의 때도 그때 필요한 장관, 산업부, 기재부…… 네 분 장관 이외에 중기부장관은 여야 간 협의에 의해서 거기에 참석하지 않고 예결위에 참석하는 걸로 해서 여기 참석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열린 중앙

지방협력회의도 주무부 장관, 행안부장관이 협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리고 법제처장도 거기의 참석 대상이라고 해서 법제처장이 거기를 왜 참석하느냐 그랬더니 이리이러한 사유로 참석해야 된다고 사유서를 다 보내오고 발언 내용까지도 보내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승낙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교육부장관은 어젯밤 10시쯤에 간사실 직원들한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아무런 근거자료도 없이 얘기를 했다 그러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아무런 근거자료도 없이 갑자기 왜 거기 참석을 하느냐, 다른 장관들은 다 사전에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 통화도 직접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장관이 여기에 무단으로 이석해 가지고 그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회의가 운영된다라면 여야 간사 간 협의, 위원장의 이석 허가가 뭐 하러 필요합니까? 교육부장관은 다른 장관들이 다 이석 승낙을 받는데 혼자 안 받아도 되는 무슨 특권이 있습니까?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부장관 본인이 공개 사과를 하시고 국무총리가 나와서 이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님의 조치를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도** 이것 관련해 교육부장관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 **최교진** 먼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절차를 밟아서 승낙을 받은 후에 다른 행사에 참석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주의하고 사전에 예정된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위원장 **한병도** 박형수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 운영을 하면서 불출석 사유가 계속 경우에는 위원장과 양당 간사가 협의 후에 허락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이 돼 왔습니다. 앞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차관 등이 출석할 수밖에 없는 경우 간사님들과 위원장에게 반드시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양해를 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리가 와서, 그것 관련된 입장과 관련해서는 양당 간사님께서 한번 더 이야기를 해 주시고 저에게 의견을 따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하신 말씀 꼭 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힘 대구 북구갑 우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준 **위원** 대구 북구갑의 우재준 위원입니다.

본질위에 조금 앞서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저도 법무부장관님께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부 자산을 헐값 매각하는 걸 금지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부분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직접 들었습니다.

○우재준 **위원** 모든 사실관계를 다 파악하고 문제 시 엄정 조치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번의 대장동 사건도 사실은 보면 대장동 개발권이라는 부분을

민간업자에게 헐값으로 매각한 게 이 사건의 본질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이게 수용되고 또 보상하는 그 과정보다는 그러한 사업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그 업자들이 성남도시공사의 관계 공무원들하고, 어쨌든 그들로부터 혜택을 받았다고 하는 게 사실은 핵심적인 사항 같습니다.

○**우재준 위원** 그러니까 그 판결의 내용을 봐도 결국 사업권을 민간업자들에게 주면서 원래 성남시가 확보할 수 있었던 이익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제삼자에게 이익을 준 배임행위다 이렇게 해석한 게 이 판결의 본질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렇게 강조하신 정부 자산, 물론 지자체 자산이긴 합니다. 이 부분을 매각했다는 본질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헐값 매각이라는?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게 헐값인지 아닌지는 법원 판결의 내용에 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사건과 관련해 갖고 그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되었다라든가 또는 이재명 대통령이 같이 협력했다고 하는 그런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재준 위원** 대통령께서 이렇게 정부 자산 헐값 매각에 대해서 최근에 강조까지 하셨는데 대장동 사건에 관해서는 이 결과에 대해서 별로 궁금해하지 않으시던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달리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 사건은 정부 자산을 매각한 게 아니라 성남 주민들이 갖고 있었던 토지를 개발업자들이 단독으로 개발하려고 하다 실패하니까 단독 개발, 민간개발이 실패하니까 그 과정에서 성남시장으로 새로 당선된 당시 이재명 시장이 공영개발을 하다가 또 그게 잘 안 되니까 서로 타협해 갖고 민과 관이 함께 개발한 사건입니다.

○**우재준 위원** 장관께서는 이 사건 항소 포기과 관련하여서 항소 포기가 끝나고 나서 대통령실에 보고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저는 보고한 바는 없습니다.

○**우재준 위원** 별도 보고한 바는 없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런 말씀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우재준 위원** 그러면 대통령실에는 아무도 보고를 안 했습니까? 법무부 차원에서 별도의 보고를 안 했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거는 실무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연락이 갔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대통령실에 이 건의 결과를 보고해라 하는 그런 지시를 한 바는 없습니다.

○**우재준 위원** 실무 차원에서는 보고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건 제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중요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관련 비서관들에게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재준 위원** 어떤 비서관한테 연락을 주고받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결국은 민정수석실의 비서관들 아니겠습니까?

○**우재준 위원** 법무부에서는 누가 이거를 관장합니까? 그러면 법무부의 누구와 그다음에 대통령실의 누가 주로 이런 소통을 합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일상적으로 지금 이런 사건뿐만 아니라 보이스포싱이라든가 전세 사기라든가 다양한, 또 최근에 캄보디아 사건 같은 것처럼 대통령이 여러 가지 민생을

침해하는 사건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재준 위원 그래서 누가 보통 소통하는 라인입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통상적으로는 법무부차관이나 또는 검찰국장이 대개 통화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재준 위원 그러면 이 사건 같은 경우도 그분들이 대통령실에 보고했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건 제가 추측할 수는 없습니다.

○우재준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관한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대통령실과 이야기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장관에게?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통령실 보고 관련해서는 저한테 의논하지는 않습니다.

○우재준 위원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대통령께서 공범으로 직접 수사가, 기소가 된 상황에서 중지된 사건이고 최근에 이렇게 재산매각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 이 점에 대해서 장관한테 어떻게 대통령실과 이야기한다 만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런 사실 없습니다.

○우재준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재명 정부의 1호 법안이 혹시 뭔지 알고 계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우재준 위원 1호 법안은 검사징계법입니다. 2·3·4호 법안이 3대 특검이고요 1호 법안은 검사징계법 개정안입니다. 그 내용은 기존에 있었던, 검찰총장만 기존에는 검사에 대한 징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걸 정무직인 법무부장관까지 확대하는 걸 골자로 하는 게 이재명 정부의 1호 법안입니다.

혹시 이번에 검사들이 항소 포기하라는 지시를 무시하고 만약에 항소를 했으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전부 가정적인 사항 같습니다. 저는 항소를 포기하라고 지휘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가정적 상황을 전제로 해 가지고 징계를 얘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재준 위원 이재명 정부에서 이렇게 1호 법안으로 검사징계법을 만들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건은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을 가정하고 혹시나 그 법안을 통과시킨 겁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렇지 않습니다.

○우재준 위원 그러면 지금 항소 포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검사들이 많이 있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우재준 위원 그분들은 징계의 대상이 됩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항소 포기에 관련해 가지고 다른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그러한 사항들을, 이견을 집단적으로 예를 들면 연판장을 돌려 가면서 의견을 구해 가지고 행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재준 위원 오늘 아침에 중요한 기사가 났습니다. 법무부차관께서 세 가지 안을 이렇게 검찰총장대행한테 줬는데 모두 다 항소 포기하라는 지시였다라는 취지의 기사였습

니다. 그 기사 혹시 보셨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저는 아직, 오늘 아침에 예결위 질의가 많아 가지고요 그 신문기사는 보지 못했습니다.

○**우재준 위원** 아주 중요한 기사인데 그 부분을 아무도 알려 주지 않던가요? 점심시간도 있었고 오늘 아마 이 안전과 관련해서 정말 많은 질문이 나올 거라는 걸 예상하고……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목 정도만 들었습니다.

○**우재준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차관님한테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혹시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차관은 오전에 소위에 들어가 가지고 예산심사를 해 가지고 점심때 잠깐 봤습니다.

○**우재준 위원** 사실 장관님께서는 그냥 신중하게 검토하라 이 정도 말했다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잖아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우재준 위원** 법무부차관이 그걸 뛰어넘어서 아주 구체적인 세 가지 안을 만약에 검찰총장한테 줬고 그게 모두 항소 포기하라는 그런 말이었으면 꽤나 아주 구체적으로 직권남용이라든지 권리행사방해가 될 수도 있는 사안인데 지금 이렇게 주목받는 사건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지 않으셨나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저는 차관이 어떻게 대검에 전달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휘를 하려고 하면 관행적으로 서면 또는 공문으로 해 왔습니다. 저도 제가 장관 취임해 가지고 개별적 사건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지휘를 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지금까지 사실 많은 사건들을 보고받았지만 그런 식의 지휘를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사건에 관련해 가지고 이런저런, 보고 자체라는 게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보고의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견을 제시한 적은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법무부차관께서 장관의 생각을 어떤 의도로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 가지고 지시했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재준 위원** 이 건 관련해서는 향후에, 오늘 저녁시간도 있고 하잖아요.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답변을 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재준 위원** 그다음에 민사재판을 통해서 손해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문에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현재 피해자 공사의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등 피해회복 조치는 심히 곤란한 상태로 보이는데도 뒤늦게나마 피해회복 과정에서 국가가 개입하여 범죄피해자산을 추징한 다음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신속한 피해회복을 도모할 필요성이 크다’라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미 법원에서도 현재 배임액을 명확하게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가 났습니다.

다만 이미 한 2000억 상당의 금액들이 지금 보전 처분돼 있기 때문에 성남도시공사가 실질적인 손해를 회복하려고 하면 그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그냥 별도로 가압류를 해야 됩니다. 결국 업무상 배임은 남아 있기 때문에 1심 선고형들이 가법지가 않습니다. 지금 피고인들이 전부 항소를 했는데요. 저희가 항소심에서 그러한 중한 형들이 유지되고 그 과정에서 업무상 배임과 관련해 가지고 또 엄밀하게 공소 유지하게 되면 민사소송에서 피해 입증도 그때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재준 위원 최근에 피고인 남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진술이 변경되는 측면이 있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우재준 위원 혹시 장관님 생각에는 왜 그렇게 진술이 변경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은 수사기관에서도 여러 차례 진술이 좀 바뀌었습니다. 1차 수사기관에서 했을 때 진술과 또 수사 관계자들이 2차로 좀 바뀌었을 때—정권 교체 이후입니다—그 후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실은요.

○우재준 위원 혹시 이렇게 범죄수익을 가져가게 함으로써 이런 것들이 대가 관계가 있었다라는 그런 의심은 들지 않으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지금 범죄수익은 현재까지는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의 모든 재산들, 가까운 배우자들, 형제들까지도 거의 다 보전처분이 돼 있습니다. 물론 그것 외에 숨겨진 재산이 있을 개연성도 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법원의 민사소송을 통해 가지고 다른 부분도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 재판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재준 위원 공수처장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공수처장 법사위 전체회의 참석으로 차장 대참 중입니다.

○우재준 위원 차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차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됩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우재준 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이번에 법무부 장차관이 부당하게 항소 포기에 개입했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것입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원칙적으로 대상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안을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재준 위원 지금 사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아직까지 언론에 나온 것만으로는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씀드리는데 것은 이른 것 같습니다.

○우재준 위원 이미 수많은 정황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증거를 빨리 확보해야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입니다. 지시 관계나 이런 부분들은 휴대폰이라든지 여러 문서라든지 이런 부분들, 남아 있는 부분들의 증거를 아주 빨리 확보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CCTV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당시에 항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검사들의 검토의견서 같은 것들 그게 법무부에 어떻게 전달됐는지 그리고 법무부에서는 어떤 서류를 만들었는지, 만약에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실과 누가 소통한 사람이 있으면 어떤 경로로 어떻게 소통이 됐는지 이런 증거들, 매우 삭제하기 쉬운 것들이고 빨리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는 이 점을 분명히 새겨서 적절한 순간에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안부장관님.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본부장 나와 있습니다.

○**우재준 위원** 본질의로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작년에, 우리가 올해 산불이 엄청 많이 났잖아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예, 그렇습니다.

○**우재준 위원** 산불이 많이 나서 정말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기도 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특별히 초동조치를 열심히 하라, 정말 초동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이렇게 강조를 최근에 하셨습니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그렇습니다.

○**우재준 위원** 재난 컨트롤타워는 지금 행안부지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재난에 대한 중대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대본부장은 행안부장관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재준 위원** 그런데 산불 대응에 있어서 초동조치를 하는 곳은 어디인지 아십니까?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자치단체와 또 산림청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재준 위원** 지자체에서 담당을 하더라고요. 가장 먼저 출동하는 곳, 산불이 나면 가장 먼저 헬기가 출동하는 곳이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런데 올해 산불 대응 중에 2대의 헬기가 추락해서 2명의 기장이 돌아가신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예, 알고 있습니다.

○**우재준 위원** 그중에 제가 저희 대구 북구에서 돌아가신 정궁호 기장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분 같은 경우는 정말 초동조치 중에 너무나도 안타깝게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이 타고 있었던 헬기가 몇 년 된 기종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8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기종으로 제가……

○**우재준 위원** 44년 됐더라고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예, 그렇습니다.

○**우재준 위원** 가장 중요한 초동조치, 가장 긴급한 조치를 해야 되는 분들인데 이분이 44년 된 헬기를 타고 출동하다가 이 헬기가 추락을 해서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노후화된 헬기를 타지게 된 건가라는 부분에 약간, 저도 너무 이해가 잘 가지 않아서 전반적으로 지자체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

일반적으로 헬기의 수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20년 정도를 보통 얘기를 하고 있고 20년이 넘어도 못 타는 건 아닙니다만 20년이 지나고 나면 안전조치를 좀 더 강하게 해서 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재준 위원 20년이 일반적으로 기준이긴 하고 20년이 넘어도 사용은 하되 좀 주의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지금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헬기가 총 82대인데요, 사용하는 게 82대인데 20년 이상 된 헬기가 74대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20년 이상 된 기종입니다. 심지어 가장 오래된 헬기는 충청남도랑 영주시의 헬기로 63년 됐습니다.

63년 전에 혹시 대통령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윤보선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때 대한민국 GDP가 일인당 100달러였습니다. 그때 헬기를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위원님, 관련해서 자치단체가 보유한 헬기는 아니고 자치단체가 임차해서 쓰는 헬기가 그렇다는 것……

○우재준 위원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예, 그렇습니다.

○우재준 위원 직접 보유하고 있는 헬기는 사실 1대밖에 없고요, 1대밖에 없고, 전북이 1대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모든 지자체들은 임차하고 있더라고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그렇습니다.

○우재준 위원 그런데 임차하고 있는 기종 중에 대부분이 평균으로 한 45년 정도 됐고요 오래된 건 60년이 넘는 헬기들도 있습니다. 혹시 왜 이렇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제가 왜까지는 지금 파악은……

○우재준 위원 헬기 비용에 있어서 혹시 중앙정부의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중앙정부가 보조금으로 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해서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재준 위원 소방안전교부세만 있지 헬기 비용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헬기 연수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라든지 제재라든지 규제도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지자체장 입장에서는 굳이 내 임기 4년 동안 이것을 교체하거나 여기에 돈을 많이 쓸 유인이 사실 별로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장 보이지 않거든요. 당장 성과로 보이지 않는 비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헬기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초동조치에 가장 중요한 헬기에 대해서 돈을 쓰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돌아가신 정궁호 기장님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그리고 우리 정부가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구조에 대해서 저는 규정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아주 중요한 이런 장비들, 헬기와 같은 아주 중요한 장비는, 적어도 이 장비들은 그냥 국가에서 통합해서 관리를 한다든지 또는 아니면 적어도 정확한 규정을 만들어서 일정량 이상 노후 기종은 쓰지 못하게 한다든지 또는 아니면 어떠한 형태로든 보조금을 조금 더 지원을 한다든지 어떻게 방법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치단체 임차 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는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산불을 자치단체에만 맡겨 둘 것이냐, 중앙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있고 최근에는, 여기 국방부도 나와 계십니다만 산림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헬

기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국방부가 협심을 해서 초기부터 산림청과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자치단체가 초기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산림청과 국방부가 대응하는 형태로 하자 이렇게 돼 있고, 최근에 대통령께서 산림청 항공본부를 방문하셔서 가지고 군과 산림청이 같이 훈련하는 모습도 점검하셨고 그것에 대한 메시지도 다시 한번 전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재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의 차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지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경기 오산의 차지호 위원입니다.

우선 교육부장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국회에서 AI 전환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논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AI 전환 문제는 사실 여기 계신 모두가 우리 사회와 산업 이 모든 시스템을 바꿀 거라는 생각들은 다 하고 계실 겁니다. 그에 가장 근원적인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체계, 산업체계, 과학기술, 이 여러 영역들이 결국 인간지능에 기반한, 휴먼 인텔리전스 시스템에 기반한 체계였다가 지금 AI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가진 인텔리전스에 대한 독점권이 사실 깨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국 휴먼 인텔리전스 안에, 인간지능이 만들었던 것 안에 AI가 접합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인텔리전스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가장 급하게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고용노동 부분이고 그리고 가장 미래적으로 장기적인 영향을 주는 것들이 교육 영역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현대 문명에서 휴먼 인텔리전스에 대한 개발과 증진은 교육이 맡아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고도화될수록 예전에는 짧았던, 초등교육에서 시작해서 중등교육까지 짧았던 교육들이 지금 고등교육까지 늘어나서 대학 혹은 대학원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사람은, 아이들은 태어나서 교육받고 그 교육받은 거 가지고 남은 몇 수십 년간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AI 시대 때 근본적인 변화 중의 하나는 이런 식의 변화가, 교육체계가 더 이상 효과를 발휘하지 않습니다. 인간과 결합돼 있는 다른 AI가 발전되는 속도가 워낙 빠르고 그리고 일종의 디지털 지능으로서 전 세계의 다양한 모든 지식에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아이들이 혹은 우리가 배웠던 지식이나 혹은 가졌던 전문 지식이 AI로 대체될 수 있거나 보조될 수 있을 때 과연 지금의 교육체계가 AI 사회에서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 봐야 됩니다.

여기 있는 다른 많은 부처 장관님 중에서도 교육부장관님이 지금 AI 시대 때 가장 민감한 자리에 있습니다. 결국 AI 시대 전환들을 읽어 내지 못하고 그때 필요한 인력들, 사람들의 자원들이 어떤 것인지를 읽어 내지 못하면 우리 아이들이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될지를 설계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AI 인재양성 주요 방안들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얘기가 됐을 때 저는 과연 이 정책들이 이런 식의 큰 지능체계의 변화를 전제로 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남습니다. 마치 예전에 메타버스가 유행하고 이런저런 게 유행했을 때 그런 교육을, 인터넷 시대가 됐을 때 인터넷 교육 강화하고 소프트웨어가 중요했을 때 소프트웨어

고등학교 만들고 그런 것과 지금 뭐가 다른지를 모르겠습니다.

마이스터고도 AI나 소프트웨어 고등학교를 강화시킨다고 하고 초중고의 AI 중점 학교를 확대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AI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가, 근본적으로 어떤 질문을 우리 아이들에게 주고 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선 들어 보고 저도 말을 좀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장관 최교진** 위원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말씀을 사실은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에게 닥쳐올 세상을, AI가 함께 사는 세상을 고민하고 있기는 한데 실제로 우리 초중등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AI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 속에서 인간 본연의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는 범위에서 AI를 인류 전체에 유익한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신교육을 더 강화하면서 실제로 AI와 더불어 살아가는 걸 가르치려고 하는데 준비는 많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차지호 위원** 준비가 많이 안 돼 있습니다.

장관님, 이건 구체적으로 장관님께서서는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교육부장관 최교진** 예.

○**차지호 위원** 과연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 혹은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일할 시점은 2040년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40년대에 한국이 어떤 산업 구조로 만들어져 있을지 그리고 그 산업 구조를 지탱하는 지식체계가 어떻게 될지, 과학기술 관련한 부분들이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AI가 형성된다고 하면 그때 필요한 자질은 무엇일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혀 구체적으로 질문이 던져져 있지 않습니다. 도대체 2040년, 50년을 내다보고 준비해야 될 부처가 그 시기에 대한 변화를 읽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 아이들의 교육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저는 사실 굉장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다른 영역들은 저도 좀 공부를 해 보니까 알겠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고등학생들이 내가 무슨 전공을, 대학 가서 무슨 전공을 해야 되느냐고 얘기할 때 저조차도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하물며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사회에 나가게 된 시점 그리고 그때 우리 사회에 필요한 지능체계가, 지식체계가 어떤 것일지에 대한 논의를 가장 먼저 시작하고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부분이 교육부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모호한 방식으로 AI와 적절한 인성교육과 함께 섞여 나간다 이런 방식으로 질문하면 우리나라가 경제나 산업의 동력들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갈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미래적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들이 있습니다. 대학교육 같은 경우를 강화시킨다고 하셨는데 사실 AI 시대 때 가장 주요한 변화 중의 하나는 일자리가 AI랑 협력하는 일자리가 될 거고 그렇게 됐을 때 다양한 직업들이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사실 하나는 이미 직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직업들로의 전환, AI 연결형 일자리로의 전환들, 약 절반의 일자리가 AI 기반의 일자리로 바뀌게 될 건데 이 사람들에게 대한 재교육이나 평생교육의 체계가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달성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십수 년간 교육을 어렸을 때 받고 나머지 수십 년을 그 배운 지식으로 먹고살 수 있는 시기가 아닙니다. 그랬을 때 대학교육이라는 게 지금과 같은 교육으로 이루어질지 혹은 나노디그리 혹은 마이크로디그리,

마이크로 학위 프로그램처럼 평생 계속 어떤 일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교육받을 기회가 있을지 그리고 그 교육이 여러 개 대학에서 중심으로 제공이 될지 혹은 한두 개의 온라인 기반의 디지털대학 같은 데서 연계가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들도, 사실 지금 구조적인 재원들이 필요한데 저는 너무 안타깝게도, 교육부 내에서 미래를 예측하고 그 예측에 기반해서 현재 교육시스템을 짜야 되는 그런 방식들을 택하고 있지 않은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또한 지금 아이들이 현재 살고 있는 세계와 아이들이 컸을 때, 막상 대학을 졸업했을 때 혹은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 맞게 된 세계는 굉장히 다를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 아이들이 지금 세계와 다른 세계를 살게 됐을 때 그 미래사회에 대한 적응력은 어떻게 키워 줘야 되나.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AI를 어떤 기술로만 보지 마시고 하나의 지능체계, 새로운 형태의 지능인데 그러면 결국 아이들이 지금은 교육받고 20대는 위에서 오더를 받아 가지고 혼자 일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지금은 AI와 지능체계 간 계속 협력해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초중고등학교 때도 다른 지능체계들이랑 협력하면서 일하는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한 교육들, 이 모든 것들의 근본적인 논의가 만들어지고 가장 큰 구조적인 변화가 요구되는 게 교육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부장관 최교진 위원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짧은 시간에도 많이 배우고 이렇게 지적해 주신 사항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 AI의 가장 전문가들을 모시고 그냥 단순히 교육부 안에서 실무적으로 준비하는 수준을 넘어서 AI 시대를 교육적으로 어떻게 준비할지를, AI 교육을 위한 추진단이라도 구성을 해서 차관님이 주재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지적하신 그런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대응책을 세우도록 하고 그때도 위원님께도 많은 지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지호 위원 자문기구 같은 게 만들어질 때, 사실 국내에 AI 전문가 풀들이 넓지가 않습니다. AI 엔지니어들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AI가 결국 교육체계, 의료체계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전환시킬지에 대한, 전문가 풀들은 두텁게 형성돼 있지 않습니다, 전 세계도 마찬가지고. 이랬을 때 이게 학제를 넘어 가지고 협력할 수 있는 그리고 새롭게 미래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룹들이 꼭 가까이 구성이 되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 얘기를 이번에는…… 행안부장관은 안 계시는 것 같으니 경찰청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AI가 사실 우리 사회에 여러 군데로 적용되고 나갔을 때 하나 주요하게 적용될 수 있는 분야가 치안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경찰의 주요 업무들. 그랬을 때 하나 지금 걱정되는 부분들은 이번에 캄보디아 사태를 겪고 그런 초국가범죄들, 보이스피싱·스캠 등과 같은 초국가범죄들이 얼마나 우리 국가 안에 침투해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피해를 양산하고 있고 그게 현재 대응하듯이 국내에 치안들과 경찰력을 강화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단절되기 어려움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초국가범죄들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우리 국가를 넘어서 공조체계를 만들고 이번 APEC 때 얘기했듯이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 간에 이런 초국가범죄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만들어지는 것은 한쪽으로 중요하

고요.

다른 한쪽은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이스피싱이나 아니면 전세사기 같은 부분 혹은 다른 스캠 같은 부분들이 사실 제가 가진 AI 관련된 지식으로 보면 현재 기술들만으로도 상당 부분이 실시간 차단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개인정보 문제들이 좀 있지만 사용자의 동의 안에 통신사들과 금융사 그리고 경찰 간의 공조된 체계들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AI로 이런 식의 범죄들,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들을 예방할 수 있는 조처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고 하면 사실상 지금과 같은 사후 대응이 아니고 실시간으로 차단하고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 한국의 어떤 범죄산업보다도…… 1월에서 9월까지 1조가 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게 범죄가 아니라 산업이라고 하고 1조가 넘는 매출이 일어나는 곳이라고 하면 온갖 스타트업들이랑 대기업들도 달라붙어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시장만, 이 범죄 시장만,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그리고 스캠과 관련된 시장만 1조가 넘고 우리 가까이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 우리 가족들이 혹은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피해들을 당하고 심지어 일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떻게, 이런 초국가범죄들이 국내 경찰력만 동원을 해서 가능한 겁니까?

두 가지로 확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공조체계를 갖추시고 두 번째는 한국 안에서 과학기술, AI 기술들을 가지고 실시간으로 이 범죄들을 모니터링해서 실시간으로 차단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행안부에서도 여러 가지 AI 전환 계획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주요한, 국민들의 몸에 와닿는 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기술 그리고 앞으로 1년에서 3년 사이에 상용화되는 기술, 저희가 적절한 AI 생태계를 체험과 연결시킨다고 하면 보이스피싱 범죄, 스캠 범죄, 전세사기 이런 부분들은 사실 거의 대부분의 범죄들이 실시간 차단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국제 공조를 통한 그런 검거활동과 더불어서 사전에 예방하는 활동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간 통신사들 그리고 금융사들 그리고 수사기관들이 협력을 해서 AI 기술 등을 이용해서 사전에 탐지하고 차단하는 그런 활동을 일부 해 왔고 이번에 정부 합동으로 보이스피싱 합동대응단이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에 관계부처가 다 나와 있고 관계부처에서 민간의 통신사나 금융 쪽에 협력을 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차지호 위원 노력한 부분들은, 국민들은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지금 올해 당장 1조가 넘는 피해가 발생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데 왜 그거를 생태계로 안 만드십니까? 바로 조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지금 활용하고 있는, 정부 합동으로 통신사·금융사 간 시스템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부분이 있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에서 개발된 기술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도 접목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차지호 위원 여러 부처가 마찬가지로인 것 같습니다. 지금 AI 전환 관련해서 상식적으로 우리가 가진 공공시스템, 치안·의료·교육 이 모든 시스템에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각 부처에서 AI 관련된 여러 내년 예산안을 잡아 놓은 것을 보면 지나치게 협소합니다. 개별 프로젝트나 모델 단위에서 뭔가를 개발하는 걸로 이 문제를 치환하고 있는데 각 부처에서 맡고 계신 영역, 사회시스템 영역들의 AI 전환들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근본적인 생각을 해 주시고 AI를 비롯한 몇 가지 기술로 인한 전환 부분들을 가지고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전환할지에 대한 로드맵을 구성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무부장관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전형적으로 오늘 자리에 나오는 질문들과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민 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민 문제, 인구 이동 문제는 여러 분야랑 연계돼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이 피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인구구조 변화지요. 우리가 이미 적게 태어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다시 태어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경제구조는 사실 외부에서 인구 이동이 없으면 유지되기가 가능한 인구구조가 아닙니다. 그랬을 때 결국 우리는 이민자 사회로 갈 수밖에 없고, 예전에 다문화 사회나 여러 가지 조치들이 이루어졌지만 그런 식의 결혼 이민들이나 아니면 한국에서 조금 힘든 일들로 들어오는 노동자 외에 사실 첨단기술 분야 혹은 조금 더 많은 훈련이 요구됐던 분야에 해외 인력들이 연결되지 않으면 사실 한국의 주요 산업구조들은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구구조 변화 이외에 AI를 비롯한 몇 가지 과학기술 기반의 산업 전환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인재 문제입니다. 그랬을 때 한국은 이 이민 거버넌스에 대한 다른 프레임을 구성해야 되고 글로벌인재청과 이민이 연결된 하나의 새로운 이민 거버넌스, 인구이동 거버넌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때고 그게 지금 법무부에서 조금 어떻게 보면 단속하고 규제 위주의 정책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근원적인 패러다임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고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다른 부처와 협의하에 이민 관련, 인구이동 관련된 거버넌스를 추진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까지는 이민정책이 약간 법질서 유지 차원의, 어쨌든 소극적·방어적인 차원의 정책이 위주가 돼 왔습니다. 지금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에 보다 적극적인,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인재들을 유입하는 그런 정책으로 전환을 하고 있고요.

이거와 관련해서는 저희 법무부만으로는 안 되고 여러 산업계의 요구를 대변하는 관련 부처라든가 또 외교부라든가 하여튼 전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논의기구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차지호 위원** 우리나라의 생존이 달린 일이니 꼭 큰 프레임 전환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힘 부산 사하갑 이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권 위원** 부산 사하갑의 이성권 위원입니다.

오늘 저는 경찰청, 행정안전부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를 대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

습니다.

청장님,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 맞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맞습니다.

○이성권 위원 지금 맞다고 생각하세요? 적어도 민중의 지팡이가 되려면 민중의 삶을 보살피는, 특히 민생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공무원들이 제대로 대접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중간고리 역할을 하고 있는데?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그렇습니다.

○이성권 위원 그래야지 민중을 제대로 살피는 지팡이가 버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그렇습니다.

○이성권 위원 그런데 지금 제대로 되고 있나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이성권 위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하고……

○이성권 위원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다라는 건 최근에 언론, 특히 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사진전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번 PPT 띄워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참 보기 좋습니다. 한쪽은 APEC 성공했다고 자축하는 모습이고 한쪽은 그 APEC 성공을 위해서 희생된 경찰기동대의 모습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이중성이고 우리의 얼굴이고 자화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의 질타와 또 예결위를 통해서, 행안위를 통해서 많은 질타가 있었는데 한마디 좀 하시지요. 적어도 경찰에 대한, 수뇌부로서 사과의 말씀 정도는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저희가 APEC 기간 중에 급식, 숙소, 대기장소 등 근무여건이 부족했던 부분들은 인정을 하고 우리 직원들의 그런 의견이 많다는 것을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직무대행으로서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세심하게 분석을 하고 보완방안을 마련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권 위원 청장님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한다고 했지만 저는 이미 재발된 상황이 이번 APEC 때 경찰기동대의 저런 초라하고 처참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성권 위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PPT 다음 한번 띄워 보시지요.

경찰기동대가 지금 상황이 어떤가 아시지요? 저기 PPT 보면 왼쪽 하단에 있는 표가 뭐가 하면 일반공무원들, 국가공무원들의 일인당 월평균 초과근무시간을 얘기합니다. 2024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16.7시간이에요. 이게 행안부 자료입니다.

그런데 오른쪽 한번 보세요. 경찰기동대가 초과근무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지금 보여 주고 있습니다. 올해 2025년 8월까지 평균을 따져 보면 서울청은 91.9시간입니다. 경

기북부청은 116.6시간이에요. 경찰공무원의 7배, 5배, 제일 적은 데는 4배 이상 초과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왼쪽 표의 상단에 보면 나오는 것처럼 올해 초에 있었지요, 서울 기동단 소속 경찰이 자택에서 숨졌습니다. 21시간 동안 연속 근무해서 과로사로 숨졌어요. 2월 달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구조적인 원인에 대해서 한번 경찰 수뇌부는 생각을 해 봤습니까?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재발이 이루어진 겁니다. 왜 이리 무책임한지 모르겠어요.

그다음 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8월 달에, 큰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8월 15일이 되면 서울에서 집회를 많이 하지요, 광화문광장을 중심으로. 청장님 맞지요? 그렇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맞습니다.

○이성권 위원 한번 보면, 위에 나와 있습니다.

8월 달에 8·15 집회 때 동원되었던 경찰기동대의 숫자가 나와 있는데요. 연도를 한번 보세요. 2022년도 20부대, 23년도 50, 24년도 56 그리고 올해 64, 집회를 막기 위해 가지고. 갈수록 이렇게 늘어나요.

그 밑의 표는 보면 뭔가 하면, 대통령 국민임명식이라는 게 있었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이성권 위원 저는 도무지 납득이 안 갑니다.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그다음 날 취임식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왜 국민임명식을 했는지 저는 납득이 안 가요. 이것 셀프 대관식을 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동원, 본인은 그렇게 빛이 나지요. 언론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내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라고 빛을 낼 수 있지만 그 과정에 희생된, 밑에 경찰기동대의 모습을 또 보세요. 추가로 동원됐어요.

그다음 페이지 한번 봐 보시지요.

청장님, 서울청에 경찰기동대가 몇 개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서울청에 60여 개가 있습니다.

○이성권 위원 60여 개? 청장님,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청장님인데 서울청의 기동대가 몇 개인지도 모르시나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

○이성권 위원 몰라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성권 위원 이게 경찰 수뇌……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65개입니다.

그런데 그날 집회에 동원된, 임명식에 동원된 경찰기동대가 58개 부대입니다. 90%가 동원이 됐어요. 서울 전역에 있는 경찰기동을 다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앞의 표에도 나왔지만 타 지역에서 다 끌고 왔어요. 각각의 지역에서 치안과 민생을 살피야 될 경찰기동대들이 그 대관식 하나, 셀프 대관식 때문에 다 올라온 거예요. 제가 재발이라는 이유가 이겁니다. 이게 평상시의 모습이에요.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저희가 대규모 행사로 이렇게 동원을 하면 그에 따라서 끝나고 나면 휴식을 좀 취하게 하고 일과 휴식이 균형을 이룰 수 있게끔 기동대도 쉴 수 있게……

○**이성권 위원** 그 말씀 하실 것 같은데 저 표를 한번 보세요.

그날 셀프 대관식에 동원된 기동대의 근무시간입니다. 17시간 이상 근무한 부대가 10개 부대예요. 24시간 중에서 그러면 잠을 몇 시간 잤다는 말입니까? 씻고 밥 먹고 이런 시간 다 빼고 나면 잠도 못 잤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14시간 이상으로 근무한 부대가 16개 부대입니다.

방금 말씀한 건데 이게 교대 어찌고…… 그게 말이 되나요?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물론 이번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겠지요, 자화상입니다. 어떻게 민생을 위해서, 치안과 민생을 책임져야 될 일선 경찰들을 이런 홀대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국민주권정부라고 그렇게 자화자찬하는 정부에서 더 심하게 지금 안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지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이건 국민주권정부가 아니에요. 이재명주권정부입니다. 그리고 정상국가라고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국가 공권력의 가장 핵심이 뭘니까? 군대와 경찰이에요. 그런데 경찰이 이렇게 된다?

왜 우리가 계엄과 관련해서 그토록 국민들이 비난을 하느냐? 군대라는 공권력을 잘못 동원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똑같은 양상입니다. 동전의 양면, 거울의 이면이에요. 그래서 이걸 진지하게 경찰 수뇌부와 현 정부가 제도적인,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매번 이럴 거잖아요. 그 과정에 과로사하는 경찰기동대 또 나타납니다. 우리의 젊은 사람들을 우리가 스스로 희생시킬 수 있나요?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경찰 수뇌부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되고 행정안전부, 총리실 쪽에서 대응책을 마련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일선 현장 직원들의 근무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권 위원** 좋습니다.

다음 질문은 행안부로 가겠습니다.

행안부 누가 나와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본부장 나와 있습니다.

○**이성권 위원** 차관도 안 계시고?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성권 위원** 좋습니다.

PPT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국가균형발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렸습시다만 균형발전은 대통령이 말씀한 것처럼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라고. 동의하시지요, 본부장님도?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예.

○**이성권 위원**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5극 3특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지금 실현하기 위한 방도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 보시지요.

이건 부울경 메가시티 관련된 겁니다. 지방시대위원장으로 김경수 위원장이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쭉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들입니다. 핵심은 그런 거겠지요. 메가시티라는 건 5개의 극을 형성하듯이 기존의 행정체제를 통합해서 거점을 만들어 보겠다, 성장 거점을 만들겠다는 취지겠지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예.

○이성권 위원 그러면 핵심이 있어야 되고 그 핵심끼리 연계된 효과를 거두는 게 중요하겠지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예.

○이성권 위원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이재명 정부가 그것을 적어도 부산·울산·경남에서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북극항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예.

○이성권 위원 그리고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전재수 의원을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해서 해수부 이전을 포함한 산하기관 그리고 또 북극항로 추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지고 있는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아마 행안부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기존의 노선이 아닌 북극항로를 통하게 되면 적어도 10일 이상이 단축이 되고 경제적 비용을 30% 이상 절감하게 되고요.

또 오른쪽에 나오는 것처럼 북극항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방안들을 쭉 이렇게, 제가 공약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본부장님도 이 점을 아시고 동의를 하시지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고, 하여튼……예.

○이성권 위원 자,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북극항로는 듣기에는 아주 좋습니다. 이게 실현이 되면 우리로 봐서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글로벌 허브도시로 성장이 가능한 그런 장점이 있지요.

그러나 거기에 가기 위해서는 리스크들이 좀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기후 리스크고 두 번째가 기술 리스크, 세 번째가 정치 리스크입니다.

기후 리스크는 뭐가 하면 현재, 북극은 아직도 빙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아시지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예.

○이성권 위원 그 빙하가 녹는 시기가 한 4개월 정도, 다 녹는 게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녹는 게 한 4개월 정도 됩니다.

그러면 선박이 다니려고 하면 당연히 쇄빙선이 필요하겠지요. 그렇지요? 현재적 조건에서 혹시 어떤 선박들이 다니는가 아시나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위원님이 미리 질의를 안 주셔 갖고 제가 정확히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성권 위원 본부장이 잘 모르시니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은 벌크선이나 그다음에 원유와 관련된 선박이 부분적으로 다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빙하 때문에, 쇄빙선은 작거든요. 얼음을 깨는데 그 뒤를 지나는 배가 클 수가 없습니다. 작은 배가 다니다 보니까 벌크선과 원유선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글로벌 허브의 역할로서 물류의 중

심이 되기 위해서는 대형화되고 있는, 시대적으로 대형화되고 있는 컨테이너선이 지나가야 되는데 지금 못 지나갑니다.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된 기후 리스크가 존재하는 거지요. 기후 온난화 때문에 언젠가는 녹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시점이 언제 올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대비를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기후 리스크에?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예.

○**이성권 위원** 그런데 당장은 바로 컨테이너 대형선을 보낼 수 없다는 건 현실인 거지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기술 리스크가 있어요. 한번 보시지요. 보면 쇄빙선 그다음에 강한 추위에 견뎌야 되니까 내빙선도 필요하고 자율운항기술도 필요하고 극지통신인프라라든지 여러 가지, 그다음에 지도 같은 것, 해상지도 같은 것도 필요하겠지요. 그런 기술적인 준비도 해야 됩니다. 지금 되어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치 리스크입니다.

정치 리스크는, 결국 가장 많은 영향을 지나는 게 어느 나라지요? 러시아지요. 그렇지요? 러시아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러시아로부터 우리가 동의를 받아야 되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적인 리스크를 안고 있는 게 북극항로 개척입니다. 그런데 당장 지금 될 것처럼 너무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저는 조금 답답해요. 차분히 준비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제가 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 아닙니다만 해수부가 간다든지 해양산업이 부산으로 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성권 위원** 다 그것 때문에 가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북극항로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산업들이 한꺼번에 발전하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이성권 위원** 그래서 제가 똑같은 얘기에요. 해수부가 와서 그런 중심적인 역할을 부산에서 하겠다라는 거니까 필요하지요. 왜? 그 모든 중심이 부산에서 이루어지니까, 결국은 물류의 중심이 지금 거기에 가 있으니까.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그런데 핵심이 뭔가 하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세 가지 리스크를 얘기했지만 세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가 물류입니다.

본부장님 잘 모르시겠지만 부산항이 가지고 있는 물류가 글로벌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환적항으로서 세계 2위입니다. 컨테이너 물동량으로 봤을 때는 세계 7위입니다. 해운물류와 관련해서는 부산이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아시아와 세계적인 물류 도시라고 이미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부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게 트라이포트지요. 그러면 항공물류까지 겁니다. 그게 가덕도신공항하고 연계가 되어서 항공물류가 새롭게 생기게 되겠지요. 국제 노선이 아시아나 가까운 데만 아니고 유럽이나 미주 노선까지 가게 되니까. 그다음에 철도와 관련된, 이거는 북한이 단절돼 있지만 먼 미래를 내다봤을 때 트라이포트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걸 전제로 했을 때 물류와 관련된 법적·제도적 기반이 새롭게 마련되

어야 되겠지요? 지금 현재는 다 분산되어 있거든요. 맞지요? 그래서 물류 특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위원님, 제가 내용을 지금 정확히 모르고 있어 가지고……

○이성권 위원 하여튼 필요하고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나 정당을 떠나 가지고 다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가서 금융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금융이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해운과 물류 그리고 해상, 수산 이 모든 것들은 보험이라든지 금융과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분야에 특화돼 있는 금융이 발달이 안 돼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노무현 대통령 시대에 한 게 서울 중심의 금융 중심 도시에서 10개의 혁신도시를 만들면서 부산에 금융 중심 도시로서의 기능을 하나 더 만들어서 문현동에 금융 혁신 지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파생상품만 다루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북극항로 개척을 위해서는 북극항로와 관련된 다양한 보험과 그다음에 금융의 기능이 발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한 법 제도적인 것을 미리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동의를 하시지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예.

○이성권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로 가 볼게요, 기술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왜빙선, 내빙선 그다음에 자율운항이라든지 지도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도 첨단기술과 관련된 새로운 법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걸 종합을 해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다음 페이지 한번 가 보시지요. 아까 왼쪽에 있는 게 5국 3특에서 주장하는 부산 지역에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쪽 망라된 내용이고요. 그걸 오른쪽으로 연결하면 이미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국제 물류 특구, 금융 특구 그리고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내용이 핵심이 세 가지 들어가 있어요. 이 법이 통과되어야 되는데……

그다음 페이지 보시지요. 시간이 제가 얼마 없으니까.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고 22대 국회에도 발의되어 있어요. 전재수 장관님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이헌승 국회의원하고 함께, 여야가 함께 발의한 법안이고 행안부에서 정부부처 모두 조정을 해 가지고 정부부처가 이견이 없는 안으로, 통합안으로 정부와 국회가 같이 만든 법안이 지금 행안위에 계류되어 있어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민주당 국회의원이 단 한 분도 협조를 안 해 주셔서 가지고 법사위에 그냥 잠자고 있어요. 예결위원장님도 같은 위원회 소속이기는 한데……

그래서 정부가 이 점에 대해서 기존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의회에 같이 함께 얘기를 해 달라는 말을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

다는 점 또 관련 법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잘 명심하고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담당이 아니라서 답은 못 드렸습시다만 이런 우려가 있었다는 점, 말씀이 있었다는 점은 명확하게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권 위원 지금 현재 차관님이 그 법안 성안을 할 때 주도했던 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예, 제가 차관에게도 전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의 박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승 위원 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의원 박희승입니다.

법원행정처에서 지금, 법사위가 계속돼서 지금 차장님이 나오셨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법사위 관계로 차장이 대신 출석해 있습니다.

○박희승 위원 최근 서울고법 국감에서 김대웅 법원장이 이 대통령 재판 진행이 가능한냐는 야당 위원 질문에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불가능은 아니다’ 이렇게 답하면서 다시 논란이 부상됐는데요.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은 현직 대통령의 형사 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재판중지법이 불필요하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들이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보이는데 동의하십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현재 재판이 계류 중인 사안이고 재판부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승 위원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은 중지된다는 게 대다수 헌법학자의 견해입니다. 헌법상 당연히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니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인데요.

헌법상 대통령 재판은 이미 중지되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입법이 불필요하며 시기적으로 법원이 재판을 재개하더라도 사후 대응이 가능한데 정쟁을 유발하는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법원이 헌법을 위반해 재판을 재개할 경우 위헌심판이 제기될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재판 재개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재판 재개로 인한 법적·정치적 부담을 대체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법원 인사가 바뀐다고 선불리 재판을 재개할 경우 지난번 공직선거법 판결과 같이 또다시 대법원이 정쟁의 소용돌이에 휩쓸리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헌법 84조의 해석과 관련해서는 여러 견해가 나뉘고 있고 종전 재판부에서도 그 부분을 일정 부분 고려해서 그와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승 위원 현실적으로 그게 지금 위헌 논란이 있고 서로 간에 견해가 다르고, 그래서 이론적으로 가능할지는 몰라도 현실적으로는 그것을 재개해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재판장이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그것은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현재 재판장들이 그 부분 고려해서 판단을 한 바가 있다는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희승 위원**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아마 우겨서 재개해서 재판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위헌심판 제청이 될 것이고, 결국은 현재 가서 만약에 위헌 결정이 나 버리면 재판을 진행해도 무효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위헌 결정이 난다면 무효가 되는 것 아니에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그런 부분도 고려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희승 위원** 저는 현실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헌법 84조는 단순히 개인의 면책이 아닌 대통령이라는 신분의 직무수행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도 대선 당시 4건의 사건에 기소된 트럼프 대통령 당선 후 면책 특권을 적용해 재판 중단을 결정했고, 프랑스도 대통령 임기 중에는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병도 위원장, 윤후덕 위원과 사회교대)

대법원은 핵심 논란인 헌법 84조 해석에 명확한 의견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대법원이 이런 논란에 대해서 의견을 검토해 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구체적 사건에 대해……

○**박희승 위원** 아니, 구체적 사건이라도 그것은 개별 재판부의 판단이고 계속 정치적으로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법원도 어차피 법률 해석을 하는 기관 아닙니까? 판단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해석이 엇갈릴 경우는? 어떻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대법원에 사건이 올라온다면 대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만 아직 하급심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이라 거기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법리적 판단을 내리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희승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성호 장관님도 안 오셨나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여기 있습니다.

○**박희승 위원** 죄송합니다.

대장동 향소 포기를 두고 국민의힘이 사실을 왜곡하고 사법시스템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적 공세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냥 정치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희승 위원** 사법의 정치화, 정치의 사법화가 맞물려 온갖 사회적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정치의 자리를, 법은 법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최근 야기되고 있는 논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이 사건에 대한 정부의 특별한 입장은 없습니다. 제가 법무부장관 취임하면서 저는 원칙적으로 검찰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인정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 이래라저래라 지휘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만 제 의견 표시를 자꾸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구체적 사건에 대해 지휘했다고 하면 서면으로 했을 겁니다. 오히려 저는 검찰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신중히 판단하라는 얘기를 마지막에 했던 겁니다. 그 판단은

책임과 결정을 본인들이 지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희승 위원 수사·공판팀이 항소 제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했음에도 상급 지휘부가 항소 제출 금지를 내렸고 이 과정에서 법무부장관과 차관이 반대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공개적으로 유포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데요. 법무부 차원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강백신 검사의 발언과 그 출처를 철저히 조사하고 규정에 따라 징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검사들이 어떤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 명확한 증거라든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의견을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좀 자제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향후 그 경위는 잘 조사해 보겠습니다.

○박희승 위원 행정처 차장님, 대법원도 사실은 과거에 사법농단 때문에 많은 판사들이 아마 수사를 받고 기소된 사례가 있었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박희승 위원 기소된 사람이나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한 10건 내외, 구체적인 숫자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박희승 위원 대부분 무혐의 처리되고 기소된 사건들도 대부분 다 무죄가 났지요, 현재 진행 중인 것 외에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무죄로 확정된 사건도 있고 현재 진행 중인 사건도 있습니다.

○박희승 위원 그런데 그 무죄로 확정된 사건도 1심에서 무죄 났는데 또 검사가 항소해서 항소심 가서 무죄 나고 또 대법원 가서 무죄 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박희승 위원 이것은 법원도 지금 똑같은 국가기관인데 검찰이 수사해서 기소를 했고 법원에서 판단해서 무죄가 났는데 계속 항소하고 상고해서 피고인을 괴롭히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박희승 위원 말씀을 해 보십시오. 법원도 당하지 않았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제가 특별히 드릴.....

○박희승 위원 지금 미국에서는 무죄가 나면 항소합니까? 어떻습니까? 대부분 확정되지 않아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무죄가 난 경우에는 항소를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승 위원 우리나라도 이제 그럴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1심이나 2심에서 무죄 나서 항소심 가서 유죄로 뒤집어지는 비율이 몇 %나 됩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굉장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승 위원 굉장히 낮지요? 결국은 우리가 형사소송법에, 헌법도 마찬가지고 무죄추정의 원리가 지배하고 있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그것은 맞습니다.

○박희승 위원 현실에서는 왜 이것을 방치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사법의 정치화, 정치의 사법화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대법원 차원에서라도 가만히 있지 말고 논평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원조차도 당했잖아요. 현직 법관들도 당했는데 일반인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미국에서 그런 사례들도 있고 그런데 왜 그걸 가만히 방치하고 있습니까?

저도 당하는 어느 판사의 이야기를 절절하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1심 무죄 나고 또 본인이 변호사 선임해서 항소심 대응하고 또 대법원 대응하고, 어마어마한 변호사 비용과 그다음에 판사 업무에서 일정 부분 배제되고 그 기간이 한 4~5년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개인적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무죄 받게 기소했던, 수사했던 검사들은 제대로 처벌받지도 않고 오히려 승승장구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잘 아시지요? 윤석열, 한동훈 이런 사람들.

법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명확한 의견 제시를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차장님?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

○박희승 위원 아니, 좀 건의를 하십시오, 가만히 계시지 말고. 법원이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를 보호하는 기관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그것은 맞습니다.

○박희승 위원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십시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박희승 위원 경찰청에서……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직무대행입니다.

○박희승 위원 제2중앙경찰학교 관련해서 경찰청에서 최종 입지 선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원래 작년에 발표될 예정이었는데 계속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행안위 국감에서는 유재성 직무대행께서 연내 발표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의 연구용역이 계속 늦어지는 이유가 뭐고 언제쯤 결정될 것 같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저희가 1차 후보지 세 곳을 선정했고 최종 후보지를 공정하게 선정을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데 연구용역이 좀 보완할 부분이 있고 그래서 금년 내에는 어렵고 내년에 최종 후보지 선정을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희승 위원 어쨌든 경찰 교육을 위해 가장 적합하면서도 국가균형성장 측면에서도 타당한 곳으로 저는 최종 부지를 결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원칙에는 동의하시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1차 세 군데 선정을 했기 때문에 이 세 군데 중에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공정하게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승 위원 지난 종합정책질의에서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국가균형성장 측면이라든지 비용 절감, 시설 확장 가능성, 영호남 교통의 중심지, 전국적인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점 등 고려했을 때 가장 적합한 곳이 저는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전북 남원이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해서 공정하게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승 위원 제2중앙경찰학교가…… 1경찰학교는 지금 충주에 있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그렇습니다.

○박희승 위원 2중앙경찰학교가 남원에 설립된다면 영호남 상생협력과 이재명 정부의 5대 국정 목표 중 하나인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동시에 이룬 모범 사례가 될 것입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반드시 공정하게 결정이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승 위원 저출생 시대에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적절한 산후 돌봄이 중요합니다. 윤호중 장관님.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본부장 나와 있습니다.

○박희승 위원 아, 그렇습니까?

현재 공공 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은 지자체의 고유 사무로 되어 있는데요 이로 인한 한계와 어려움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예, 설치는 하고 있는데 운영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자치단체들에서 좀 어려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승 위원 공공 산후조리원은 4.5%에 불과하고요, 전국적으로. 지방…… 전체 산후조리원 중 10곳 중 6개가 서울·경기에 집중됐고 기초지자체 중 10곳 중 4곳은 산후조리원 자체가 없습니다. 집 근처에서 조리를 하고 싶어도 수도권으로, 지방에서도 비교적 큰 도시로 원정 조리를 하러 가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복지부가 인구감소지역 공공 산후조리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건립비 지원 외 운영비 등 예산 지원 방식을 지금 행안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저희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일부 공공 산후조리원에 운영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승 위원 그런데 계속 지금 협의만 하고 있지 지원이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이것은 지금 현재로는 건립비만, 관련 법률에 건립비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 좀 개정을 해서 운영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박희승 위원 아, 그러면 법이 개정돼야 그 이후로 지원이 된다는 건가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그렇습니다.

○박희승 위원 그러면 언제 법안이 통과될 예정입니까?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지금 현재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저희로서는 올해 정기국회에 좀 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희승 위원 지금 올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기국회에 이번에 같이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희승 위원 어쨌든 조속한 법 개정과 함께 행안부가 인구감소지역의 안정적이고 지

속적인 공공 산후조리원 지원을 위한 운영비가 차질 없이 편성될 수 있도록 지방소멸기금을 배분하고 향후 공공 산후조리원 업무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장기적인 예산편성 방안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승 위원** 권오을 장관님, 동학농민명예회복법에 따라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했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독립유공자로 봐야 되겠지요, 이제는?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이 점에 대해서는 박희승 위원님을 비롯해서 지역의 여론을 폭넓게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서로 입장이 다른 역사학자들에 대해서는 한자리에 모셔서 의견을 나누지 않고 각자 따로따로 만나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보훈부에서 굉장히 심도 높게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희승 위원** 이러한 논쟁은 지금 한 60여 년 이상 계속되고……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한 10여 차례 이상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승 위원** 당시에는 동학농민혁명을 동학난으로 폄훼하는 등 제2차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독립운동 연구가 빈약했고 일제식민사관 편술 기구인 조선사편수회 출신 이병도 박사 등이 서훈공적심사위원회에서 항일독립운동의 기점을 1895년 을미의병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후 1990년대부터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재평가가 일어났고 현재는 항일독립운동의 기점이 1895년 을미의병이 아닌 1894년 일제의 경복궁 점령 사건이라고 발표되고 있고 역사학계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도 제2차 동학농민혁명은 항일 구국 투쟁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예, 알고 있습니다.

○**박희승 위원** 그런데 을사의병 참여자는 서훈을 받고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서훈에서 원칙적으로 배제되고 있습니다. 서훈공적심사위원회가 서훈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잘 지키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그 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역사학계에서 의견이 갈라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장관으로 취임하고 난 다음부터 2004년도 명예회복에 관한 법부터 시작해서 차례차례 다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가까운 시일 내에는 이것을 서훈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분들만 따로 만나서 또 그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희승 위원** 장관님도 지난 7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자문을 구하고 꼼꼼하게 살펴보겠다고 하셨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난 9월에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단체와 간담회를 가지면서 노력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국권이 현저히 침탈받았던 1894년 일제의 경복궁 점령 사건을 항일독립운

동의 기점으로 바로잡아야 하고 이재명 정부의 국가보훈부는 왜곡된 항일독립운동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에 그 누구보다 앞장서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정말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후덕** 박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영광스럽게 위원장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간사님 두 분 다 안 계시고, 무슨 긴 회의록 하는 모양입니다.

이어서 충남 홍성·예산의 국민의힘 강승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승규 위원** 충남 홍성·예산 출신의 강승규 위원입니다.

저는 법무부장관님, 국무조정실장님 그리고 국방부장관님 순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법무부장관님.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여기 있습니다.

○**강승규 위원** 장관님, 대장동 일대에 대한 검찰의 항소 의견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하라 이렇게 의견을 전달하셨다고 그러지요. 그런데 저는 이게 항소를 신중하게 판단하라, 항소하지 않는 게 좋다, 좋겠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장관님, 어떠셨습니까? 어떤 의미로……

○**법무부장관 정성호**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 판단의 주체가 검찰입니다. 검찰에서 판단하고 그 권한을 받아서, 권한이 있으니까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겁니다. 본인들이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지만 저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강승규 위원** 단군 이래 최대 개발 비리라고 합니다. 전 국민적 관심이 집중돼 있고요. 개발 비리가 무려 7800억 원대입니다.

법무부장관이 신중하다, 신중히 하라라는, 신중이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은, 신중이라는 의미가 그저 지휘는 공문으로 하는 것이고 그냥 신중이라는 의견만 전달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워합니다.

혹시 장관님께서서는 지휘를 하려면 구두는 아니고 문서로 해야 된다 그런 입장이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사건의 지휘를 할 수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서면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관행적으로 권한과 책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해 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강승규 위원** 그러면 저희가 범죄 사실을 추궁을 할 때 구두로 범죄를 교사하거나 지시했을 때 문서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녹취도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증언이 있습니다. 또 증언이 한두 명이 있을 때 그런 때도 인정이 안 됩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이것은 범죄하고는 비교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검찰청의 차장검사한테 직접 그런 지시를 한 것도 아니고요 법무부 내부 논의를…… 매일 사건보고 올라오면 제가 사실은 여러 의견을 냅니다. 매일 제가 신중하게 하라고 하지만 그것과 다르게 결정된 것은 매우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게 과연 항소하는 게 맞냐 그랬을 때 또 그대로 그냥 항소하고……

○강승규 위원 검찰이 대개 이런 경우 항소를 하는 게 관례였는데 법무부장관의 신중하라는 어떤 구두 의사 전달이 있었어요. 그러면 검찰에서는 그것을 당연히, 신중하라는 것은 항소를 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하라는 것이고 그 신중은 자체로 비쳐지고 그것은 검찰에게 외압으로 읽혀지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해석이 무리입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저는 검찰이 어쨌든 과거의 그러한 관행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장관 취임 이후에 사건에 대한 기계적인, 관행적인 항소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특히 무죄 난 사건에 관련해 갖고 기계적인 항소로 인해서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에게 계속 고통을 주는 거다,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표시했었습니다.

○강승규 위원 11월 7일에 항소 포기했지요, 검찰이? 그랬지요? 11월 7일이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승규 위원 그날 예결위가 있었고.

장관님, 예결위 한 몇 시에 끝났나요, 그날?

○법무부장관 정성호 저 끝까지 있었습니다.

○강승규 위원 한 11시 전에 끝났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강승규 위원 그날 치맥 파티 하셨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치맥 파티가 아니고요. 제가 국정감사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다른, 여기 국회에 와서 밤 10시 넘어서 끝났을 때는 대개 그때까지 기다린 직원들하고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치맥 파티가 아닙니다.

○강승규 위원 그렇지요. 저희들도 지금 국정감사 하고 예결위 하는데 요즘 언제 맥주 한잔 못 합니다. 그런데 그날 또 치맥 파티를 하셨다니까, 항소 포기한 날.

○법무부장관 정성호 존경하는 위원님, 파티가 아니고요 그날 저녁에 저희들이 설렁탕 먹었습니다.

○강승규 위원 밖에서. 그렇게 좀 느껴집니다. 뭔가 파티를 하셨구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진수 차관이 노만석 총장대행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도 발동할 수 있다. 어떤 의도였을까요?

장관님, 혹시 차관에게 이런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까? 또 차관이 이렇게 총장대행과 이야기한 이후에 이런 보고를 해 왔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이진수 차관이 총장대행과 그런 식의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강승규 위원 그런데 노만석 대행이 이런 얘기를 또 해요, 이진수 차관이 세 가지 안을 제시했는데 모두 다 항소를 포기하라는 내용이었다. 또 그 전에는 이런 얘기도 해요, 용산이나 법무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때 용산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용산의 민정수석실과 소통 안 할 수 없다는 얘기겠지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지 않을까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저는 그게 어떤 취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강승규 위원 그런데 이진수 차관이 또 검찰 검사장들에게 사건 경위를 설명하면서, 노만석 대행이 이진수 차관으로부터 이런 전화를 받았다 그래요. 11월 7일 날 오후 2시

쫄 ‘큰일 났다’…… 이 ‘큰일 났다’가 무슨 얘기일까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저는 그러한 의견 전달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강승규 위원** 차관의 윗선에서 항소…… 검찰은 지금 항소를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고 법무부의 지침을 기다리고 있는데 차관이 전화해서 큰일 났다, 그것은 차관의 윗선인 장관님이나 아니면 용산의…… 그 좋아하는 격노, 민주당에서 지금 그것까지 특검하고 있는데 격노가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큰일이라는 게 차관이 큰일 날 일이 뭐 있어요, 항소 포기했다, 항소 여부 가지고 지금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법무부장관 정성호** 저는 이진수 차관이 그러한 식의 어떤 의사를 전달한 사실을 전혀 아는 바가 없고요.

○**강승규 위원** 이것은 노만석 대행이 검사장들에게 설명한 때 그런 얘기가 나왔다 그래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모르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강승규 위원** 큰일 났다, 이렇게까지 나왔다고 그래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마약 수사 관련해서 백해룡 경정에게 직접 파견 지시를 내렸어요. 그런데 7800억의 개발 비리, 그 좋은 얘기로 단군 이래 최대 비리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이익이 환수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재판이 일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데 그것이 판단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항소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그런 부분의 지시를 받고 민정이든지 아니면 장관님에게 그것 좀 제대로 국고 환수해야 되는 것 아니냐. 아까 어느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공기업 등을 매각한 것이 국고를 헐값에 매각했다라고 해서 특별 지시를 해 가지고 또 조사가 이루어질 텐데 7800억의 개발……

그러니까 개발이익이라는 것은 당연히 어떤 용도나 무엇이 상향이 돼서 개발이익이 날 때 일정 부분은 개발업자나 주민들에게 돌아가지만 너무 많은 초과이익을 환수해서 공공이 나눠 가지는 것이지요. 공공에게 환원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국고하고 같은 얘기인 것이지요. 개발이익이 어떤 특정인에게 돌아가면 그만큼 국부가 들어와야 될 것이, 국고에 들어와야 할, 그게 세금이든 초과이익환수금이든 뭔가 국고가 나간 건데 그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그런 중요한 판결이었는데 아무 얘기도 없었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통령께서 이런 개별 사건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들은 바가 전혀 없습니다.

○**강승규 위원** 아까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백해룡 경정, 마약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이 수사관까지 지시를 했어요, 경정을 거기에다 파견하라. 그런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마약 사건은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마약 범죄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요청한 거고요.

○**강승규 위원** 마약 사건은 중요하고 지금 이 엄청난 개발 비리……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다음에 이 사건에 있어 범죄수익은 국고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국고로 귀속되는 게 아니고 성남도시공사로 가야 되는 건데 그야말로 민간 개발하지 않았고 민관 공동 개발했기 때문에 그나마 성남시에 이득이 있었던 겁니다.

○**강승규 위원** 성남도시공사도, 결국은 성남시와 지방자치단체도 다 이게 국고에 해당되는 거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렇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7400억은 총수익이지 이게 그 개발에 대한……

○**강승규 위원** 그렇지요. 그 7800이 이게 총수익인지……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 초과이익은……

○**강승규 위원** 아니면 국고로 환수돼야 되는 초과이익에 해당되는지는 법원에서 따져 봐야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아닙니다. 총수익이지 그중에서 정당한 권한의 범위 밖을 넘어가는 초과수익은 아닙니다, 그게.

○**강승규 위원** 장관님, 대통령실의 민정수석비서관실에 비서관이 4명이 있습니다. 그중의 3명이 대장동 또는 다른 관련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이잖아요. 그러면 다들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민정수석실의 비서관들이 대통령의 전직 변호인들이다, 그들이 다 이 대장동 사건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건에 관련돼 있다, 이분들이 법무부차관…… 용산과 소통 안 할 수 없다는 총장대행의 그런 고백 이런 것 등을 볼 때 민정수석실의 비서관 세 분 그다음에 법무부차관과 법무부, 이렇게 총장대행 등과 연결된 삼각 외압 사슬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저는 위원님의 추측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정수석……

○**강승규 위원** 추측이지요. 아직은 저도 추측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항간에서 의심하고 있고 저희들이 국민들이 의심하는 것을 장관님께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답변을 들어 보면서 국민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저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승규 위원** 그렇게 외압의 사슬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장관님, 추경호 의원에 대해서 체포동의안 지금 장관님이 제출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것 제가 제출한 게 아니라 법원에서 법무부로 이송됐기 때문에 법무부장관으로서 국회에 제출……

○**강승규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 의원은 불체포특권 포기했고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법원에서 구속영장 발부 심사를 하게 될 텐데 장관님, 추경호 의원이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 재판이 진행이 될 텐데, 구속이 된다면 정청래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국민의힘이 위헌심판 청구 대상이라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데 장관님도 그에 동의하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너무 가정적인 말씀이고요. 저는……

○**강승규 위원** 아니, 지금 여당의 대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위헌심판 청구권자는 장관님이니까 만약에 지금 여당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표가 구속이 된다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장관께서 추경호 의원 그걸 빌미로 해서 국민의힘을 위헌심판 청구를 하실 의향이 있으시냐고 묻는 겁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존경하는 위원님, 아직 본회의장에 보고도 되지를 앓았습니다. 다만 정당해산 청구는 헌법에 규정된 대로 정당의 활동이나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됐을 때 하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강승규 위원** 지금 검찰의 항소 포기 후에 검사들이 많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검사장급을 비롯해서 평검사까지 반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또 민주당에서는 한 줌의 친윤

검사들의 집단 항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 줌의 친윤 검사 중에 이번 항소 포기에 대해서 반발한 검사장급 25명 중에서 16명이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한 검사장입니다. 그러면 한 줌도 안 되는 친윤 검사 중에서, 무려 검사장의 64%를 임명했는데 이들이 친윤 검사인데 어떻게 또 검사장으로 승진을 시켰나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저는 검사장들을 친윤, 비윤으로 나눠서 인사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승규 위원** 아니, 지금 그렇게 여당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장관님, 그에 대해서 동의하시냐를 제가 묻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러한 것은 정치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검사장들이 그래도 일선 청의 책임자들인데 대검 차장에 대해서 저는 항명성, 어쨌든 설명을 요구하는 것은 집단행위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승규 위원** 또 지금 국무총리께서 발의를 하시고 이재명 대통령이 승인하셨는데 헌법준중 TF를 발동시켜서 계엄 전 6개월, 계엄 후 4개월, 10개월 동안의 관련 공직자, 예를 들면 법무부나 국방부 등의 공직자들에 대해서 휴대전화까지, PC는 물론 휴대전화까지 조사한다.

휴대전화를 어떻게 조사를 한다는 것이지요? 제출을 유도하고 안 되면 확실히 간주해서 인사 조치한다고 그러는데 이것 헌법 위반, 헌법준중 TF가 아니고 헌법파괴 TF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저는 해당 TF의 활동 방향이라든가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강승규 위원** 아니, 지금 내각에 같이 안 계세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다만 그 TF가……

○**강승규 위원** 4개월 동안, 6개월 전에 관련 공무원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을 모의했는지 그다음에 2시간 만에 끝난 계엄을 각 부처 공무원들이 또 계엄을 옹호하기 위해서, 은폐하기 위해서 어떤 조직책을 했다는 것인지, 항간에서는 적폐청산 2라고 그러는데 저는 하여튼 헌법준중 TF가 헌법파괴 TF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중대한 행위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본질적으로 정리하자는 취지 같습니다.

○**강승규 위원** 국방부장관님.

○**국방부차관 이두희** 국방부 차관입니다.

○**강승규 위원** 차관님, 요즘 장군 인사 했지요? 일부 장군 승진 인사 했지요, 합참도 하고?

○**국방부차관 이두희** 사성장군만 했고 이하는 아직……

○**강승규 위원** 혹시 요즘 장군 인사 하는데 인사검증 자료로 12·3 계엄이 내란이냐 아니냐 이런 검증 문항을 넣고 있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인사검증 내용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승규 위원** 아니, 그 내용이 지금 질문지에 들어가 있어요. 저희가 자료 확보하고 있어요, 12·3 계엄이 내란이냐 아니냐.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인사검증 자료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강승규 위원** 그런데 지금 항간에서 어떻게 하나면 내란이라고 대답한 장교는 승진시키고 대답을 안 한 사람은 어떤 조치를 할지, 지금 대기 발령 중일 것이다. 앞으로 백몇명의 장군 승진에서 이게 주요한 지침이 된다는데 저희가 지금 관련 자료를 좀 모으고 있으니까 이것은 저희가 나중에 해서 한번 조치를 보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이 내란이라고 단정하고 특검도 하고 여러 가지 국정조사도 하고 했는데 법원의 판결도 전에 내란이라고 단정하고 중립의무가 있는 공직자들에게 내란이나 아니냐라는 질문을 넣거나 또 여러 가지 헌법준중 TF라는 것을 발족을 해서 공무원들 줄 세우기를 하고 기존 정부나 또는 물갈이하려는 그런 지금의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명확히 판단할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런 부분 등이 외압 사슬, 탄압 사슬로 결국 대한민국을 무질서, 혼란으로 더욱 몰고 갈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후덕** 강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 광진구의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고민정 위원** 권익위원장님하고 법무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PPT를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계속 뉴스에 쏟아지고 있는 김건희 씨가 받았던 뇌물들 쪽 정리해 보니까 저렇게나 많았나 싶습니다. 서희건설로부터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통일교로부터 샤넬백, 이배용 국교위원장으로부터 금거북이 또 샤넬백,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백, 김기현 의원 부인으로부터 로저비비에 가방, 그 밖에도 이 밑에 있는 세 가지 것들은 제가 시기를 특정하지 못해서 이렇게 적어 놔는데요 이 가격을 다 합쳐도 수억대입니다.

권익위원장님께 여쭙게요.

지금 보면 김건희 씨가 정치, 종교, 재계, 교육 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물건들을 받았네요. 권익위원장으로서는 이 사태를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저희는 소위 최재영 목사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건만 처리했습니다.

○**고민정 위원** 제가 처리 여부를 물은 게 아니고요.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그것도 정재계, 종교 할 것 없이 각 분야로부터 이렇게 많은 물건들을 받은 것에 대해서 권익위원장으로서는 어떻게 보시냐고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부적절했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고민정 위원** 그런데 권익위에서 처음에 최재영 목사가 줬던 샤넬백과 관련해서 내렸던 결론 잘 알고 계시지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예, 알고 있습니다.

○**고민정 위원** 24년 6월에 권익위가 종결 처리를 하면서 이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지금도 같은 생각입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예, 저희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합의제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전원위원회에서 위원님들 진지한 토론을 거쳐서 의결로써 처리가 그렇게 됐습니다.

○**고민정 위원** 그러면 위원장에게 의견을 묻겠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되니까, 안 됩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공직자 배우자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처리……

○**고민정 위원** 그 당시의 정황을 물은 것이 아니고요.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거 말씀하시려고 그러지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예, 그래서……

○**고민정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 이렇게 물건을 받은 행위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이 되느냐 물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그러니까……

○**고민정 위원** 법조인이셨잖아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예, 그런데 제가 사실은……

○**고민정 위원** 아직도 거기에 대해 답을 못 하겠습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아니,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특검에서 수사 중이고 그래서 저희가 자료제출 요구 등 성실하게 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게 또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고민정 위원**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여부를 아직도 얘기할 수가 없다.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예, 수사 중이기 때문에……

○**고민정 위원** 제가 이 오래전 일을 왜 굳이 다시 말씀을 드리냐면 김건희 씨가 수수했던 연도와 날짜들을 쭉 훑어보니까요 권익위가 24년 6월에 이 사건을 들여다보고 종결 처리했던 그 시점 이전에 이미 김건희 씨는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물건을 받았더라고요.

권익위원장님 알고 계셨어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예, 권익위에서는 다른 사건은 일체……

○**고민정 위원** 위원장님은 알고 계셨어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아니요, 일체 몰랐습니다.

○**고민정 위원** 용산이나 혹은 국민의힘이나 그 당시 여당 관계자들로부터 만약에 권익위에서 이것에 대해서 혐의 있음으로 처리할 경우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적 없으세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그런 얘기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과거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이 사건 이전에 7건이 전부 다 종결 처리가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 전례도 참고를 했습니다.

○**고민정 위원** 지금 보면 24년 6월에 권익위가 종결을 결정하면서 제 생각에는 이미 김건희 씨를 비롯한…… 이것을 쫓던 사람이 지금 한두 사람이 아니니까요 이 사람들의 목숨이 다 걸려 있는 겁니다. 이것을 받았던 당시 대통령의 부인은 말할 것도 없고 대통령도 그렇고 정부 여당도 그렇고요. 그래서 권익위의 결정이 무척이나 중요해서 말도 안 되는, 배우자에게는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그래서 그때 어떤 소문, 항간에 어떤

말들이 돌았냐? 정치인들 배우자들은 이제 300만 원짜리 받아도 된다. 그래도 됩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람직하지 않은 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민정 위원 아니, 받아도 됩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고민정 위원 만약에 정치인, 저도 결혼을 했습니다만 정치인의 배우자가 3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받았을 때 권익위에서 어떻게 결정합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그게 청탁금지법으로 권익위에 신고되면 공직자의 배우자일 경우에는 제재 규정이 없다는 취지로 아마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고민정 위원 제가 물어보는 거는 그 사람에게 얼마큼의 징계와 처벌을 할 것인지를 묻는 게 아니라 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묻는 겁니다. 법 조항을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제가 그것까지 읊어 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람직하지 않다고……

○고민정 위원 청탁금지법 8조에 보면 공직자는 1회에 100만 원, 연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받으면 안 된다, 그리고 4항에 보면 공직자 등의 배우자도 받으면 안 된다. 청탁금지법 8조에 이렇게 쓰여 있네요. 받으면 안 되는 거지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그러니까 제가 받으면 안 된다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민정 위원 그 당시에 내려졌던 권익위의 그 결정이 얼마나 중요했냐? 지금 와서 보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었던 것을 한 번에 가이드를 주신 겁니다. 거대한 그물망을 치신 거지요. 왜? 물론 위원장님께서 그 모든…… 로저비비에 가방, 디올백, 샤넬백 다 알지도 못하셨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받았던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그 관계자들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권익위가 만약에 이것을 혐의 있음으로 결정을 내리게 되면 이 모든 사건들이 다 유죄가 된다. 결국은 권익위에서 그 당시에 무혐의로 종결을 내렸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바로 두 달 후에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 내렸습니다. 그리고 권익위에서는 슬픈 소식도 하나 있었고요. 맞지요? 직원 한 분을 잃으셨잖아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고민정 위원 검찰은 직무관련성, 대가성 없어서 무혐의다라는 처분을 내린 것도 알고 계시지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예, 그것도……

○고민정 위원 권익위가 영향을 미친 겁니까, 안 미친 겁니까? 반영을 했겠습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위원님,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하고 소통은 없었습니다.

○고민정 위원 그러나 권익위의 결정이 검찰 결정에 영향을 미쳤겠지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그것은 제가 판단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민정 위원 법무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당시 이 디올백 관련해서 검찰은 직무관련성이 없고 대가성이 없다 그러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억하시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민정 위원** 그 당시에 검찰의 이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서 검사장들의 집단 반발이 있었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전혀 없었습니다.

○**고민정 위원** 평검사들의 집단 반발 있었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들은 바가 없습니다.

○**고민정 위원** 25년 3월 7일 당시 윤석열 내란수괴, 구속취소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았습시다. 거기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다면서 항의했었지요. 여기에 대해서, 법원 결정에 대해 당시 검찰의 검사장들이 재항고해야 된다 하고 집단 반발한 적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런 사실은 저는 모릅니다.

○**고민정 위원** 표면화되게 집단 반발한 적은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없습니다.

○**고민정 위원** 없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고민정 위원** 저는 지금의 이 상황들을 보면서 검찰이 선택적으로 분노하는 것인가, 아니면 마지막으로 숨기고 있었던 발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밖에는 들지 않습니다. 정작 많은 국민들이 검찰이라도 반발하고 이것을 다시금 수사해야 한다, 재항고해야 된다고 해야 될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검찰이 도대체 왜 저럴까? 만약에 꾸준히 정치적 유불리 혹은 정당, 진보, 보수 이런 거 상관없이 검찰이 해야 될 일을 해당 검사들이 혹은 위에서 압력이 됐든 뭐가 됐든 잘못된 판단을 내렸을 때 검찰이 들고 일어나서 집단 반발을 계속해 왔다면 지금의 대장동 사건에 대한 집단 반발도 그 일환이겠구나라고라도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나 온 국민이 분노하고 반대하고 검찰이 뭐라도 해 주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랐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누구도 반발하지 않았고 어떤 누구도 공개적으로 의견 표명한 것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 왜 그럴까요? 왜 지금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저렇게 발작적 행위를 보이는 걸까요? 저는 이 모든 상황들이 무소불위 검찰권력을 이제는 좀 해체해야 한다는 케케묵은 검찰권력 해체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있는데 검찰은 이런 국민들하고 맞장 뜨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대장동 사건도 봐요. 검찰이 구형을 내렸던 것보다 법원이 형량을 더 높게 때렸습니다. 보통은 그런 경우 없는 것 같아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매우 예외적입니다.

○**고민정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검찰이 형량을 되게 낮춰서 줬구나, 아예 구형 자체를. 왜? 내 말을 듣고 나의 말에 따라서 조작된 발언을 해 줬으니까’라고 의심이 가지요. 왜? 법원이 형량을 구형보다 훨씬 높게 주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견됐으니까요. 그러면 검찰은 뭐냐, 스스로 무능했거나 아니면 조작의 대가였거나를 입증한 두 가지 경우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겸허하게 고개 숙이고 있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집단 반발이라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면서 저희가 잠시 잊고 있었던,

‘검찰개혁이라는 게 너무 무리한 것은 아닌가, 속도조절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같은 생각을 했던 그런 일반 국민들조차도 ‘그래, 검찰은 원래 그런 곳이었지. 잠시 내가 잊었구나’라는 것을 지금 검찰이 집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당 측에서는 특히나 장관님 흔들기에 나서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장관님께서 이재명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신 이유는 이 검찰권력을 어떻게든 정상화시켜야 된다는 것에 대한 시대적 소명을 부여받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의 각오를 갖고 계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어쨌든 검찰이 그동안 수사·기소권 등을 독점하면서 권한을 오용하거나 남용했다고 하는 많은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러한 검찰이 갖고 있는 권한을 이제 분리해야 된다, 국민의 인권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는 원래의 그 기능을 회복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입장에서 차분하게 오직 국민의 입장, 안전한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민정 위원** 어떤 세력들이 혼돈다 하더라도 굳건하게 그 문제 모두 다 해결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말아 주십시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민정 위원** 권익위원장님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100만 원 정도 되는 보편적인 백이 무슨 뇌물이나, 뇌물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권익위의 판단이 중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100만 원 정도는 그냥 보편적인 백의 가격입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제 개인적인 견해를 물어본다면 바람직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민정 위원** 100만 원 백이 무슨 뇌물이나,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의하지 못한다는 말씀이지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예, 그렇습니다.

○**고민정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냐 하면 청탁금지법 8조에 보면 1회에 100만 원,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이라는 금액의 한도를 정해 놨습니다. 그 이유가 뭐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어느 정도는 허용된, 의례적인 것은 허용된다는 취지로……

○**고민정 위원** 상식적인 수준에서 봤을 때 이 100만 원 정도를 받으면 이거는 청탁금지법에 해당이 된다는 것을 법으로 규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예, 그렇습니다.

○**고민정 위원** 그런데 국회에서는 100만 원 백이 무슨 뇌물이나…… 100만 원 백들 다 받으십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은? 100만 원 정도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쥐도 되나 보지요? 그리고 지금 이배용 위원장…… 1000만 원짜리도 있고요, 300만 원 이런 것 국민들한테는 한 달 치 월급 혹은 누구한테는 몇 달 치 월급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 정도는 받아도 된다, 권익위원장님께 여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특히 직무 관련성이 있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더 말할 나위도 없고 금액에 관계없이 수령해서는 안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민정 위원** 권익위가 훨씬 더 단호하고 엄격하게 이 사태를 정리하지 않으시면 그리고 입장을 표명해 주지 않으시면 ‘아, 100만 원 정도의 뇌물은 모든 국회의원들은 다

받아먹나 보다. 저 권력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300만 원, 1000만 원짜리는 그냥 대충 받아도 되는 건가 보다' 이렇게들 생각하십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기 계신 권익위원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께서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예, 알겠습니다.

○고민정 위원 경찰청……

○경찰청기획조정관 손제한 경찰청 기획조정관입니다.

○고민정 위원 조서관님께 묻겠습니다.

앞서서 야당 위원님께서 APEC에서 쪽잠 자는 경찰기동대, 초과근무 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저도 경찰이 무리하게 업무에 자꾸 노출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저도 같은 맥락인데 참 다르게 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냐 하면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혐종 시위 관련입니다. 여기에 경찰력 투입 많이 되고 있지요?

○경찰청기획조정관 손제한 그렇습니다.

○고민정 위원 제가 쪽 추산해 보니까요 종교나 동물 같은 그야말로 인종차별과 해당되지 않는 내용들은 싹 다 뺐습니다. 그랬는데도 집회 신고된 건만 75회고요 투입된 경찰력의 규모를 뽑아 봤더니 8650입니다.

이런 곳에 행정력이 낭비되고 정작 필요한 치안에 공백이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어려움은 없습니까?

○경찰청기획조정관 손제한 혐오 시위, 집회·시위로 인해서 시민들과의 마찰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수의 경찰력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민정 위원 그런데 아마도 혐오 표현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아마 모호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가장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제시야 되는 게 인권위입니다.

인권위원장님, 혐오가 뭡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어떤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에 대해서 비하적인 표현이라고……

○고민정 위원 그렇지요.

그다음 보여 주시지요.

‘얼굴 새까만 사람만 모으지 말고 하얀 사람 좀 데려오라니까’ 이것 혐오입니까, 아닙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혐오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고민정 위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발언 경위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민정 위원 발언 경위는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 봤으니까요.

이게 혐오인지, 아닌지도 답을 못 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제가 구체적인 경위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고민정 위원 그러면 혐오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네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저 발언 경위가 다른 예를……

○고민정 위원 그다음, ‘대규모 입국으로 전염병과 감염병의 확산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특정 국가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런 말은 혐오입니까, 아닙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고민정 위원 그다음 장.

제가 차마 제 입으로 못 읽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읽어 주시지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저도 읽는 게……

○고민정 위원 위원장님이 데리고 있었던 사람이고 위원장님이 인권위원장, 제가 같이 운영위에 있었잖아요. 계속 보호하시던 분이시잖아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혐오 표현과 표현의 자유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표현의 자유는 정치적 자유와 관계 속에서 민주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권리입니다.

물론 혐오 표현은 인종이나 국가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해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민정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후덕 고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 성북을 민주당 국회의원 김남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남근 위원 법무부장관님, 배임죄 관련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임죄를 자꾸 폐지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배임죄와 관련된 배임 행위에 대한 처벌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대체 입법으로, 배임죄가 '임무에 위배하여' 굉장히 추상적으로 돼 있으니까 그것을 구체적인 유형별로 분류해 가지고 입법하겠다 그런 취지인 거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처벌에 공백이 없게……

○김남근 위원 예를 들면 부동산 이중매매를 지금 배임죄로 처벌하는데 배임죄를 폐지한다면 부동산 이중매매죄 같은 것들을 이제 도입하겠다는 거잖아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남근 위원 금융기관 직원들이 부실대출한 것들이 배임죄로 많이 처벌받는데, 친인척들한테 담보도 없이 대출해 줘 가지고 금융기관 피해 입는 경우 많잖아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남근 위원 이게 가장 많은 유형인데, 그러면 금융기관 직원들의 부실대출죄에 대해서 도입해 가지고 그것으로 형사처벌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김남근 위원 지적재산권들, 특허권 같은 것들을 아는 사람들에게 무단으로 사용하게 해 준 것도 지금 배임죄로 처벌받는데 그러면 그런 것도 이제 지적재산권 무단사용죄 이런 걸 도입하겠다는 거잖아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남근 위원 그런 식으로 지금 추상화돼 있어서 배임죄로 어떤 게 처벌받는지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지니까 그 유형별로 구체화해 가지고 새로운 입법을 만들겠다 그런 취지인 거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런 방향도 같이 두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근 위원** 그런데 그런 게 잘 설명이 안 되니까 일부 언론에서는 배임죄를 다 폐지하고, 그래서 지금 법원에 나와 있는 거 다 면소판결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법무부장관 정성호**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김남근 위원**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배임죄로 기소돼 있는 게 있으니까 그런 의도에서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비아냥을 하는 언론들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아시는 바와 같이 이걸 오랫동안 기업계의 요청이었습니다. 상당히 불명확하기 때문에 어쨌든 경영상의……

○**김남근 위원** 제 경험으로 저도 상법 개정, 상법의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입법들을 추진하면서 재계가 항상 저한테 질문을 했던 게 주주의 이사에 대한 충실의무가 확대되게 되면 그게 배임죄도 확대돼서 형사처벌도 확대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계속했기 때문에 그때 저도 상법 개정을 해서 지배구조 개선들이 이루어지면 배임죄에 대해서는 좀 개선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배임죄가 무한히 확대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던 말이에요. 그렇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남근 위원** 그런 경위에서 지금 배임죄 개선에 관한 얘기들이 나오는 거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어쨌든 기업 측의 오랜 바람이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하는 것과 병행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요. 절대 그 과정에서 범죄행위적인 배임들이 처벌받지 않는, 그렇게……

○**김남근 위원** 그러니까 일부 언론에서는 이걸 오해를 해 가지고 배임죄가 폐지되게 되면 배임죄로 기소돼 있는 것들은 전부 면소판결받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 대체입법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검찰은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공소장 변경해서 그 대체입법으로 처벌해 달라고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관련해서 경과규정 같은 것도 두면 됩니다.

○**김남근 위원** 그러니까 배임죄로 지금 기소된 게 전부 형사책임을 안 받을 것이 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김남근 위원** 이런 건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것인데 이런 내용들을 법무부가 제대로 잘 설명을 못 해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오해나 이런 시비가 생기니까 배임죄에 대한 개선 대책들이 입법 논의가 되고 있는 게 어떤 경위고 어떤 취지인지도 잘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근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또 한편으로는 배임죄가 이렇게 많이 사용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결국은 그런 기업의 임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주주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피해가 갈 것들을 알면서도 그런 불공정한 합병, 불법적인 합병 그다음에 물적분할 한 후에 별도 상장을 해서 피해를 준다는가 이런 사건들이 계속 생기니까 먼저 형사고소를 해 가지고, 배임으로 고소를 해서 형사적으로 조사된 내용을 가지고 민사재판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배임죄의 고소 같은 게 많아지는 이유도 있단 말이에요.

(윤후덕 위원, 한병도 위원장과 사회교대)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남근 위원 배임죄에 대한 과도한 요구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잖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배임죄 고소가 월등하게 많은 나라 아닙니까? 그렇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남근 위원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게 되면 이걸 형사적으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민사책임으로 해결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법무부장관도 법조인이시니까 잘 아시잖아요. 죄형법정주의 헌법의 원리상 형법은 최후의 수단으로 개입해야지, 가능하면 민사책임이나 행정벌이나 이런 걸로 개입해서 해야 되고 그게 그런 정도로는 해결할 수 없어서, 사회적 비난의 정도가 크고 폐해가 크기 때문에 형벌은 최후의 수단으로 개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김남근 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걸핏하면 먼저 민사책임을 묻기 전에 형사고소를 해서 형사책임을 묻겠다, 감옥에 집어넣으면 문제 해결된다 이런 것은 과거 유신시대 때, 전두환 독재정권 때 그런 유산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김남근 위원 그래서 민사책임을 합리화를 하자는 거잖아요, 이재명 정부에서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김남근 위원 그런데 문제는 어려워요, 민사책임을 묻기가. 잘 아시겠지만 대기업 임원들이나 대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하면 증거자료들은 전부 대기업 내부에 있는데 그 소송을 제기하는 투자자 주주들이나 환경 피해자들이나 기술 탈취를 입은 중소기업들이나 이런 데들이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런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 전문가 사실조사제도라든가 법원에서 증인신문하지 않더라도 법정 밖에서 당사자들이 직접 신문한 내용들을 영상으로 제출하는 제도 이런 걸 지금 만들자라고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 추진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법무부장관님, 지식재산처, 법원행정처 다 물어보니까 다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김남근 위원 이것 이제 도입하시는 거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적극적으로 저희가 협조하겠습니다.

○김남근 위원 그런데 그거 외에도 민사적인 책임들을 물어서 형사책임들을 대체하려면 그거에 걸맞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집단소송제도 이런 제도도 필요하단 말입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함께 도입하는 게 좋습니다.

○김남근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는 세트와 같은 거예요.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증거가 한쪽에 편재돼 있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 도입하는 거,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이 세 가지가 이렇게 같이 세트로 도입되면서 주로 이런 제도를 통해 가지고 민사적인 책임 이런 걸 묻는 것으로 해결해 나가고 형벌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들은 좀 최소화해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원리상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김남근 위원** 그런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보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얼마나 도입돼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남근 위원** 한 30여 건, 30여 개 법률에 도입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에 대해서 손해배상책임을 물으려면 그런 징벌적 손해배상은 도입돼 있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김남근 위원** 우리가 영미법과 달리 일반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도입돼 있지 않아요. 지금 여기 도입됐다고 하는 것들이 미국에서는 소위 푸너티브 대미지(punitive damage), 징벌적 손해배상이라 그러는 게 아니라 소위 트레블 대미지(treble damage), 3배 손해배상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보통 미국에서 트레블 대미지, 3배 손해배상이라는 거는 경제법 영역에서 굉장히 불공정한 방식으로 이득을 취했을 경우에 그걸 막기 위해서는 3배의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도입된 제도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우리는 지금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도입된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확한 거는 그런 의미의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손해를 입히려고 해 가지고 그 불법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푸너티브 대미지, 징벌적 손해배상은 아직 도입돼 있지 않은 거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남근 위원** 저는 그런 투자자들, 주주들 이런 부분들이 이사들의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의도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 대해서도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제재적인 효과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이게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한번 도입 시도가, 상법에 규정을 도입하는 논의가 됐었는데 어쨌든 경제계에서는 또 반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어쨌든 입법으로 제시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김남근 위원** 그런 경제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형사책임들을 대폭 줄인다고 그러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대체재로서의 이런 것들은 도입을 해야 되잖아요. 형사책임 대신에 적어도 민사적인 징벌적 책임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래야 균형은 좀 맞습니다.

○**김남근 위원** 그래야 위하적 효과가 생기고 사회적 균형이 맞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아무런 대안 없이 그냥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자는 게 아니라 재계들이 가장 지금 두려워하고 있고 어려워하고 있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투자를 할 때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게 다른 나라에서는 형사책임이 없는 것들에 형사책임이 너무 많다는 것들인데 그런 걸 지금 없애자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걸 합리화하자는 거니까, 그 대신에 하자는 거니까 이번만큼은 저는 재계도 그렇게 무조건적 반대를 할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번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 그러면 소위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도입돼 있는 것들이 우리 법원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BHC라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그런 불공정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

상이라고 했는데 1.33배를 했어요. 저도 해 봤는데 예전에 대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했더니 1.6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나왔는데 그게 그 당시에 있어서는 최고로 높은 징벌적 손해배상이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기술 탈취한 것에 대해서 2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있었지만 원래의 실손해 자체를 굉장히 작게 잡았기 때문에 2배라 하더라도 제대로 손해배상이 안 돼서 결국은 다시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둘을 중재해 가지고 최종적인 손해배상 합의를 보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실익이 없는, 저런 정도를 가지고 대기업들이 1.33배 해서 30% 더 물게 됐다 그래 가지고 위하적 효과를 얻어 가지고 그런 갑질, 불공정행위를 안 한다, 그런 건 사실 기대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상당히 이거는 어떻게 보면 법원이 국회에서의 입법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법원행정처에서도 나와 계시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차장 출석해 있습니다.

○**김남근 위원** 법원행정처 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정도가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실질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미법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일반적으로 도입을 하지는 않고 개별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김남근 위원** 개별 법에 도입을 했는데 국회에서 할 때 설마 3배 이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라 그러면 법원에서 1.3배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입법을 했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김남근 위원** 입법자의 의도를 한번 생각해 보면 1.3배, 1.6배가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생각이 안 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법원에서. 그러니까 아무런 입법을 한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제도의 취지에 좀 미흡할 수도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만 개별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되지 않나 싶은……

○**김남근 위원** 아니, 개별 사건이 1개가 아니라 다 그렇게 하니까.

3배를 한 사건이 있어요? 없잖아요. 한번 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법원행정처 차원에서?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추가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근 위원** 소위 징벌적 손해배상이 있던 사건을…… 많지도 않아요. 10개도 안 돼요. 한번 조사해 보시고 그게 징벌적 손해배상이 되는지 한번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해 보시고.

그래서 제도개선이 필요해요. 안 되면 국회에서 다시 입법을 해야 되겠지요. 이제 거꾸로 해야 되겠지, 그러면. 아예 원칙적으로 무조건 3배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감액하도록 이렇게 법을 개정해야 되겠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원래 징벌적 손해배상, 트레블 대미지의 입법취지상.

그래도 적어도 판사님들이 합리적인데 입법취지를 감안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법원 내부에서도 제도개선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예전에 위자료에 대해서 판사들마다 다 제각기 하다 보니까 신뢰가 많이 떨어져 가지고 완전히 판사마다 다 제각각이다 이런 비난이 생기니까 그 당시에, 한 20~30년쯤 된 얘기입니다만 중앙지방법원에 있는 손해배상 전담부 판사님들끼리 모여 가지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최고액을 6000만 원으로 하고 필요하면 깎아 나가면서 위자료를 책정한다’ 이런 기준도 스스로 만들기도 했어요.

(한병도 위원장, 박형수 간사와 사회교대)

또 개인회생 사건들 할 때 변제기간 정하는 것도 다 제각기다 이렇게 하니까 법원행정처에서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변제기간을 5년을 기준으로 하되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해 나간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입법 의도에 맞게끔 재판 운영을 하려는, 재판의 통일성을 기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는데 이 징벌적 손해배상 사건에 대해서는 그런 노력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적어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사건들이 배정되는 손해배상 전담부 판사님들끼리 모여서 같이 논의를 해 가지고 어떤 징벌적 손해배상의 기준을 서로 만들어서…… 판사님들이 각자 기준을 만들려고 그러면 그게 제일 힘든 것 아니에요? 기준에 따라 판결 하시는 게 습관화돼 있는 분들인데 갑자기 자기가 기준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좀 부담스러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이 합의해서 만들든 아니면 법원행정처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기준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서 운영을 하도록 그래서 또 통일성을 높여야지 이게 신뢰가 생기지……

국회가 그렇게 30여 가지가 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입법을 했는데 그것을 이렇게 법원에서 다 무력화시키게 되게 되면 법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판사들이라는 사람들은 다 엘리트들이어 가지고 국회가 뭐라 하든지 다 꼭 무시하고 사회의 어떤 여론이나 이런 것들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불신이 지금 생기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사법 불신의 중요한 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법원 내부에서 법원행정처의 지침이든 아니면 전담부 판사님들끼리의 논의를 통해서 어떤 합의된 기준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운영하든 그런 노력들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위자료 금액의 산정은 사실은 재판부의 재량 사항이긴 합니다만 그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실제 법원 내부에서도 손해배상소송연구회랄지 가족법연구회에서 적정한 위자료 산정에 관한 연구 등을 진행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위자료 부분에 대해서 이런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에 있어서도 그런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근 위원** 그런 걸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왜 징벌적 손해배상은 그런 노력을 안 하시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 그런 노력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집단소송제도 꼭 필요합니다. 집단소송제 같은 게 없으니까 예를 들면 폭스바겐이 디젤게이트에 대해서 소비자를 속였다가 전 세계적인 손해배상 소송이 일어났는데 미국에서는 16.7조를 물어 뒀고 캐나다에서는 한 1.8조 정도를 물어 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한 100만 원 소비자 쿠폰 나누어 주고, 그것도 다 나누어 주지도 않았어요. 일부

신청한 사람들에게만 나누어 주고 끝나서 다 합치면 제가 보기에는 한 100억도 안 나누어 준 것 같아요. 이렇게 차별성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가 그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제가 제대로 없다 이거예요.

BMW 화재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거의, 어떻게 보게 되면 이게 굉장히 무모하게, 무모한 과실에 의해 가지고 다른 나라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 사건이었는데도 제대로 책임을 못 물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여러 명이 함께 책임을 물어야 되는 사건인데 개별적으로 손해배상을 하다 보니까 책임 못 물었어요.

그래서 이런 집단소송제도가 필요한데 집단소송제도는 크게 미국식의 제도와, 최근에는 미국식의 제도가 대륙법계 국가 같은 데에서는 좀 적용하기 어렵다 그래서 프랑스나 일본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먼저 공익적인 단체들이 책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그게 인정이 되게 되면 그 피해를 입은 소비자든 투자자든 이런 분들이 소위 채권 신고를, 피해 채권 신고라 해서 배당을 받는 식으로 하는 이런 식의 집단소송제도들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돼서 한 삼십 개 국가가 저런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저런 집단소송제를 도입하자 그래 가지고 이학영 부의장님이 소비자집단소송제 이런 식으로도 제출을 해 있고 한데 하여튼 이런 제도들을 우리가 도입하기 위한 그런 논의를 본격화해야 될 때예요. 이미 입법적으로 많이 뒤졌잖아요. 다른 나라들이, 웬만한 나라들은 다 도입을 한 거지요. 미국은 전통적인 클래스 액션, 집단소송제라는 자기 나름대로의 제도가 있었고 대륙법계 국가도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저렇게 2단계의 책임소송을 묻는 방식에서의 집단소송제도를 다 도입했고 그런데 거의 유일하게 선진국 중에 저런 집단소송제를 도입하지 않은 나라 중의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인 거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법무부가 입법 노력들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좀 게을리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어쨌든 동일한 원인으로 인해 갖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그런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입법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관련 법안 심리에 적극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근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국회하고 이재명 정부에서 경제형벌들을 민사책임으로 합리화하자라는 큰 어젠다를 던졌고 거기에 배임죄는 작은 이슈 중의 하나인 거고 무모한 경제형벌들을 정리할 거고 민사책임을 통해서 우리도 좀 선진된 국가처럼 민사책임을 물어 나가는 국가가 되려면 저는 세 가지, 이런 한국형 디스커버리, 집단소송제 그다음에 징벌적 손해배상 이것은 반드시 세트로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내부에 즉각 이런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조직 이런 것을 좀 만들어 가지고 힘 있게 한번 이것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알겠습니다.

○**김남근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형수** 김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북 충주의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 정성호 법무부장관님, 오늘 질의가 많으신 것 같은데 수고하십니다.

앞서도 질의들을 했는데 저는 제 나름대로 한번 여쭙볼게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계시지요. 다만 대통령 당선 후에 국정 운영의 안정을 위해서 재판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이종배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께서서는 이게 ‘조작 기소다’ 또 ‘정치 탄압으로 인한 거다’ 이러면서 ‘공소 취소되는 게 맞다’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가 장관 되기 전에 어떤 다른 모임에서 얘기를 했는데 법무부장관으로서 제가 제 입장을 밝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법무부장관으로서는 답변하시기가 좀 곤란하시니까 그렇게 하신 거고, 아마 그런 생각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번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 결정은 잘된 거다 이런 생각 하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이것을 제가 잘했다, 못했다 판단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신중히 판단하라고 한 것은 어쨌든 이 사건 항소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해당 검찰청에서 권한을 갖고 책임 있게 판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걸 존중하려고 합니다.

○**이종배 위원** 그렇지만 장관님께서 이게 항소 포기 실익이 없다 이런 말씀도 하신 적도 있는데 또 세 차례를 보고를 받고 신중히 판단하라 이런 의견은 전달을 하셨단 말이에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가 신중히 판단, 처음에는 그냥 사건 보고만 받았습니다.

○**이종배 위원** 예, 처음에는 받고.

○**법무부장관 정성호** 결과 포함 받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보고를 받고, 두 번째 보고를 받았을 때, 그게 11월 6일 국회 예결위 전체 종합질의 때 잠깐 저녁때쯤 제가 그런 보고를 받았고요. 하여튼 그 당시에 제가 신중히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이종배 위원** 신중히 판단. 그때 이미 서울중앙지검의 수사팀에서는 전원 만장일치로 항소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전달을 받으신 거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 당시에 제가……

○**이종배 위원** 세 번째에 받으셨나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세 번째는 최종적으로 11월 7일 날 저녁때쯤 예결위 저녁 만찬을 위한 휴회시간 중에 간단히 구두보고를 받았었고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때도 같은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 당시 다른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종배 위원** 두 번째는 말씀하셨고.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어쨌든 처음하고 똑같이……

○**이종배 위원** 어쨌든 장관님의 그런 대응으로 볼 때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됐던 것 아

니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모두들 장관님의, 법무부의 뜻을 항소 포기로 받아들였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은 어떻게 파악하실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이게 사실상의 수사지휘나 다름없다. 만약 장관님이 그 보고를 받으시고 이것 수사지휘를 안 할 거라면 그냥 알았다 정도로, ‘알았다. 그런 일이 있구나’ 하는 정도로 대응을 해야지 저쪽에서 항소 포기하겠다고 하는 의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중히 판단하라고 했다면 이것은 간접적인 지시다, 간접적인 수사지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검찰청법 8조에 의하면 서면으로 수사지휘하게 돼 있지요? 장관님은……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면으로 하라는 규정은 없고요.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지휘·감독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전에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해 왔던 게 관행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건 관행으로, 장관님이 장관 되시고 나서는 한 번도 수사지휘 안 하셨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수사지휘한 바는 없습니다.

○**이종배 위원** 어쨌든 장관님이 보고를 받을 때는 법무부차관 통해서 받든지 아니면 조상호 정책보좌관 통해서 받으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조상호 정책보좌관은 그야말로 정책보좌관입니다. 공식적인, 일반적인 보고는 법무부차관이 대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차관이나 국장?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개 같이 자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종배 위원** 대검의 검찰총장대행, 노 대행은 ‘법무부차관으로부터 항소 포기가 담긴 그런 선택지를 여러 개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자기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검찰 보완수사권과 교환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 제기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차관과 대검 차장과의 의견 교환 과정은 제가 아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종배 위원** 차관한테 나중이라도 들은 게 없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구체적인 내용은 들은 바가 없습니다.

다만 보완수사와 교환했다 이런 얘기는 정말 사실무근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선택지라고 하면 항소 포기를 위한, 항소포기형 선택지라면 다른 게 있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 거라든지 다른 거라든지 대안이 있었으니까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었을 것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이 문제는 검찰이 과거에는 그런 사실상의 지시를 통해 갖고 통제했을지 모르고 또 대통령실에서 직접 검찰에 관여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는 그야말로 구체적 사건의 지휘였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 그렇게 요구를 하면 되는 것이고, 본인들의 책임과 권한을 갖고 판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이재명 정부에서 검찰에서 수사권을 뺏고 이러니까 상당히 위축돼서 눈치 보는 것도 있겠고요. 한마디 그냥 비슷하게만 얘기해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가 좀 많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실질적으로 검찰에서 거의 모든 주요 사건들을 다 저한테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개적으로 항소가 적절치 않다, 공개적으로 얘기한 사건 같은 경우도 다 항소하고 그랬습니다.

○**이종배 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이 불법적 이득을 받은 7400억, 추후에 환수가 가능합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이게 7400억의 근거도 지금 명확지 않습니다. 어쨌든 검찰이, 일부 정치권에서 그런 주장이 있는데 이게 대장동 개발로 인한 총수익입니다. 총수익이기 때문에 대장동 일당이 받아야 될, 원래 본인들이 받아야 될 수익 그다음에 성남도시공사가 받아야 될 수익, 거기에서 그 차이로 해서 원래 대장동 일당들이 받아야 될 수익보다 초과된 그 수익, 그중에서 성남도시공사가 받지 못한 수익을 계산해야 되지 7400억이 어쨌든 총범죄수익이다 보는 것은 적절치는 않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게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이번에 판결문에서도 정확지 않다는 내용이 있지요? 거기 담겨 있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어쨌든 그들이 불법적으로 받은 이득이 그 정도 되고 국가에서 받은 이득은 473억밖에 환수를 못 한 상태잖아요, 1심 재판에서는?

○**법무부장관 정성호** 이건 몰수·추징입니다.

○**이종배 위원** 이게 민사로 앞으로 회복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 그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지금 현재까지 한 2000억 정도 조금 더 되는 돈이 추정 보전된 상태고요. 그것하고 관련해서는 성남도시공사에서 가압류 절차에 들어간다는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장동 일당들에 관련해서 거의 모든 본인들의, 본인 명의의 재산들, 측근들의 재산들이 다 보전처분돼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전혀 생활비도 충당하지 못할 정도의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게 업무상 배임죄가 유죄로 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지금 일부에서는 전액 환수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성남도시공사에서 한다고 하면 이번 형사소송 과정에서……

○**이종배 위원** 상당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저희는 재판을 적극적으로 하면 판결은 받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몰수·추징했다고 다 받아 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종배 위원** 법조계에서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고 계세요.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진상이 불확실합니다. 검찰총장대행 또 차관, 장관 등등 얘기가 다 다르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민들 의혹이 커져 가지고 오늘도 장관님한테 집중적으로 이렇게 질의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 확실한 진상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인데 장관님이 나서서 이런 걸 좀 진상을 규명해서 국민들에게 알릴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이게 달리, 어쨌든 재판의 항소 포기가 걱정했냐 안 걱정했냐 이런 판단이 전체에 있는 거고요. 달리 저희가 진상조사할 그런 사안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이걸 진상규명을 위해서 국정조사를 하느니 특검을 하자느니 이런 주장 많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관님, 이 건과 관련해서, 이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누구와 상의했다든지 또는 전화 통화한 적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저는 그런 사실 없습니다.

○**이종배 위원** 없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이종배 위원** 아까도 봤듯이 노 대행은 용산과 법무부의 이런 의견 같은 걸 고려를 해서 결정을 했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겠네요, 장관님은? 그렇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어떤 의미로 그런 말씀을 하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강백신 검사하고 수사팀에서는 장차관이 반대해서 안 됐다 이런 발표한 것 보셨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건 강백신 검사의 추측 같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건 다 추측이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이종배 위원** 전혀 관여된 게 없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분들이 과거에 이 사건을 수사할 때는 그런 식의 수사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그분 같은 경우는 1차 수사관이…… 2차 수사팀에 참여를 했는데 1차 수사에서 2차 수사팀으로 바뀌면서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희는 이 사건에 대한 그런 식의 부당한 지휘를 한 바는 없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종배 위원** 대통령실은 관여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가 대통령실과 소통한 바는 없습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이종배 위원** 장관님은 그러시고 나머지는 모르시는 거지요?

민정비서관에 3명이 있고 지금 당정 요직에 13명이나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 출신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노 대행은, 검찰총장대행은 큰일 났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큰일 났다는 정도는 상당히 놀란 거거든요. 그런 얘기가 진짜 있었는지는 확실치는 않지만 그런 얘기 있고 용산 의사도 고려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장관님, 9월 30일 날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미리 좀 알고서 그랬는지 상소에 대해서 기계적으로 이렇게 상소하는 걸 남발해서 되겠느냐,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건데 왜 방치하고 있느냐고 장관님한테 좀 질책성 질의를 했지요? 그러니까 장관님이 대검의 사무예규를 개정해야 되는데 지금 개정할 예정으로 있다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검찰에서 무죄가 나면 무조건 항소하고 하는 것이 대개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 그런 기계적 항소나 또는 상고 때문에 당사자는 굉장히 고통을 받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영미법 계통에서는 이중위험금지 원칙이라고 해 가지고 법원의 1심에서 무죄가 나면 대개 항소가 사실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무조건

항소를 하기 때문에 그런 면들에서 좀 신중해야 된다는 의사 표시를 저는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이종배 위원** 글썄, 이게 벌써 얼마 전인데도 이런 것을 예견해서 이렇게 지시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예견해서 하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면소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당이나 이런 데서도 추진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그런 데 대해서 동조를 하시는 겁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지금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면소라든가 공소 취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한다는 것은 저는 사실무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원에서 헌법 84조에 근거해 가지고 대통령 직무 집행의 안정성을 위해 가지고 재판을 중단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친윤 검사가 쿠데타적으로 항명했는데 전부 징계해야 되겠다’ 하는 게 민주당 대표, 당대표 의견들이던데 그것 보면 다 친윤 검사들만도 아닌데 친윤 검사로 몰았어요. 검사장 25명 중에 16명이, 그것도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그런 검사장들도 포함이 됐고.

검찰이 왜 이렇게 집단으로 항명했는지 한 번쯤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전부 다 입을 막 하려고 전부 다 징계하겠다는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너무 강제로 막으려고 하다가는 국민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십시오.

법제처장님, 이재명 대통령 12개 혐의 다 무죄입니까?

○**법제처장 조원철** 먼저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제 발언을 갖고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제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애기드린 것은 적절치 않았다고 인정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법제처장으로서 발언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사료됩니다.

○**이종배 위원** 법사위의 법제처장과 여기 예결위의 법제처장은 다른 분 아니잖아요.

○**법제처장 조원철** 예, 그렇습니다. 다만 그 처음 발언, 무죄 발언이 나오게 된 경위가 당시에 어떤 위원님께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범죄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드렸던 것인데 그 위원께서.....

○**이종배 위원** 법제처장님도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이지요, 사건의?

○**법제처장 조원철** 예,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11월 3일 날 유튜브 방송에서 또 방송을 하면서 좀 황당하다, 만나지도 않았는데 돈 받은 것도 없는데 이게 무슨 죄냐 이러면서 황당하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이후잖아요?

○**법제처장 조원철** 그것은 순전히 제 개인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이종배 위원** 법제처장은 개인이 없어요. 그것을 유튜브에 나가서 얘기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황당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더더욱 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제처장 조원철** 다만 그 유튜브에 출연하게 된 것은 그 발언의 경위나 잘못 보도된

부분들에 대해서 해명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적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유튜브에 출연하지 않겠다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종배 위원** 사죄하셨습니까? 사과하셨습니까, 국민들한테?

○**법제처장 조원철** 예, 법사위 회의장에서 사과한 바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런 법제처장을 둔, 법제처의 업무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법제처는 상당히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업무를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런 법제처의 해석이라든지 이런 걸 누가 믿겠습니까?

○**법제처장 조원철** 다른 공법 해석과 관련해서 이의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오해나 이의가 없을 수 있도록 제가 충분히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걸 누가 믿겠느냐고요. 법제처장이 처신을 잘하고 그래야지 믿는 거지요.

○**법제처장 조원철** 제가 그 문제의 발언을 하게 된 것도 사실은 발언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일각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대통령을 변호하려는 것이냐 그러한 취지는 전혀 아니었던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종배 위원** 저는 법제처장님이 기본적으로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제처장님이 거기 계시는 한 법제처의 모든 행위를, 모든 문서를 국민들이 신뢰하지 못한다, 공정하다고 신뢰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법제처의 내년도 예산 중에서 업무추진비, 운영비 한 30%는 정별적으로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제처장 조원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적절하게 결정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형수**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성남 중원의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 이재명 대통령께서 윤석열 내란에 대한 공직자의 가담 여부와 정도를 조사하고 이에 따른 처분을 위해 헌법준중 정부혁신 TF를 구성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공직자는 헌법과 국민 편에 서야 합니다. 크든 작든 공직자의 내란 부화수행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분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직자는 헌법과 국민 편에 서야 한다는 원칙이 바로 세워질 것이고 헌법을 수호하고자 했던 공직자들의 판단과 행동이 존중받을 것입니다.

최근에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정치검사들도 뭐가 그리 구린지 부화뇌동하고 있는데 그들의 선택적 분노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옳게 판단하지 않을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각 부처 장관님들, 공직자로서 책임감을 갖고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원 정상우 총장님!

○**감사원사무총장 정상우** 예.

○**이수진 위원** 지난 3일 감사원에서 대통령실 집들이 행사 및 용산어린이정원 위탁업체 선정 의혹에 대한 국회 감사 요구에 대한 결과 발표했었지요?

○**감사원사무총장 정상우** 예, 그렇습니다.

○**이수진 위원** 감사 결과 대통령 집들이 행사 비용을 LH에서 대납한 것이 드러났고 별도의 공고 없이 소규모 업체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LH는 대통령 집들이 행사가 용산공원 조성 사업의 일부라 하지만 감사원은 대통령 집들이 행사와 용산공원 조성 사업은 주관기관과 목적, 운영방식 등 별개의 행사로 봤습니다. 그렇지요?

○**감사원사무총장 정상우** 예, 그렇습니다.

○**이수진 위원** LH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건물관리·시설관리업 자격을 입증할 경력도 없는 업체와 수의계약 했습니다. 윤석열은 임기 동안 정부 예산, 공기업 예산을 자기 돈 쓰듯이 썼습니다. 비단 대통령 집들이 행사뿐이겠습니까?

총장님, 감사원에서 윤석열 정부의 예산집행에 있어서 여러 위법사항에 대해서 추가 조사가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감사원사무총장 정상우** 저희가 모니터링해서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윤석열 정권은 2022년 6월 용산공원을 시범개방 하면서 불순분자를 가려낸다고 출입구에 시민의 심박수를 측정하는 장비를 배치하려 했고, 정말 코미디입니다. LH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모습이 담긴 색칠놀이 행사를 비판했던 시민의 출입을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전형적인 독재자의 모습입니다, 절대로 용인해서는 안 되는 독재자의 모습.

감사원은 윤석열의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감사원사무총장 정상우** 예,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관계 법령 등을 잘 검토해서 필요성이 있으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제가 필요성에 대해 말씀을 드린 거고요.

성평등가족부장관님 나와 계신가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이수진 위원** 상당수 지자체에서 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을 신청하지 않아서 많은 여성청소년들이 생리용품을 몇 년째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시작된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의 경우 도내 11~18세의 여성청소년 모두에게 생리용품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경기도에 신청을 안 하는 기초단체가 성남시를 포함해 무려 7개나 됩니다. 이 지역의 여성청소년은 생리용품을 지급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지자체만의 잘못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성평등가족부의 책임도 큼니다.

제가 지난 21대 국회 때 청소년복지 지원법을 개정해서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보편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생리용품 지원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했더니 정부가 취약계층에만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회와 논의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성청소년 누구나 지원받도록 한 그 국회의 의도가 뭐가 되겠습니까? 정부 마음대로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이 부분을 확인했더니 당시 위원회 대안으로 재정적인 면을 감안해서 일정 부분의 제한을 둘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수진 위원 생리용품 보편 지원에 대한 선호도가 우리 국민들께 얼마나 높은지 잘 알고 계시지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알고 있습니다.

○이수진 위원 2016년 생리대를 살 돈이 없어서 신발 깔창을 쓸 수밖에 없었던 그 사건 모두 기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이수진 위원 장관님, 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이 지자체별로 너무 제각기입니다. 성평등가족부가 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을 책임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이 부분을 좀 더 확인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국방부장관님 계신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국방부차관입니다.

○이수진 위원 얼마 전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우리나라 전작권 회복에 대해 훌륭한 일이고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상식적인 일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이수진 위원 그런데 국민의힘 전 대통령후보 김문수 씨, 전작권 환수 연기를 공약했어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전작권 논의를 반미 감정 물이를 위한 사전 작업 정도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국가안보를 이념 싸움 정도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술에 취해 있는 국군통수권자에게는 전작권이 필요 없겠지만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시하는 리더에게는 전시작전권 회복은 당연한 사명입니다.

2006년부터 추진한 전작권 회복 추진, 어느덧 20년이 되어 갑니다.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그렇게 잘 추진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차관님, 제가 지난 결산 심사에서 성남 고도제한 완화방안에 대해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이수진 위원 지난 8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이어서 9월 비행안전구역 변경 고시를 통해서 성남 일부 지역이 고도제한이 해제되거나 완화됐습니다. 국방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난번 질의에 추가적인 고도제한 완화방안을 제안했지만 국방부에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에 대한 논쟁을 더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앞으로 중요한 것은 성남의 서울공항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서 민, 군, 관, 정 그리고 또 전문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그 과정인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공항 이전도 검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군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함께 논의해 나가시겠습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감사합니다.

경찰청의 누가 나와 계신가요?

○경찰청기획조정관 손제한 기획조정관입니다.

○이수진 위원 기획조정관님, 제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국농아인협회의 전현직 고위 간부들의 위법행위를 지적했고 이에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특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이들에 대해서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취업방해, 장애인 차별 등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할 방침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경찰청기획조정관 손제한 예,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수진 위원 하지만 아직 보건복지부가 명확하게 조사하지 못한 사안도 많습니다. 조남제 전 사무총장의 양주 밀수 강요, 사례금 모금 강요와 직장 내 괴롭힘, 현금 살포 의혹도 있습니다.

더욱 경악할 것은 또 다른 협회의 고위 간부가 인사권 등을 이용해서 성폭력을 행사하고 이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충격적입니다.

(박형수 간사, 한병도 위원장과 사회교대)

기사를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피해자 입을 틀어막으려고 이상한 소문까지 냅니다. 아까 카톡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기획조정관님, 정말 처참하지 않습니까. 비록 예결위 회의장에서 음성 송출은 안 됐지만 소리 없는 농아인들의 외침이 정말 절절합니다. 과연 법이 존재하고 있는지, 그들에게 우리가 법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 줘야 됩니다.

이 사건은 가히 제2의 도가니 사건입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목줄을 쥐고 성폭력을 일삼는 행태를 엄벌해야 됩니다. 벌써부터 2차 가해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고 2차 가해까지 한다는 말입니까.

농아인협회의 소수 권력자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엄중하게 수사하시고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경찰청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경찰청기획조정관 손제한 예, 성범죄 혐의 등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수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농아인협회가 농아인들을 위한 협회로 정상화될 수 있도록 경찰청의 책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조정관님,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10월 31일 날 성남 중원경찰서 신축 이전에 대한 예비타당성 심사 면제 확정됐습니다. 이 결정은 그동안 성남시 소유 부지의 낡고 비좁은 중원경찰서에서 근무해 왔던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이고 또 비탈진 언덕 위에 있는 경찰서에 대한 주민 접근권 보장을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예비타당성 면제가 확정된 만큼 새로운 중원경찰서는 배리어 프리(Barrier-Free)—무장애—주민 친화형 건물, 친환경 제로에너지 건축물이 되어야 되고 AI를 활용한 스마트 건축 기법도 도입해야 됩니다. 중원경찰서 이전 신축에 이러한 선진 건축 개념을 도입해 모두에게 사랑받는 중원경찰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경찰청기획조정관 손제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인사혁신처장님 나와 계신가요?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예, 여기 있습니다.

○이수진 위원 최동석 처장님, 이태원 참사에 출동했던 고 박홍준·남동혁 소방대원께서 우울증을 앓다가 사망하신 안타까운 사건 알고 계시지요?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예.

○이수진 위원 그런데 남동혁 소방관은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 공무원 요양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인혁처 재해보상심의회가 이를 불승인했고 이후 안타깝게도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고 남동혁 소방관의 요양 신청을 불승인했던 당시 재해보상심의회 내용을 보겠습니다. 지난 5월 28일 4시부터 약 2시간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심의회에서 다룬 신청 건수는 72건이었습니다. 그러면 1건당 처리 시간은 평균 1분 36초입니다. 1분 36초 동안 이걸 이렇게 결정할 수 있었다라는 게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더구나 당시 심의회 구성을 보니까 당연직 담당 공무원을 포함해서 13명이 참여를 했는데 정신과 의사는 단 1명뿐이었습니다. 단 1명의 정신과 의사가 충격은 있었던 걸로 보이지만 개인적 사유가 있어 보인다면 짧은 불승인 의견을 냈고 그게 그대로 확정이 됐습니다.

재해보상 심의 과정이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수진 위원 처장님, 고 남동혁 소방관의 신청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출동해 다수의 사망자 시신 운반 등 활동을 했고 처참한 장면과 가족들의 절규 등을 목격하고 큰 충격으로 우울증, 불안장애, 대인기피 그리고 불면증과 신체적 이상 증세가 나타났고 지속 악화돼서 정상적인 생활과 근무가 어려워 정신과 치료를 여섯 차례 받고 있어 요양 신청을 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고 남 소방관은 2024년 전국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 결과에 치료필요군으로 판정받은 바도 있습니다. 진단서에는 명확하게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우울증, 불면증, 상세 불명 편두통이 진단되어 있고 8주 이상의 안정 가료와 6개월 이상의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외상후스트레스로 인한 대인 관계 단절, 가족 관계 단절, 불화를 심의회에서는 개인적 사유로 본 건지, 그렇게 했으니까 불승인했겠지만 저는 이렇게 사유를 단정하고 이렇게 결정한 게 너무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위험직무 수행에 따른 정신적 충격은 본인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인한 충격만 인정할 것이 아니라 간접적인 위협에 의한 것도 포함해서 고려되어야 됩니다. 아까 검토하고 계시다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같이 검토되는지 궁금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공공안전요원 지원법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촘촘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참조해서 개선 방안 마련하시고 그 마련된 것들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예, 이수진 위원님 생각이나 저의 생각은 같습니다. 말씀 주신

것 참조해서, 지금 개선을 위한 그 방안을 만들어서 행안부에다가 제출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고 싶다고 얘기해서 이수진 위원님 걱정하시는 문제들을 다 해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지금 저희가 지난 여객기 참사 이후에도, 제가 그 당시에 참사 특위에 서 활동을 하면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법을 하나 통과시킨 게 있어요. 그 참사를 목격하거나 지원하고 함께 봉사해 주시고 또 언론인들까지 포함해서 이분들의 심리상담이라든지 치료를 포함해서 보건복지부가 지원해야 된다, 저희가 이런 법까지도 통과를 시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인사혁신처에서 개선을 해 나가야 됩니다.

최근에 정신질환 관련 공무상요양 현황을 제가 살펴봤더니요, 지난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승인율이 2022년에는 81.8%였는데 2024년에는 66.8%로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이게 그 정부의 철학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떨어졌는지 저는 굉장히 이해가 안 가는데, 그 원인도 종합적으로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원인에 대해서도 저희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혹시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님, 방금 말씀 다 들으셨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이수진 위원** 이것은 행안부의 협조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재해보상심의회 인력 부족도 큰 원인으로 보여집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래서 심의 기간이 6개월, 1년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수진 위원** 그래서 관련해서 개선을 좀 하셔야 될 텐데요. 특별한 희생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위해 정당한 판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이수진 위원** 우리 국민들께서 그 사건을 보면서 되게 가슴 아파하셨거든요. 그렇지만 않아도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일을 하는 소방관들이 정부로부터 아무런 지원이나 보상이나 내지는 그런 서포트를 받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보여지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가, 그래도 할 수 있는 일들은 이것저것 찾아보시고 그중에서도 특히나 재해보상심의회 인력 보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관련해서 협의된 내용도 저희 의원실에 보고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이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국혁신당 김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 문체부장관님, 국립중앙박물관 수장고가 국가 문화재 재난 대응의 최후 방어선이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예.

○**김재원 위원** 국립중앙박물관은 문화유산의 수집·보존·관리·연구·전시를 총괄하는 국가 대표기관으로 전국 13개 지방박물관을 총괄 지원하고 재난 발생 시 문화재의 긴급대

피 및 임시보관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44만 점의 유물이 수장고에 집중이 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성과 면진설비 구축 여부가 곧 문화재 보호체계의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30, 40년 된 노후 수장고가 다수이고 면진설비 설치율이 27%에 불과합니다. 지진이나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하면 유물이 아예 선반째 무너질 그런 위험이 상존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 보시면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을 포함한 전국 수장고는 25개소인데요. 40년 이상 된 시설이 4개소, 30년 이상 경과한 곳이 5개소로 절반 가까이가 준공 후 수십 년이 지난 노후 시설입니다.

문제는 시설 자체는 안전등급이 B등급으로 양호라고 하더라도 구조 안전성만 평가한 결과이고 천장, 조수 패널, 배관 등 설비 노후도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다음 PPT 보시면 실제로 지난해 6월에 중앙박물관 7·8 수장고 천장 누수로 유물 5건이 오염되는 사고가 발생했고요. 이외에도 최근 국내 주요 문화유산 관련기관에서 재난이 연이어서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연속적인 재난 사례가 국가문화유산 보존 인프라 전반의 노후화와 방재의 취약성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그런 사례가 아니겠습니까?

장관님, 사고 이후에 어떤 점검·보수 조치 실시하셨습니까? 상시 점검체계 갖추어져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지금 안전 보안을 시급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또한 소장품은 2006년에 21만 점에서 2024년에는 206만 점으로 10배 가까이 폭증을 했습니다. 수장공간 확충은 이에 미치지 못해서 과포화 상태입니다. 국립박물관 14개 기관 중 수장고 포화율이 90% 이상 5개 기관, 80% 이상 4개 기관으로 대부분 한계에 근접한 수준입니다. 통로 확보가 어려워서 긴급대피, 임시보관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만약 재난이 발생하면 중앙박물관은 전국 유물 대피의 허브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 역할을 지금 상태로 수행하겠습니까?

다음 PPT 한번 보시지요.

심각합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주박물관과 광주박물관 수장고 상태는 국가문화재 보관시설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출입문 주변에 누수 흔적이라든지 내부설비 노후화가 육안으로도 이렇게 확연히 드러납니다. 이래서야 우리 문화유산 잘 지킬 수 있겠습니까?

장관님, 문체부는 2026년에서 2035년까지 13개 지방 박물관 수장고 현대화를 계획하고 1단계로 전주, 광주, 경주 3개 관에 46억 5000만 원 규모의 리모델링 및 내진 수장대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중앙박물관 본관 수장고의 면진 시스템 구축은 별도 사업으로 분리되어 있고 현장 위험은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이 속도라면 전국 전면 개선까지 최소 10년 이상 걸립니다. 노후시설과 미흡한 면진설비를 둔 채로 장기 계획만 제시하는 것은 운영기관 책임 회피로 비쳐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즉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국립 지방 박물관 수장고의 먼진·내진 안전성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사업을 2026년 예산에 최우선 반영하고 즉시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노후 수장고 현대화사업을 현행 10개년 계획에서 5개년 이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 일정 및 예산 계획 전면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수장고의 안전점검체계를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재난 발생 시 문화유산 긴급대응 매뉴얼을 신속히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문체부가 문화재 보호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2026년 예산안에 이를 명확히 반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외교부1차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범죄에 연루되거나 인신매매 피해를 당한 사건이 잇따르고 있지요.

해외치안은 단순한 외교 현안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 기본책무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외교부 예산을 보니까 영사조력 및 해외안전여행 홍보 강화사업이 올해보다 1억 5000만 원 삭감되고 해외 위난상황 대비 영사조력 제공 역시 8000만 원 감소했습니다. 해외안전정보 제공, 위기 시 신속대응팀 파견, 대국민 안전 홍보 등 사전 예방 중심사업이 줄어든 것입니다.

차관님, 국민이 해외에서 겪는 위험은 사고 나고 나서 조력하는 걸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지금 홍보 예산 자체는 그전에 연구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1억 5000짜리. 그게 2년간 사업이었는데 올해 종료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 연구 예산이 줄어든 것이고요. 홍보 예산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런데 홍보 예산뿐만이 아니라 안전정보 네트워크 구축, 성지순례·봉사 활동 안전지도, 맞춤형 문자 이런 것들도 예방사업들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그 예산을 다시 반영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해외치안 네트워크 구축비, 영사 콜센터 시스템 고도화비, 해외안전여행 대국민 홍보비 이런 것들도 삭감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안전망 구멍을 만드는 일입니다.

해외 사건·사고가 매년 3000건이 넘습니다. 상담만 해도 연 50만 건이 넘습니다. 지금 필요한 거는 예산 절감이 아니라 예방과 대응의 강화입니다.

외교부가 기재부와 협의해서 삭감된 해외치안 및 재외국민 보호 예산 복원하고 특히 해외안전정보 네트워크 구축과 국민 홍보 예산 증액할 의지 있으십니까?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위원님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기재부차관님, 앞서 말씀드린 해외치안 예산은 국민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필수 예산입니다. 영사조력 및 해외안전여행 홍보, 해외 위난상황 대비 사업이 모두 삭감되면서 국민안전정보 제공, 신속대응팀 운영, 재외국민 보호체계가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단순한 홍보운영비가 아니라 사전예방과 긴급대응의 기반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재정 장치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조정 과정에서 해외치안 대응예산을 복원하거나 최소한 유지 수준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국가의 기본적인 책

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방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사업들 중에는 완료사업도 있고 다른 사업들도, 이전된 사업들도 있습니다만 모든 이유를 불문하고 예산안조정소위 과정에서 추가할 사업이 있는지 잘 확인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예, 외교부와 잘 협의하셔서 시스템화·고도화·체계화 이것 중심으로 해서 국민 보호에 앞장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우리 예술생태계의 마지막 안전판이자 예술가들의 최소한의 창작 기반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 기금이 심각한 고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정부출연금은 제자리걸음인데 일반회계와 타 회계에서 이관된 각종 사업이 기계적으로 얹히면서 기금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실제 기금 자료를 보면 기금 내에서도 본래 용도와 맞지 않게 타 회계 이관 사업이 다수 존재하고 심지어 기금관리주체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아닌 유관 기관 재교부 형태로 집행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런 구조로는 예술가를 위한 기금이 오히려 예술가를 혼란스럽게 압박하는 구조로 전락하고 있는 겁니다.

우선 불요불급하고 기금 용도와 맞지 않는 사업들은 전액 삭감해야 하는데요. PPT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료 보면 한스타일 육성지원, 공예문화산업 육성, 문화예술 해외교류 등은 관광기금 또는 일반회계에서 이관되어 온 사업입니다. 이들 사업은 산업 진흥, 홍보, 수출지원 성격이 강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가 정한 창작과 보급, 예술인 복지라는 기금 법적 목적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특히 한스타일 육성이나 공예산업 지원은 산업기반 육성에 가깝기 때문에 예술창작지원기금에서 집행하는 것이 법적·재정적으로 부적절합니다.

또한 PPT 또 보시면 예술산업 융자지원사업 역시 기금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사업수행기관이 예술경영지원센터로 되어 있어서 기금 관리주체의 직접수행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따라서 이런 사업들은 전액 삭감하거나 일반회계로 환원해야 하고 그 재원을 예술인 복지, 창작지원 분야에 재투입해야 합니다.

장관님, 문화예술진흥기금이 바닥나는 원인 중의 하나는 단순히 예산이 부족해서가 아니고요, 재원 구조가 지나치게 단일화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현재 기금은 사실상 정부출연금에 전적으로 의존을 하는 구조인데요. 최근 5년간 정부출연금 증가율이 평균 1.8%에 그쳤습니다. 물가상승률과 예술사업 확대 속도를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감액된 수준이거든요. 따라서 이제는 지속가능한 신규 재원 발굴이 시급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 추경 심사 당시에도 범죄수익 환수금 일부를 기금 재원으로 활용하자 이렇게 제안드린 사실 기억하실 텐데요. 동시에 창작자 스스로의 기여가 다시 예술생태계로 순환되는 구조 또한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방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보여 드립니다.

첫째, 저작권 미분배 보상금의 기금 전입 제도화입니다.

보시면 저작권 사용료와 보상금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적시에 분배되지 못한

미분배 보상금 규모가 2023년 기준만 해도 374억 원에 달합니다. 더 찾아보면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중에 5~10%만 기금으로 전입을 해도 연 19억에서 37억 원의 안정적인 재원이 확보가 됩니다. 이는 창작자 권익 보호와 기금 재원 확충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개선으로 보여집니다.

둘째로 공연 압포 문제가 심각하지요. 공연 압포 몰수 수익의 기금 환류입니다.

압포 거래로 발생하는 부정이익은 공연시장 질서를 무너뜨리지요. 공연법 개정을 통해서 이 부정수익을 몰수·추징하고 문화예술기금으로 전입한다면 최소 30억 원에서 최대 300억 원까지 추가 재원이 확보가 될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처럼 문화산업 내에서 발생한 부정수익을 다시 창작자 기반으로 환류하는 정책적 정합성이 높은 그런 방안입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문화산업이 스스로 재원을 창출하고 예술로 환원하는 순환형 구조를 만드는 그런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장관님께서도 이런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 있으신지 분명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그러지 않아도 지금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해서는 무척 답답한 상황이고요. 추가 재원 발굴이 무척 중요한 상황입니다.

위원님 주신 의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문화계에서 발생한 범죄로 인한 수익을 다시 문화계에 환류해서 창작에 활용하자는 것이니까 아마 그 취지에서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기재부에서도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좋은 아이디어에 감사드리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래서 다음 세 가지 조치를 반드시 관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기금 용도 일치성 점검 및 회계 재조정을 요청드립니다.

타 회계 이관 사업 중에 문화예술진흥법상 용도와 불일치한 항목을 전면 재검토하고 일반회계, 건강기금 등 본래 회계로 환원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신규 재원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주십시오.

저작권 미분배 보상금 전입, 공연 압포 몰수 수익 전입 등 법 개정을 통한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을 연내에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기금운용 효율화에 나서 주십시오.

재교부 사업 비중을 줄이고 기금 관리 주체인 예술위원회의 직접사업 확대와 인접 기관 간 중복 보조금 방지체계 강화, 기금운용 이율 제고 등을 병행해야 합니다.

장관님, 정부가 진정으로 예술인 권익과 창작활동을 보호하려면 재원구조 다변화와 불요불급 사업 정리라는 구조적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기금이 진짜 예술가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분명히 이 부분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부차관님,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근거해서 설치된, 말 그대로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인데요. 그런데 최근 일부에서 국악방송이나 아리랑 TV가 행정적 소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원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차관님, 국가 예산의 집행 기준은 행정적 소관 부처가 어디냐가 아니라 법이 정한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게 쓰고 있는가에 따라서 판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그 사업의 내용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판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질의 내용에서도 말씀을 주셨 습니다만 아리랑국제방송, 국악방송 같은 경우에 명백하게 방송통신 기본법 제26조(기금 의 용도)에 부합하는 사업 내용이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예,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국악방송이나 아리랑TV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목적, 즉 공공성과 국제적 정보 교류 촉진, 방송 다양성 확대라는 취지에 정확히 부합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원칙하에서 해당 기관들에 대한 합리적 예산편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살펴 주시고요.

덧붙여서 문체부장관님, 문체부 또한 해당 방송사업이 기금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임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시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외교부1차관님, 오늘 저는 이전 정부의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국제교류기여금 인하 결정 이 지금 현재 우리 공공외교의 재정 기반을 심각하게 흔들어 놓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국제교류기여금이 뭐냐?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6조에 따라서 여권 발급 시에 부과되 는 부담금입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원의 약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기여금으로 해외 한국학 진흥, 글로벌 인턴십, 인적·문화 교류 등 대한민국의 공공외교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사업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PPT 보시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부담금 전면 개편 과정에서 국제교류기여금이 10 년 복수여권 기준 1만 50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줄었습니다. 국민 부담을 덜어 준다는 명분이었지만 실제로 체감을 해 보자면 이게 10년짜리 여권이기 때문에 연간 300원꼴인 거거든요.

거기에 불과한데, 결과는 매우 심각합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이미 코로나 기간 동안 에 여권 발급 급감을 해서 12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번 감면으로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추가로 약 773억 원의 수입이 줄어들면서 2031년에는 이 기금이 완전히 고 갈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조치는 국민에게는 체감하기 어려운 인하 효과를 남 기게 되었는데 결국 우리 스스로 공공외교의 핵심 재원을 약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았 습니다.

지금 K-문화가 전 세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 또 우리나라가 APEC을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외교적으로도 이런 상황을 십분 활용해서, 문화외교 또 공공외교 이런 부분에서 이러한 분위기를 십분 활용해야 되는 또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이때에 오히려 외교 기반 사업이 위축될 위험이 커졌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외교부는 이전 정부의 이 조치로 인한 재정 공백과 공공외교 사업 축소 문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지금 저희가 기금 고갈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 잘 알고 있 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고, 지금 KF(국제교류재단)와 저희가 방안을 협의 중이고 타 기금에서 전입을 한다든지 민간기금을 확대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협의하

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정 당국 또 예산 당국과도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예, 기여금 원상 복구나 대체 재원 확보 방안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민 부담 완화라는 문제보다 연간, 1년에 300원 부담을 더 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의 외교 역량과 문화적 신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얼마나 중요, 중차대한 그런 시기입니까? 외교부가 책임 있게 이 문제 검토하고 공공외교 토대가 무너지지 않도록 대응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을 이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진 위원** 동북아의 물류 중심 향만으로 발돋움하는 평택항과 함께 병진하는 이병진입니다.

법원행정처장님.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차장 대신 출석하고 있습니다.

○**이병진 위원** 지난번 제가 질의할 때 혹시 같이 들으셨지요, 처장님한테? 우리 사법개혁은 시대의 조류이다, 동의하셨어요.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그렇습니다.

○**이병진 위원** 피할 수 없는 미래이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이병진 위원** 자, 그러면 제가 솔루션을 제공했지요? 기억나십니까, 사자성어, 제가 만든?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죄송합니다. 제가 그 말씀 못 들었습니다.

○**이병진 위원** 많제정적. 경상도 사투리는 ‘정적 많제’ 이렇게 하면 또 기억하기 좋을 거예요. 많은 재판, ‘제’, 제한된 시간, ‘정’, 정해진 예산, ‘적’, 적은 인원. 적은 법관도 되겠지요.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는 요원하다, 요원하지 않다?

아, 대답을 해 주셔야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요원하지 않습니다.

○**이병진 위원** 요원하지 않아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요원합니다.

○**이병진 위원** 요원하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이병진 위원** 저는 말이지요…… 법관들하고 이렇게 공유 좀 했습니까? 국회에서 사법개혁에 관해서 이렇게 예결위에서 제기된 것 혹시 공유해 봤어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여러 사법개혁 이슈에 관해서 저희 법원에서도 많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이병진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법연수원 강의, 오프라인 강의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여쭙어봤더니 70개 중 온라인은 4개 수준이라고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아마 속기록 확인해 보면 나올 겁

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그것을 조사해 봤어요.

한번 PPT 첫 번째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원격 연수가 한 15건으로 40%에 달합니다. 이것 원격 연수가 많아요. 그래서 그때 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수치와 좀 달라요. 한번 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이병진 위원** 게다가 의무연수지만 각 강의마다 평균 한두 명씩 불참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사정은 있겠지만 그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

답변 주신 것과 제가 다시 확인한 것과 약간 괴리가 있다 이런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자, 법관 연수의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법관이 보다 재판을 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을 사법연수원의 교육과정을 통해서 확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병진 위원** 그래서 제가 법관도 신이 아니고 인간 아니냐,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맞습니다.

○**이병진 위원** 거기에 대해서 처장님도 동의했다, 안 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전적으로 동의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병진 위원** 그래서 저는 3개, 교류, 숙의, 성찰 이렇게 나름대로 또 정리를 해 봤습니다. 사건이 다변화되고 다층화됩니다. 사회적 감정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입니다. 법관께서 서로 토론하고 경험을 나누는 오프라인 교육이 빠진다면 결국 오판의 위험이 있고 국민 법 감정과 괴리가 커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에 좀 요청을 주신다면 법관들의 어떤 편향 방지와 사법 다양성 노력을 위해서라도 오프라인 교육 예산을 지원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지원할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사법개혁도 말이지요 이렇게 준비된 집권당에서, 또 가장 파워풀합니다. 진정 스마트한 법관들이 법원에서 논의해서 차제에 달성해야 된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자, 한국 법관이 몇 분이라고 그때 처장님이 말씀하셨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3200명 정도 됩니다.

○**이병진 위원** 3250명, 독일은 2만 2000명.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이병진 위원** 거기의 7분의 1에 불과하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처장님이 말씀 주신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하급심을 비롯해서 상급심, 대법원 법관 증원에 대한 예산 추계 혹시 해 보셨어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산 추계라 함은 대법관 증원과 관련된 말씀……

○**이병진 위원** 대법관 증원도 그렇고 하급심, 상급심 법관도 부족하다고 하시니 그런 것을 차제에 좀 정확하게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법관 증원과 관련해서는 다행히도 작년에 법관 증원법이

통과가 돼서 저희가 거의 정원에, 현원이 거의 정원에 미치는 상황이었는데요. 앞으로 5년간 370명의 법관을 증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병진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 인력 부족은 곧 국민의 재판 지연과 또 본의 아니게 사법 신뢰 저하를 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법관의 정원 숫자, 증원이라는 것은 단순한 조직 확대가 아니라 국민의 사법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동의하십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동의합니다.

○이병진 위원 그래요.

그래서 차장님, 국회와 숙의를 통해서 하급심을 비롯해서 상급심, 대법원 법관 증원 계획에 속도를 내 주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장님, 화제를 바꿔 보겠습니다.

올 들어서 국민적 관심이 가장 큰 재판이 무슨 재판입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아무래도 내란 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병진 위원 맞습니다.

첫 번째, 내란 세력을 척결해야 합니다.

두 번째,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때문에 내란 재판은 국민이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수가 있다. 동의하십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이병진 위원 좋습니다.

때문에 내란 재판의 실시간 중계는 반드시 필요하다. 동의하십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실제 법률이 제정돼서 필수적으로 중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병진 위원 그래서 법정을 찾지 않아도 실시간으로 재판의 온 과정을 국민이 목도하고 지켜볼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올해 사법부 예산이 얼마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2조 5000억 요청드립니다.

○이병진 위원 2조 3000억, 5000억, 제 자료에는 지금 3000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2026년도에 요청한 예산입니다.

○이병진 위원 3000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 중계에 관한 예산이 1원도 없어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이병진 위원 이런 요청 왜 안 하지요? 왜 그러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특별법이 제정돼서 재판 중계가 의무화됐던 시점이 예산편성이 된 이후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당시로서는 예산편성을 요청하지 못했고요. 올 하반기에는 다른 예산을 통해서 재판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2026년도 계속 재판이 중계가 되려면 추가적인 예산편성이 좀 필요한 상황이지는 합니다.

○이병진 위원 신청하세요. 그 어떤 예결위원이 반대하겠습니까.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병진 위원 아니, 대법원장님 예비비 1억 4000만 원을 썼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맞습니다.

○이병진 위원 그리고 3억 2000만 원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이병진 위원 그런데 앞으로 내란 재판 몇 개 남았어요? 9개 남았어요.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이병진 위원 김건희 국정농단 사건 남았어요. 순직 해병대 특검 사건, 그거 아직 1심도 못 했어요. 그래서 저는 예산이 없다고 중계가 중단된다면 사법부가 혹시 오해받을 수 있다.

오해받을 행동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재판 중에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고요, 예산 협조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진 위원 그래요.

바로 예결위원들 중에서 불수용할 위원은 단 한 명도 없다. 저도 예결위원으로서 예산 반영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차장, 보통 개별 재판 사항에 대해서 잘 판단 안 하지요? 개별 개별 재판 사항에 대해서 판단 잘 안 하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법원행정처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병진 위원 법원행정처든 법관이든 누구든.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그렇습니다.

○이병진 위원 그렇습니다.

대장동 사건 범죄자들이 1심에서 판결을 받았어요.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이병진 위원 1심 판결에 대해서 존중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병진 위원 항소 포기에 관해서 차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지금 현재 피고인의 항소가 제기가 됐고 재판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입장을 개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병진 위원 그렇습니다. 예상대로 개별적 재판에 대해서는 의견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중립적이면서도 법률적으로 냉철하게 판단을 하십니까.

그런데 지난 3월 7일 날 윤석열이 어떻게 됐어요? 3월 7일 날 석방됐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구속 취소 말씀하시는……

○이병진 위원 석방됐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3월 12일 날 당시에 처장님이 법사위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정확한……

○이병진 위원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에 처장님이. 그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차장님은? 그때 처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

는데, 3월 12일 날 법사위에서. ‘즉시항고를 통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 봐야 된다’, 속 기록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노코멘트?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제가 처장님 말씀하신 거……

○**이병진 위원** 그래요. 좋아요.

그때 처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개별 재판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해 주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관례를 깨고 시간으로 계산한 것이 납득이 안 됐던 거지요, 처장님 같은 경우도. 그래서 검찰에 어떤 명백한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처장님도 의견을 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 대해서? 지극히 자기 주관적 생각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간으로, 다 날짜로 계산하는데 시간으로 계산해서 석방해 버렸잖아요. 그렇지요? 그때 검찰이 쥐 죽은 듯이 조용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제오늘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윤석열 검사들이 난리법석입니다. 정의운운하는 계기인 것같이 날뛰고 있어요. 그렇지요? 한마디도 못 했던 사람들이 정의의 사도인 양 건강부회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국민들이 이런 행태에 대해서, 검찰 행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검사들의 내로남불이지요. 선택적 정의에 대해서 많이들 비판하고 계십니다. 국민의 선택으로 탄생한 정부입니다. 자기들이 ‘국민의 검찰’ 하는데 지금 하는 행태는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윤석열 검찰입니다.

법무부장관님, 똑심 있게 가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리고 인사혁신처장님,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공무원이 이렇게 마음대로 행동해도 됩니까?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안 됩니다.

○**이병진 위원** 공복이에요. 시빌 서번트(civil servant)예요. 조선시대에는 공노비라고 얘기했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징계와 인사를 법무부와 협의해서 단행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인사권이 법무부에 있겠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저는 강력히 요청을 드립니다. 국론 분열을 부추기는 이들에 대해서 반드시 기강을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님, 인사혁신처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진 위원** 믿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부장관님, 화제를 좀 바꿔 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교육정책 중에서 최우선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부장관 최고진** 지난 정부……

○**이병진 위원** 예, 윤석열 정부 때.

혹시 글로컬30이라고 들어 보셨어요?

○**교육부장관 최고진** 예.

○**이병진 위원** 이거 굉장히 강조하고 했어요. 지자체·대학 간 협력 생태계 구축을 통해

서 지역 대학 소멸을 막겠다라고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선정되는 대학은 5년간 1000억을 지원합니다. 재정에서 막대한 지원입니다. 그래서 기대도 일부에서 했고 책임도 따르지 않겠나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글로컬 선정 대학들에 대해서 말이지요, 그 당시 과제와 성과 지표에 맞게 예산을 지금 집행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교육부장관 최고진** 지속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병진 위원** 그런데 관리를 한다는데, 제가 독단적 생각인지 몰라도 재정을 각 대학에서 여유가 생겼다고 아주 흥청망청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제보가 우리 의원실로도 막 들어와요.

최근 4년간 글로컬 선정 대학들의 축제가수 섭외 내역을 보면 그 이전보다 예산이 2배 이상 증가한 사례가 다수 확인됩니다. 혹시 그거 알고 계세요?

○**교육부장관 최고진** 예.

○**이병진 위원** 부산에 있는 모 대학 같은 경우에는 축제가수 섭외비가 2022년에 6800만 정도 됐는데 작년에는 3억까지 올라갔어요.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더라도 이거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대학이 섭외가 힘든 톱 가수 이런 가수들도 막 섭외하는 그런 사례가 빈번합니다. 대학들은 교비로 집행했다라고 이렇게 해명을 하는데 글로컬 예산으로 재정에 여유가 생겼다, 그래서 흥청망청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구성원들도 하고 있어요. 거기서 글로컬대학 신청이 꼭 바람직한 우리 대학의 모습이 아니라는 반대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분들이 또 제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우려되는 것은 사업 성격과 무관한 예산들이 막 쓰인다는 거지요.

세 번째 볼까요.

신입생 OT 용역대행 1억 2000만 원, 체육대회 중식·다과비 8400만 원, 명절 상여금 1800만 원, 심지어 전기·가스 공공요금에 16억. 개별 대학 실명은 이 자리에서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장관님, 이런 항목들이 글로컬 사업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교육부장관 최고진** 직접 연관성이 있지는 않을 수 있는데요. 글로컬 사업 예산 중에서 이것이 너무 통제가 심하지 않게 사업계획을 원활하게 대학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비 중에서 일부, 총사업비의 20% 범위 안에서 경상경비 같은 사업관리비로 집행은 할 수 있게 풀어 놔습니다. 다만 위원회에서 철저히 감시는 하도록 돼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것들이 만약에 그런 경비에서 부적절하게 사용됐다면 이걸 그다음 해 연차평가를 통해서 그다음에 지원 액수를 정할 때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병진 위원** 이게 무분별한 예산 지원보다도, 그런 것보다 지금 우리 이재명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 알지요?

○**교육부장관 최고진** 예.

○**이병진 위원** 그리고 전국적 균형 인재 양성 정책에 예산을 집중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부장관 최고진**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은 가장 첫 번째 되는 중요한 사업이지

만 다른 대학들……

○이병진 위원 균형 인재 양성 정책 이쪽에 예산을 집중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부장관 최고진 예, 알겠습니다.

○이병진 위원 시간관계상 보충 때 하겠습니다.

○교육부장관 최고진 어쨌든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예산집행이 혹시,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상시적으로 점검 좀 하고요. 만약에 집행내역이 부적절한 게 확인이 되면 필요하다면 환수조치도 하고 지원비를 삭감하는 것 같은 그런 제재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힘 부산 사상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저는 존경하는 윤호중 장관님과 최휘영 문체부장관님 두 분께만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좀 편안하게 쉬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한병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정말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 부산 사상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대식 위원입니다.

윤호중 장관님, 부산시가 내년도 본예산을 17조 9330억 원 규모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장관님, 파악하고 계시지요? 다 파악 못 하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말씀해 주시지요.

○김대식 위원 전년 대비해 7.5% 증가했어요. 역대급 예산입니다. 시민행복도시, 글로벌 허브도시, 디지털·신산업도시, 6대 비전을 가지고 복지·돌봄·안전 분야에 전폭적인 투자를 예고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산의 시민행복도시를 향한 의지는 저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글로벌 해양도시, 허브도시 기반 예산은 전체 1%에도 못 미치는 1066억 원에 불과합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탄생해서 북극항로 또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이런 부분인데 그중에서 311억 원이 올해까지 이전 예정인 해양수산부 직원 관사, 직원 지원 예산으로 포함돼 가지고 실질적인 글로벌 허브도시의 산업, 물류, 인프라 투자 규모는 755억 원으로 1000억 원이 되지 않습니다.

장관님, 이 예산안에 정부의 의지가 좀 담겼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북극항로, 해양특별도시 그리고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이런 것 해야 되는데 지금 해양수도로 만들 의지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 의지가 있으니까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전격 이전 결정을 했고요. 이제 해양수산부가 부산을 글로벌 해양도시로 이끄는 길을 잘 닦아 나갈 것이라고 봅니다.

○김대식 위원 장관님 말씀에 저도 전적인 동감이고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이 법안이 행정안전위원회 2법소위원회에서 상정이 된지가 벌써 1년이 됐는데 이게 지금도 심사 중이에요. 해양도시로 만들고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이 통과가 돼야 되는데, 저는 이게 부산만의 특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남부권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발전시켜서 균형 있게 국토를 발전시킨다는 의지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김대식 위원** 행안부에서는 이것 전적으로 동의하시지요? 찬성하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동의하고 또 다른 부처들과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저는 이재명 정부가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했기 때문에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만 통과시키면 저는 대대적인 지지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행안부장관님 그리고 해수부장관님, 대통령 다 지지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행안부장관님께서 민주당을 좀 설득할 생각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실질적으로 작동이 되고 글로벌 해양도시를 만들어 가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법을 만들기 위해서 심사숙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심사숙고가 좋은데 너무 심사숙고를 오래 한단 말이지요. 이제 심사숙고할 시간은 지났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까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 2019년부터 153개 공공기관을 전국의 10개 혁신도시와 세종시로 이전했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런데 수도권 집중은 여전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나 장관님이나 국무위원 전체가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김대식 위원** 그런데 지금 21세기는 국가균형발전의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도권으로 집중이 되니까, 지금 벌써 보세요. 지금 울산광역시 109만인데 여기 용인, 고양 그리고 수원 이런 데가 이제 광역시를 능가하는 인구로 분포가 돼 있어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특례시가 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이래서 이게 참 걱정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

부산은 또 잘 아시다시피 이미 세계 제2의 환적항이고 세계 7위의 컨테이너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울산과 경남 등 부산의 배후에는 조선 있지요, 철강 있지요, 방위산업 있지요, 국가핵심산업의 산업벨트가 이렇게 딱 포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산을 중심으로 한 북극항로 거점은 대한민국 제2의 성장축의 신모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님, 동의하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산이 가지고 있는 배후의 제조업 기반이 앞으로 AI 시대로 전환돼 나가면서 AI 산업과 결합한 퍼지컬AI의 중심지가 돼 나갈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김대식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부산은 아까도 제가 서두에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 이랬는데 올해 부산이 해외 관광객이 320만 명인데 지금 300만 명을 훨씬 뛰어넘는 이런 아름다운 도시로 탈바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북극항로의 전초기지가 되고 앞으로 부산을 허브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과 함께 더불어서 이 사업을 하루빨리, 좀 더 액티브하게, 다이내믹하게 추진을 하려고 하면 저는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이 하루빨리 통과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국회에서 딱 발목을 잡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장관님도 지금 국회의원직을 가지고 계시고 또 행안부장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이 연내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하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저희는 협조할 준비가 돼 있는데요, 여야 간에 논의를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전북·강원·제주 특별법을 같이 패키지로 묶어서 처리를 하겠다…… 좋아요. 그렇게 같이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선택과 집중을 해서 좀 빠른 시일 안에, 민주당뿐만 아니라 장관님의 의지가 저는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님 그렇게 협조하시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부산시를 북극항로로 나아가는, 글로벌 허브도시로 만들어 나간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그것이 저의 의지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님의 의지라는 점도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대식 위원**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고 세계지도를 거꾸로 딱 하면 부산이 전 세계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장관님, 전 세계지도를 거꾸로 매달아 놓고 집무실에서 한 번만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자주 보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자주 보고 있습니까?

또 하나 장관님, 이왕에 질문드렸으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지역구가 부산 사상구인데 공업도시로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오면서 우리나라의 산업도시를 견인했고 이끌어 왔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상이라면 사자가 모래 사 자예요. 모래 위에 지어진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낙동강보다 지반이 낮단 말이지요. 이러니까 비만 오면 완전히 침수지역이야.

그래서 지난번에 행안부에서 협조를 해서 낙동강 침수가 되면…… 저 지도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전체 배수펌프장, 저류지를 대응 시설을 하겠다 해 가지고 사상구를 지정했어요. 지정을 했는데 행안부에서 지정만 해 놓고 예산을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이게 계속해서 늦어지고 또 부산 사상구의 구민들은 희망 고문밖에 될 수가 없단 말이지요. 매년 홍수가 지고 장마가 오면 또 걱정이야.

지금도 땅꺼짐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가지고 지금 벌써 올해로서 열 번째가 넘는 땅꺼짐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꼭 제 지역구라고 한 게 아니라, 꼭 제 지역구가 아니어도 전국에 이렇게 보면 행안부에서 안전관리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하나 좀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 어떠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상습 침수지역뿐만 아니라 상습적으로 재난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이전 상태로의 복구 수준에 머물렀습니다만 이제는 영구 복구 수준의, 더 이상 재난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복구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배수펌프장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기획재정부의 예타 통과를 기다리느라고 아직 예산편성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이것을 빨리 좀 해서 기획재정부에서도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은 우리뿐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차관님, 그리하시겠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안전은 시급한 국가적인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식 위원** 어떤 걸 하다 보면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될 수밖에 없는데 참 기획재

정부는 할 일은 많고 돈은 없고 머리도 아프시겠지만 국민의 안전 문제 이런 것은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안전 문제가 국정의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식 위원 고맙습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장관님도 잘 점검하시고 잘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김대식 위원 최취영 장관님, 고생하십니다.

현행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르면 연면적 1만㎡ 이상 신증축하는 건축물은 건축 비용 1%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조각 그다음에 미술작품으로 설치하거나 건축비의 1%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알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런데 이 제도가 도입된 것이 벌써 30년이 됐습니다. 지속적인 도시개발과 거리 환경 등이 활성화됨에 따라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도 도와주고 지금 우리가 서울의 곳곳에 가면 건물 앞에 아름다운 조각 작품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옛날에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 그런 조각 작품을 감상하기도 힘들었잖아요. 그러나 지금 신축 건물이 들어서면 ‘아, 저 작품 작가는 누구 작가지?’ 국내 작가인지, 해외 작가인지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이 제도가 문화예술 발전과 진흥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장 예술가들의 목소리를 들어 보면 이것은 좀 개선을 해야 된다. 이것 목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듣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미술작품 설치가 의무화된 95년도부터 2025년 2월까지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의하여 설치된 미술작품이 몇 작품인지 대충 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한 2만 5000점 정도……

○김대식 위원 맞습니다. 2만 4616건입니다. 장관님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장르별로 보면 조각이 1만 9176점, 이게 77.9%를 차지하고 회화가 4537점, 18.4%. 이 두 장르가 전체의 96%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제일 많고 6400점, 그다음에 서울 3800점, 부산 2300점 그리고 인천이 1700점으로 집중화돼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 작품 설치의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 확대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상당히 참 의미가 있고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민간 건축주들 있잖아요, 미술작품 설치 대신에 2011년에 도입된 선택적 기금제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김대식 위원 그러니까 설치 의무에 따라 여기에다가 작품을 설치를 안 하면 거기에다가 그 돈을 그만큼 내는 것 아닙니까? 몇 프로 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지금 70%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이것 세제 혜택 같은 것 보면…… ‘그러면 미술작품 설치할 필요가 뭐 있노? 내가 70% 내고 말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드는 작품 같으면 ‘700만 원만 드는데 내가 1000만 원 들여서 할 필요가 뭐 있노?’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상향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렇게 해야 이 도시가 아름답게 되지 않겠어요?

우리 국회도 마찬가지예요. 국회도 지금 의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도서관 앞에 해 놓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거기 와서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하는데. 돈으로 낼 것 같으면, 1000만 원 들 것 같으면 건축주가 700만 원만 내지 누가 1000만 원을 합니까? 그렇게 할 바에야 차라리 1200만 원으로 올려라, 작품 하기 싫으면. 그러면 문화부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써서 문화예술을 하는 분들한테 도움을 주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이제는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제도개선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저도 위원님과 똑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지자체, 미술계, 건축계 쪽의 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리고 우리가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서울올림픽을 치렀잖아요. 지금 송파에 가 보면 정말 세계적인 작가들의 작품들이 진열돼 있습니다. 장관님, 한번 보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거기는 못 봤습니다.

○김대식 위원 세계적인 작품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때 당시에 돈이 예를 들어서 천만 원 되면 수십 배, 수백 배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품을 그대로 방치해서 두겠습니까, 이게 국가 자산인데? 내가 체육진흥공단 이사장한테도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저것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 저것은 전 세계의 작가들이 와 가지고 놀랄 정도로, ‘와, 이런 작품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에 있나’ 이 정도인데 완전 방치야.

장관님, 이것 정말 국가 자산인데 이렇게 놔둘 필요 없습니다. 조금 보완하고 조금 부족한 것 있으면 수리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그 작품을 보고 감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빠르게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것은 꼭 한번 챙겨 보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 자산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예, 알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 최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상 위원 PPT가 나오면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오늘 존엄 그리고 차별, 평등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간이기에 필요한 게 저는 이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념은 곧 이상이고 지향이지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저는 존엄주의가 아닌가. 최근에 디그너티(dignity)와 뒤에 크라시(cracy)를 붙여서 디그노크라시(dignocracy)라고 표현합니다, 존엄주의. 반대로 존엄을 훼손하는 것, 존엄에 방해되는 것들은 공적으로 적절하게 제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정과제를 보면 인권위에 존엄, 권리가 보장돼야 된다. 노동부에서는 차별과 배제가 없어야 된다.

앞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PPT.

여가부에서는 성평등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로 가서 보면 국제노동기구에서도 직장에서 폭력이나 괴롭힘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법도 있고요.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발언을 하셨는데 차별과 혐오가 걱정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다.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으니 앞으로 엄히 대책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런 유럽의 판례가 있습니다. 유럽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인정하면서도 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은 강하게 규제합니다. 2004년에 스웨덴의 한 고등학교에서 동성애를 성적인 일탈 성향으로 비난하는 전단지를 뿌렸는데 이들이 형사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럽인권재판소에 구제를 요청했더니, 그러면서 든 이유가 학교교육에서 동성애를 객관적으로 가르치지 않은 데 대해 토론을 이끌어 내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유럽인권재판소는 그런 목적이었다면 모욕적인 표현을 쓰지 않고도 달성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해서 처벌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잘 짚어 준 거지요.

저는 민주주의가 각자 다르게 일리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각자가 다르게 일리가 있습니다. 전부 맞다고 주장하는 것은 저는 민주주의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각자 다르게 일리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일리가 어디가 더 크냐에 따라 그때그때 공동체 의사결정이 달라지는 거지요. 그렇다면 각자가 주장하는 일리를 자유롭게 주장할 수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나의 옳음보다는 너의 있음이 더 중하다는 인식이 민주주의자의 기본이 아닌가라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의 옳음보다 너의 있음이 더 우선한다.

다음 보지요.

성소수자 문제 관련해서…… 성평등가족부장관님 안 계시나요?

○성평등가족부기획조정실장 김기남 기조실장입니다.

○최기상 위원 성소수자분들이 개인의 선택에 관한 문제입니까, 아니면 선천적인 부분, 어떻게 지금 의학적으로 판단이 되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성평등가족부기획조정실장 김기남 이 부분은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기상 위원 반면에 종교는 뭐 100% 선택 아닙니까?

○성평등가족부기획조정실장 김기남 예.

○최기상 위원 타고난 때부터 어느 종교를 지녔다라는 것은 아닌 거지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 지금 불교나 가톨릭이나 개신교가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우리 한반도에서 성소수자로서 살아온 분들이 먼저 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옛날부터.

그런데 종교가 들어온 것은 불교는 아시다시피 삼국시대고요 가톨릭은 조선 중기 정도 될 것 같고요 개신교는 1800년대 후반이라고 나와 있대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차별에 관한 여러 가지 법률에 관해서 논리가 있는데 일부 종교적인 이유로 반대하는 분들이 있는데 좀 납득하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정교 분리를 택하고 있고 어느 특정 종교의 교리에 맞나, 안 맞나가 법을 제정하는 이유가 안 되고 더더욱 그게 존엄에 반하는 차별에 대한 근본적인 규정을 하려고 하는 데는 곤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결국은 이게 차이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우리 사회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이지 않습니

까. 차이나 다름은 소통의 전제가 된다고 합니다. 소통은 동일한 것까지는 소통이 아니라고 하지요. 그냥 양적인 증가만 있을 뿐입니다. 소통은 다른 것끼리 만났을 때 서로 부수고 들어가서 더 큰 에너지와 시너지를 만들어 내는 게 소통이고 그래서 소통은 차이나 다른 것끼리 일어나는 일이지요. 그런데 차이를 소통이 아니라 차별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는 결국 동일화하려는 시도잖아요, 그게 아시다시피 전체주의고. 획일화, 갈등이 일어나고 동일화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혐오를 유발하고 폭력으로 나아가는 게 이 시대의 많이 걱정스러운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 차이나 다름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민주주의자고 품격 있는 어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유명한 표현이지요. ‘나는 당신의 의견에 반대하지만 당신의 말할 권리를 위해 죽음을 각오하고서 싸우겠다’ 이게 누가 한 말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볼테르다 아니냐, 표현이 있는데 어쨌든 저 말은 유명한 말이지요. 당신의 의견에는 반대하지만 당신이 말할 권리를 혹시 억압받는다면 그것에 대해 함께 싸우겠다. 그래서 관련해서 얼마 전에 돌아가신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동성애자도 주님의 자녀이며 가족의 일원이 될 권리를 갖고 있다.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내쳐지거나 불행해져서는 안 된다’. 차이가 차별로 전환되어서 그로 인하여 누군가로부터 괴롭힘을 당한다면 그것을 위해서는 함께 싸우겠다라는 자세가 민주주의자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 보지요.

박용현이라는 기자가 쓴 글인데요. 펜도 칼과 방패를 든 상대방을 찌를 때 무기가 되지만 무방비 상태의 상대를 찌를 때는 펜은 흥기일 뿐이다. 펜이나 말이나 마찬가지로 찌를 때 흥기가 된다면 박용현 기자는 펜을 거두어들일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흥기가 된 펜은 누군가의 심장에 박혀 버리기 때문이다.

다음 보지요.

우리 사회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 친밀한 관계에서의 여성 살해 피해자가 수가 이틀에 한 명꼴, 말씀드렸더니 이전에 정성호 장관님이 깜짝 놀라셨잖아요. 그렇지요? 많이 놀라셨습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정부 5개년 계획 때 이 부분을 반드시 바로잡겠다라고 말씀도 하셨어요. 특히 과거에 여성가족부에서도 교제폭력이나 스토킹 관련한 부분에 관해서 법제도 만들고 통합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찰청장께 여쭙어보려고 하는데, 경찰청에서는 올해 8월에 종합대책이라는 것을 발표를 해서 가지고 여러 부처가 같이 협의를 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 경찰법무부 여가부 복지부 교육부, 이렇게 발표를 하셨습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최기상 위원 그래서 종합적인 지원책을 강구하겠다라고도 하셨어요. 그래서 관심 있게 들여다봤더니, 최근에 성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쭙봤더니 회의를 하시는 했는데 그때 무엇이 결정되고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좀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특히 저런 답변이 있더라고요. 관련이 없는 부서를 배제하겠다는 취지시던데 물론 관련 없는 부서가 함께하면 효율이 떨어지겠습니다만 그래서 회의 연 것을 봤더니 참여 부처가 이렇게

된 회의를 여러 번 하셨어요.

이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세워진 대책이 있으면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교제폭력과 스토킹 범죄, 가정폭력 등을 망라해서 피해여성들을 어떻게 사전에 예방하고 보호할 수 있는지 만들어 놓은 게 있으신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저희 경찰 자체적으로는 우선 관계성 범죄에서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선 현장에서 분리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장의 경찰관들이 임시조치 그다음에 잠정조치를 통해서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분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유치장 유치라든지 그다음에 수사를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다든지, 적극적인 그런 분리조치를 우선적으로 하고.

또 피해자에 대해서는 지능형 CCTV를 설치해서 가해자가 접근하는 것을 사전에 감지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피해자 보호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여러 국회의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교제폭력 관련한 세미나를 실시했는데 거기에서도 다수의 의원님들이 공감한 것이…… 현재 관계성 범죄로 볼 수 있는 게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이 있는데 가정폭력과 스토킹은 법률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교제폭력에 대해서는 지금 법률이 없는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에 법률을 제정하는 방향으로 의견도 모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찰에서 자체 인력, 피해자 보호하는 인력 증원을 위해서 행안부에 수시직제로 요청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기상 위원 구체적으로 여쭙보지요.

성평등가족부의 실장님, 방금 경찰청장께서 얘기하신 이 회의에 함께하셨는데 특별한 변화가 되는 조치가 어떤 게 있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성평등가족부기획조정실장 김기남 교제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법무부, 경찰청 그다음에 성평등가족부가 협의체를 통해서 각각의 역할이라든지 대책에 대해서 수시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예방이라든지, 피해자 보호에 대한 부분은 성평등가족부 그리고 수사라든지 처벌 이런 부분들은 법무부와 경찰청과 공조하고 있고, 특히 법무부와는 교제폭력 처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들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최기상 위원 아무, 알맹이 있는 내용은 특별히 없는 것 혹시 알고 계시나 모르겠습니 다, 방금 답변 중에. 지금 이 예결위 질의를 보고 있는 혹여나 교제폭력의 피해가 우려되는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수많은 여성들께서 두 분의 설명을 듣고 안심이 돼야 될 텐데 요.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단 한 명의 여성도 교제폭력으로 인하여 고통받거나 특히 목숨을 잃는 불행한 일은 없어야 될 텐데요. 그런 의지를 느끼기에는 특별한 내용이 없으셔 서요.

이 언론 기사를 보면, 결국은 현장에 가면 이 얘기입니다.

보십시오.

일단 인력이 없어요, 사람이.

경찰청장님, 전국에 경찰서가 몇 개나 됩니까, 우리나라에?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261개가 있습니다.

○최기상 위원 그러면 각 경찰서마다 청장님이 말씀하신 그 업무를 할 경찰관이 몇 명

씩이나 있을까요? 생각을 한번 해 보시지요. 몇 명씩이나 있을 수 있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지금 현재 그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이 전체적으로는 950명 정도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기상 위원** 그러면 경찰서별로 나누면 서너 명?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260 나누면……

○**최기상 위원** 이 인력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어떠세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80여 명 정도 수시직 제로 해서 행안부에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 인력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증원하는 작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기상 위원** 올해도 늘렸다고 내용에 나와요, 경찰관 신규도 늘리시고. 그런데 실제로 이분들이 이 업무만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늘린 분들이?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그렇습니다.

○**최기상 위원** 물론 다른 중요한 업무도 많겠습니다만 이 일도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셔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여기 2026년 여청수사팀 인력 증원 보니까 행안부에서 5명 증원 결정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이게 맞나요? 어때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전에 인력 증원이 이렇게 좀 이루어진 면이 있어서 아마, 소요 정원으로 해서 인력이 증원되는 부분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 인력 조정으로 또 필요한 경우 조정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기상 위원** 행안부장관님, 저희가 경찰서별로, 지방자치단체별로 들어가면 결국은 이 업무를 담당할 경찰관이 한두 분, 서너 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인력을 보강하는 거를 강구할 수 있을까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인력을 하루아침에 갑자기 증원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만 현재 올해 들어서도 정기 직제에서 28명 스톱킹 수사인력을 증원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5명에 관한 말씀은 아마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청장대행 말씀하신 것처럼 80여 명의 증원 요청이 있어서 이것을 증원 검토 중이고 현재 증원 가능한 안으로 검토 중인 것은 한 40여 명 정도는 우선 증원 가능하단 이렇게 제가 보고받고 있습니다.

○**최기상 위원** 경찰청장님, 혹시 어느 지역에서 교제폭력이나 교제폭력 관련한 살인이 더 많이 일어났는지 통계는 가지고 계십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저희가 통계 분석은 하는데 특히 어느 지역인지 그거는 제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는 않고 어느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국에서 그런 범죄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기상 위원** 지금 인사처에서 보면 유능한 공무원들은 특별승진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관분들도 특진이라는 제도가 있죠?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그렇습니다.

○**최기상 위원** 그런데 혹시 교제폭력을 예방을 했다거나 초기에 진압을 해서 일어나지 않게 잘했다, 이런 분들이 특진한 경우가 지금까지 있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저희가 교제폭력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의 인력은 피해자 보호를 전체 총괄하는 부분이고 또 교제폭력 사건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은 전국에 한 3000여 명 정도 있습니다. 사건 수사하고 이 부분은 교제폭력, 관계성 범죄 전체를 피해자 보호하는 인력이고 그 사건 수사하는 직원들 포함해서 특진 인원이 있습니다.

○**최기상 위원** 기재부차관님, 이 관련한 예산 논의되면,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긍정적이고 능동적으로 챙겨 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국정의 최우선 순위라고 생각합니다.

○**최기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만찬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20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회의중지)

(19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의 안도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도걸 위원** 존경하는 행안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장관님 안 계신가요?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 정영준** 장관님 바로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안도걸 위원** 먼저 수도권 집중 문제 논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극 공화국이다. 이게 우리 지속가능성을 가장 저해하는 그러한, 발목을 잡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극복하는 게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수도권 일극화 심화를 나타내는 여러 지표들이 좀 있습니다. 먼저 GRDP겠지요. 지금 11%의 면적을 차지하는 수도권의 경제력이지요. 이게 지금 53%입니다. 그 비중을 계속 높이고 있고요.

특히 경제력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 금융 수신 기능을 보면 70%에 달하고 부동산 시가의 65% 그리고 국세, 국세 중에서 가장 경제력을 나타내는 게 법인세 아니겠습니까. 이게 75% 이렇게 빠르게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큰 문제인 겁니다.

수도권의 인구집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이동이지요. 수도권의 순유입 지표를 가지고 보니까 8년 연속 지속이 되면서 지난 8년간 총 43만 명이 수도권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한 해에만 4만 5000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2030, 청년세대 5만 8000명. 40대·70대 장년층은 지방으로 약간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청년 인구들이 죄다 수도권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거지요. 이유는 뭐겠습니까? 일자리 아니겠습니까? 좋은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500대 대기업의 본사 77%가 수도권에 입지를 하고 있고 서울에 지금 57%가 입지가

때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결국에는 미래의 성장동력이라 할 수 있는 고급 인력들이지요. R&D 인력이 어디에 모이느냐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죄다 수도권에 집중돼 있지요. 연구 인력의 67%, 연구개발비의 70%가 수도권입니다.

수도권 다음에 지방의 R&D 특구라 할 수 있는 데가 대전 아닙니까? 대전의 연구 인력의 한 10배 정도 되는 겁니다. 격차가 심해도 너무 심한 겁니다.

장관님,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지금 의욕적으로 이 문제를 타개하겠다는 거고 해서 5국 3특의 국가균형성장전략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안도걸 위원 이 기본 취지나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 주시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정부는 5국 3특 전략을 통해서 수도권 일극체제의, 우리 국토가 일극체제로 개발되고 또 인구가 수도권으로 50% 이상 이렇게 몰려 있는 이런…… 거기에다가 경제력은 75% 이상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고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이 국가성장의 기본 동력이다라고 파악을 하고 5개 권역과 3개 특별자치도에 대한 전략적인 발전 계획을 세워 가고 있습니다.

○안도걸 위원 그렇습니다.

비전은 핵심적인 내용을 잘 짚었다, 그리고 굉장히 실효성 있는 비전을 제시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비전을 실행에 옮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권역별로 실행 로드맵이 수립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가장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저는 네 가지라고 생각되거든요.

첫 번째로는 권역별로 미래혁신산업 육성전략을 수립해야 될 겁니다. 이건 범부처가 달려들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기업과 공공기관을 지방에 내려가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화산업 분야의 앵커기업들이 지방으로 가야 되고 또 거기에 기술형 벤처기업이 창업을 해야 되고 이를 뒷받침하는 파격적인 세제 지원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2단계 이전계획도 지금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지역 특성과 또 공공기관의 특성을 매칭시킬 수 있는 이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게 지방의 이러한 발전을 이끌 핵심 인재 양성 아니겠습니까?

○교육부장관 최교진 예.

○안도걸 위원 그래서 이번에 거점국립대 육성하는 사업이 발표가 되고 또 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안 내용을 보니까 9개 대상 대학 중에서 우선 3개만 선별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9개 대학에 동시 지원이 돼야 되고요. 또 성과에 따라서 그걸 차등 지원하는 형태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 지역인재 양성은 지금 어느 지역에 우선순위가 없습니다. 모든 지역이 자기 지역에 맞는 산업을 키워야 되고 그 산업을 이끌 인재를 지금 화급을 다뤄서 키워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9개 지역이 동시에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9개 대학은 지금 산업 영역별로 특화가 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바이오라고 해 가지고 경북대다라고 하면 경북대가 맹주 역할을 하면서 나머지 8개

대학이 서로 공조를 이루는, 그래서 같이 커리큘럼도 만들고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인력도 교환하고 하는 그런 형태로 움직이게 된다면 유사, 중복 이런 문제도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부장관 최고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실제로 계획을 세부적으로 짜려고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 모두가 똑같은 예산으로 출발을 하기를 원하는 여론도 사실 상당히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것은 같이 하되 준비 정도 이런 걸 봐서 세 군데를 먼저 하게 되는 걸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도결 위원** 이런 방향에 대해서 기재부에서도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행계획이 뒷받침되려면 결국 법과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초광역 행정 추진체계가 강력하게 구성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법적 권능을 갖는 초광역 행정협의 기구가 설립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초광역 협의체가 움직이려고 한다면 별도의 재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도 지금 초광역 특별회계의 설치, 이게 국정과제에도 담겨 있는 문제거든요. 이 문제 그리고 재원은 지방소비세를 일부 할당한다든지 또 지방교부금을 확충해서 여기에 별도 배정하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권역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민간 투자자금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저는 권역별로 산업 육성 펀드를 좀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국민성장펀드 150조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 부분을 지역에 할당하기로 돼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 자금이 이 펀드에 배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권역별 투자공사 설치도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초광역 특별회계라든지 재정,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 장관님의 견해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5극 3특에, 특히 5극은 여러 개의 광역 지방정부가 권역을 이루어서 발전전략을 공유하기 때문에 이러한 발전전략을 끌고 나갈 거버넌스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권역별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초광역 단위로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그 예산을, 초광역계정을 신설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을 추진 중이고요.

또 그것과 아울러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방교부세 배분율을 상향하고 또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위해서 지방소비세율을 상향하는 이런 방향을 통해서 기본적인 재원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또 특히 포괄 계정을 넓혀서 지방의 권한을 훨씬 더 폭넓게 부여할 예정입니다.

또 아울러서 지금 말씀 주신 국민성장펀드에 대해서도 권역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도결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안부장관님, 지금 지방재정 있잖아요, 내년도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제가 자료를 좀 모아 봤어요. 그런데 전체 내년도 세출과 세입예산은 다 집계는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입수 가능한 통계만 가지고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았더니요, 내년도 지방재정들 지출 증가율이 있잖아요, 지자체의 지출 증가율. 광역지자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부 다 중앙정부 지출 증가율에 미치지 못합니다. 서울만

7.1%고 나머지 지자체들은 죄다 경상성장률 이하입니다. 2~3%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바로 지방세수가 안 견혀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서울은 세수가 좋습니다. 세수가 좀 늘어나는데 다른 지역은 다 지방세수가 마이너스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방세수 증가율이 지금 떨어지고 또 비중도 떨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은 지방교부세는 소폭 증가가 돼 있더라고요. 한 3.4% 정도 총액이 좀 늘어나게는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마냥 좋을 일은 아니지요. 좋기는 자체 재원이 늘어나는 게 맞는데 결국에는 중앙에 의존하는 재원이 늘어난다는 문제가 또 조금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결국에는 지자체의 내년도 지출 증가율이라든지 세입 여건을 보건대 지방이 시급한 경제회복의 역할을 지금 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중앙정부가 조금 더 역할을 해야 된다 해서 적극적인 재정이 불가피한데 또 지방의 여건을 보았을 때 그런 점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지만 어떻게든지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타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 지방 관광 활성화입니다. 지방 관광 활성화 문제이고 기업이 지방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유인 조치를 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방재정이 어렵지만 필수적인 지출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집행이 돼야 하지 않느냐 싶거든요. 그런데 제가 몇몇 지자체에 좀 알아봤더니요, 예를 들어서 중요한 지하철 철도라든지 도로 확충 사업들이 내년도 예산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 예산을 지금 제대로 반영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 지방경제에 필수적인 이런 사업들은 다소 기채를 하더라도 이것을 빨리 완공시키는 게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좋고 또 세수 증대에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너무 엄격하게 돼 있는 지방채 발행 한도에 대해서 행안부장관님이 가지고 계신 재량권을 발휘를 해서 필수적인 지출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조금 늘릴 수 있도록 한도를 완화시켜 주시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지방채 발행 한도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안부장관에게 요청을 해서 승인하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방정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긍정적으로 정책을 풀어 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안도걸 위원** 탄력적인 운영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법무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차관님이 계신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법사위 때문에 법무부차관이 출석해 있습니다.

○**안도걸 위원**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여기가 어느 장면입니까? 어디 장면이라고 생각하세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인천공항 출입국장의 외국인 심사대 부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안도걸 위원** 예, 초만원입니다.

지금 입국심사에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기도 하지요, 그만큼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빨리 여객의 흐름을 처리해 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지요. 장기간 여행에 굉장히 지친 외국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신속하게 처리되는 게 굉장히 필요하지요. 그리고 또 한국의 발달된 여러 가지 IT 시스템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걸 활용해서 우리가 잘 해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외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증가하고 있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안도결 위원** 저는 금년에 2000만 명 돌파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게 예상하시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관광객들의 입국이 더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도결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코로나 수준은 회복되고 2000만 명을 돌파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국인 심사대가 혼잡이 아주 심해서 최대 1시간 30분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이런 문제가 좀 있네요. 이것은 빨리 시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에는 뭐냐면요, 무인 심사대…… 유인 심사대가 있고 무인 심사대가 있지요. 무인 심사대를 많이 이용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관광객의 사전 정보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입국객의. 그래서 결국에는 제일 좋은 방법이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회랑에 사전 무인 등록 시스템, 키오스크라고 그러지요 그것을 좀 많이 배치를 해서 거기서 정보를 입력하고 바로 무인 심사대로 가 가지고 입국심사를 받도록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안도결 위원** 그런데 이러한 사전 등록대, 키오스크가 우리는 아직 도입이 안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안도결 위원** 외국에서는 이런 것을 다 도입을 했고 우리나라야말로 IT, AI에 앞서 나간다는데 왜 이게 아직도 안 돼 있어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저도 9월 달에 인천공항에 가서 현장을 봤는데요. 무인 심사대는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외국인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 사전 등록을 해야 되는 이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잘 활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시다.

○**안도결 위원** 그렇지요. 이 사전 등록 키오스크가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더라고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안도결 위원** 1대 설치하는 데 제 생각에도, 제가 알아보니깐 한 5000만 원 전후예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키오스크를 설치를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위원님께서 적극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말씀드리고요. 이것을 통해서 외국인의 불편도 감소가 되고 또한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도결 위원** 그래서 이게 큰돈 들이지 않고 굉장히 가성비 높은 예산 지출이 가능한 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시는 기재부차관님, 이 문제에 대해서 보고받으셨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안도걸 위원 어떻게, 좀 하실 겁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저런 상황이 원만하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도 국가의 중요한 역할인 것 같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증액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도걸 위원 필요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힘 김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상 위원 법무부장관님 안 나오셨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법무부장관님께서도 법사위에 지금 출석해 계십니다.

○김위상 위원 잠시 후에 나오시는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법사위가 마무리되면 예결위에 출석하실 예정입니다.

○김위상 위원 오늘 오전과 오후에 진행된 위원님들의 질의와 장관들의 답변을 종합해 보면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한 장관님의 입장 표명 그리고 일련의 발언들에 대해 매우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천억 원대의 범죄수익 중 실제로 환수된 금액은 약 400억 원 수준에 불과하고 결국 7800억 원이 넘는 추정 요구액 대부분이 사라진 셈입니다. 수사 실무를 맡았던 검사들은 항소 필요성과 법리적 쟁점이 충분하다고 판단했음에도 대검 지도부와 법무부가 이를 불허한 데 대해 강한 분노를 표하고 있습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다른 공무원과 달리 항명해도 파면되지 않는 검사징계법, 사실상 검사특권법을 폐지하겠다고 하면서 항명 검사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임 또는 파면의 징계를 받도록 하겠다고 겁박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적·행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할 것이다, 위법 사실이 밝혀지면 특검으로 엄단하겠다고 여러 가지 겁박들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이번 결정이 법적 판단의 결과라기보다 권력의 개입에 따른 수사 종결이라는 점, 모든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장관과 노만석 대검 대행의 발언 내용은 서로 상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관은 법리 검토 결과 항소 이유가 부족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노 대행은 대검 지휘에 따라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 오늘 오전과 오후에 충분히 설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위상 위원 이것은 결정 과정에 외압이나 부당한 개입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심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권력에 의해서 검찰이 본래 역할을 다하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로 분명히 기록될 수가 있습니다.

차관님.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김위상 위원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이 국민의 법감정과 사법정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진지하게 법무부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외교부장관, 법무부장관, 경찰청 차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는 차관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 외교부, 경찰청으로 구성된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정부 합동대응팀은 캄보디아 구금 피의자 64명을 전세기로 송환했습니다. 맞지요? 모두 범죄피의자 신분이었고 전세기를 타자마자 체포영장이 집행돼서 송환 후 관할 경찰서로 압송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이 세 기관이 전세기를 띄우면서 예산을 썼는데 상대 쪽에서 예산을 썼다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혈세로 분명히 전세기를 띄웠는데 지금 지출 주체가 없는 거예요.

외교부차관님, 외교부에서 썼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저희 예산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김위상 위원 법무부에서 썼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제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법무부는 지출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위상 위원 경찰청장님.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직무대행입니다.

○김위상 위원 직무대행, 경찰청에서 썼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경찰청에서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김위상 위원 그러면 용산에서 썼습니까? 아니, 3개 기관이 돈 쓴 데가 없어요, 돈 쓴 데가. 전세기를 띄웠는데 지출 주체가 없다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은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교부장관님, 해외에 체류하거나 방문한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외교부는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외교부는……

○김위상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재외공관이 있기 때문에 재외공관을 통해서 영사조력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위상 위원 그게 국가의 책무지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그렇습니다.

○김위상 위원 지난 4월에 캄보디아 대사관이 목숨을 걸고 범죄집단을 탈출한 우리 국민을 문전박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시아누크빌 범죄집단에서 극적으로 탈출해서 오전 6시경에 프놈펜 대사관에 도착한 국민을 근무시간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장 거부했습니다. 여기 물건 파는 데도 아니고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두려움에 떨면서 피해자는 주차장에서라도 있게 해 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사관 관계자는 ‘저희 대사관은 오전 8시에 문을 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인근 가게에서 물건을 사는 척하며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업무가 시작해서 대사관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이후에 외교부는 업무시간 외에도 국민이 방문할 경우 영사조력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관님, 이게 맞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지금 현지 경비인력에……

○김위상 위원 이게 맞지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교육 실시를 하고 있고요.

○김위상 위원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감금 등 온갖 범죄가 폭증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맞지요?

그러면 장관님, 다른 한국 대사관, 필리핀이나 아프리카나 이런 데도 이런 식으로 일합니까? 출근시간에만 일하고 밤에 문을 닫았을 때는 영사조력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한테? 어떻게 대사관이 이런 일들을 합니까, 여기 물건 파는 데도 아니고?

연합뉴스 기사를 마저 보면 피해자의 가족이 감금 사실을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구체적 확인도 없이 ‘납치된 게 아닌데 거짓말을 한 것 같다’, 이걸 경찰청 차장님한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것 같다고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관계 파악해 보셨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뭐 사실관계……

○김위상 위원 맞지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관계가 여러 가지 보도되는 내용과 약간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이유야 어쨌건……

○김위상 위원 경찰 역시 외교부와 함께 국외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외교부와 경찰청은 향후 이런 비정상적인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과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급증하는 나라에서 재외국민을 제대로 보호할 대책을 수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그러겠습니다.

○김위상 위원 허민 국가유산청장님, 수고하십니다.

전국의 명승은 국민이 많이 찾는 소중한 문화유산 맞지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그렇습니다.

○김위상 위원 후세까지 보존해야 될 소중한 자산입니다. 명승을 바라보는 국민의 기대와 요구도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해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명승이 몇 군데 지정돼 있는지 아십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현재는 한 200군데 이상입니다.

○김위상 위원 제가 자료를 받기로는 한 138군데……

○국가유산청장 허민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까지 합하면……

○김위상 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명승은 우리가 보존해야 할 소중한 자연유산입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관광객과 주민을 위한 탐방 명소기도 합니다. 그렇지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김위상 위원 그래서 방문하는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은 자연경관을 보기도 하고 과거 방송이나 역사의 흔적들을 회상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젊은 세대도 건강과 휴식 그리고 자연을 느끼기 위해 삼삼오오 방문해서 SNS에 방문 인증을 남기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유산청이 좋은 명승지를 보호해 왔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청장님, 명승과 관련해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요구하는 부분이 있다면 행정적 검토라는 답변이 아닌 보존의 범위 내에서 의견을 빠르게 이행할 의지가 있으신지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명승은 어쨌든 국가가 지켜야 할 그런 경관이나 학술적 가치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그다음에 그걸 인정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김위상 위원 이렇게 보면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인프라 확충이나 주민생활과 직결된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부처와 국가유산청의 검토 및 심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검토 단계에서 또는 심의 및 의결 단계에서 지연되거나 또는 보류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때로는 애매한 경우에는 부처 간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도 발생이 됩니다.

청장님, 최근 5년 동안에 명승 현상변경 신청이 몇 건인지 아십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명승은 사실 다른 것에 비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명승은 위낙 지역도 넓기도 하고요.

○김위상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한 20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중에 5건이 허가가 되고 7건이 조건부허가가 되었고 8건이 불허가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허가가 잘 안 날뿐더러 관련 부처와 국가유산청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다 지연된다는 지적에 대해 개선방안이 있으십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명승은 일단은 보존과 그다음에 문화환경 보호에 대한 영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게 영향을 미칠 경우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또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일시적인 행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현상변경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러나 이것이 보존지역에 영향을 미칠 경우는 저희들이 또 자세한 검토가 필요할 걸로 생각합니다.

○김위상 위원 국가유산청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에서, 시대적 흐름에 따라 명승 활용의 유연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가 국감에서 서면질의를 했던 적 있습니다, 이번 국감에. 자연유산법 제3조 2항에 따라서 자연유산의 보존·관리는 지속가능한 활용과 조화를 이루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관, 해설관 또는 관광객 쉼터 등은 명승의 가치를 향유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보며 국가유산청은 계획수립 단계에 지자체와 사전영향협의 등을 통해 명승 보존 및 경관에 미치는 부정적인 요소를 최소화하여 추후 심의 절차 등을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청장님.

그래서 청장님, 명승 보존과 환경에 부정적인 요소가 없다면 빠르게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으니까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내용을 보면서, 영상정보라든가 아니면 명승에다가 미디어아트를 쓰고 이런 경우는 조금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내용을 좀 검토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위상 위원 제가 예를 하나 들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국민의힘 박형수 예결위 간사님 지역인 청송 주왕산 주산지의 경우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의 촬영지로 당시 수상 사찰이 임시로 설치되었다 철거가 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주왕산은 잘 압니다. 우리나라 국립공원도 되지만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인 곳입니다.

○**김위상 위원** 자주 가 보셨습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한 세 번 갔습니다.

○**김위상 위원** 경관이 굉장히 좋지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잘 알고 있습니다.

○**김위상 위원** 그러나 주산지를 방문한 많은 관광객은 여전히 그 장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럴 경우 환경 훼손과 명승 보존에 지장이 없다면 빠른 검토를 통해 일부 상징적 시설을 복원하거나 재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국가유산청이 이것을 불허했습니다, 이 부분을.

청장님, 주산지의 경우 200년이 넘는 느티나무가 보존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행위도 불가능해서 죽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도 숨을 쉬어야 될 텐데 물속에 갇혀 가지고, 이 저수지가 주민들의 음용으로 쓰이는 저수지도 아니고 그리고 농사를 짓는 데 사용하는 그런 저수지도 아닙니다. 단지 명승지에 관광객들이 오면 그 속에 느티나무가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 느티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물을 저장시켜 놓고 있는데 나무도 물에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있으니까 죽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서면질의에 답변하신 대로 지자체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부정적인 요소를 최대한도로 제거한 후에 자연유산법에 따라 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시겠습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방금 말씀한 청송 주왕산하고 그다음에 주산지 호수하고는 좀 다른 지역으로 구분돼 있는데……

○**김위상 위원** 예, 맞습니다.

○**국가유산청장 허민** 거기 호수의 느티나무 보호를 잘 못한 거에 대해서는 바로 체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에 대해서도 의견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또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위상 위원** 지금 주산지를 보면 옛날 수상 사찰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승인이 난다면 완전히, 요즘에 현실적으로 아무런 피해가 없는 자재를 또 그 저수지에 조금이라도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첨단제품을 사용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그 지역주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이 꼼꼼하게 좀 살펴보시고 부정적인 요소를 최대한도로 제거한 후에 주민들이나 또는 관광객들이나 탐방객들이 원하는 그런 수상 사찰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청장님이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가유산청장 허민** 하여간 보존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다시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위상 위원** 그리고 국가유산청이 먼 훗날 미래세대가 지금의 기억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명승의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검토를 잘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부탁드립니다.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알겠습니다.

○김위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갑 윤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후덕 위원 경기도 파주의 윤후덕 국회의원입니다.

저는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 이번에 국정감사 할 때 캄보디아대사관 국정감사를 했던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의……

경찰청장님.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청장직무대행입니다.

○윤후덕 위원 며칠 전에 캄보디아 다녀왔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그렇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런데 그때 가셨을 때 감금됐다고 하는 한국인들이 몇 명이나 남아 있다고, 확인이 안 된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지금 한 30여 명……

○윤후덕 위원 몇 명이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30여 명 캄보디아 당국에 지금 검거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검거되어 있는 사람들은, 현지 경찰에 구금돼 있는 사람이 30명이라는 얘기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그렇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래도 그건 확인된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윤후덕 위원 그런데 감금되었다고 신고를 했는데 아직 찾지 못한 사람이 한 130명 정도 돼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국내에서……

○윤후덕 위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몇 명이나 돼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저희가 지난번 파악했을 때 한 162명 정도 이렇게 파악한 걸로 기억합니다.

○윤후덕 위원 152명?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162명.

○윤후덕 위원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그 사람의 생명과 신체가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안전이 아직 미확인된 그런 상태입니다.

○윤후덕 위원 그렇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윤후덕 위원 그 사람들을 빨리 찾아내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범죄에 연루가 됐든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든 그런 한국인을 빨리 찾아내서 송환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런데 그 대사관을 점검해 보니까 경찰주재관이 2명 있고 그리고 이것을 조력해 주는 협력관이 2명 있고, 네 사람이 하는 거예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윤후덕 위원** 그런데 실제 신고된 사람들이 금년에만, 금년 2025년 8월 달까지만 333명이 신고를 했어요. 작년에는 220명이 신고를 했고 그리고 2023년에는 21명밖에 없었어요, 스물한 명. 그리고 그 전에는 제로, 둘 이랬어요. 그런 신고에 대해서 한 분이나 두 분, 세 분이 그걸 24시간 이렇게 하면서 감당을 할 수 있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그래서 이번에 주재관 1명 그리고 경찰협력관 4명 해서 5명이 지금 대사관에 나가 있고 추가로 저희가 이제 양국 정상에 합의한 대로 코리아 전담반 설치를 합의했고 또 제가 MOU 체결을 해서 7명이 더 추가로 나갈 계획입니다.

○**윤후덕 위원** 이 코리아 전담반을 잘 만들었더라고요. 이것 협의를 한 것 내용을 보도자료를 보니까 현지에 있는 그쪽 캄보디아 경찰청에 거기 들어가서 캠프를 만들겠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캄보디아 경찰과 한국 경찰이 같은 장소에서 24시간 합동으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윤후덕 위원** 우리 파견되는 사람들이 우리 대사관에 있는 게 아니라 그쪽 경찰, 그 경찰 사무소에 들어가서 그쪽 사람들과 같이 근무를 하는 거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그쪽 경찰하고 합동으로……

○**윤후덕 위원** 그것은 아주 잘한 것 같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여기 보세요. 그 사람들과 24시간 그런 상황을 가지고 한국인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함께 대응하겠다 이렇게 협의를 한 거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신고에 대해서 24시간 함께 대응을 합니다.

○**윤후덕 위원** 그래서 그쪽 경찰이 12명, 우리 쪽이 7명 해서 19명이 움직이는 거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윤후덕 위원** 그런 정도면 감당하겠어요? 지금 우리가 찾아내야 할 감금된 사람이, 지금 말씀드렸듯이 한 130명, 15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 있으면 현지 경찰과 함께해서 급습해서 찾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그렇습니다.

○**윤후덕 위원** 목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몇 달 내에 다 찾아낼 수 있어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캄보디아에 있는 대사관에 근무하는 경찰협력관들과 간담회 하면서 얘기를 들어 봤습니다. 협력관 얘기는 이번에 피해를 입은 대학생 같은 경우는 실제 감금피해, 폭력피해도 당했지만 대부분은 연락이 되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에는 감금으로 신고는 됐지만 실제 확인을 해 보면 이분들을 연락은……

○**윤후덕 위원** 일단 정보는 상당수를 파악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현지 경찰과 함께 빨리 움직이면 한 한두 달, 두세 달 내에 한 100명 이상 정도는 찾아낼 수 있겠네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신속하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조직을 척결하지 않으면 계속 일어나요,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스캠 이런 것들이.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그렇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런데 국내에서, 국내에 제가 와서 파주경찰서에 가서 그걸 담당하는 부서의 두 분 경찰하고 얘기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동네에도 1년에 상당수의 피해가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보이스피싱을 당했어요. 당했는데 이 사람이, 피해자지요. 피해자가 ‘어? 아차, 이것 당했네’ 이러면 어디를 잡니까? 경찰서 가는 거 아니에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그렇습니다.

○**윤후덕 위원** 경찰서 가 가지고 내가 당한 계좌번호하고 이름하고 그걸 경찰에다가 얘기를 해 주면서 이것 빨리 지급정지 해 달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집어넣은 1000만 원, 2000만 원을 빨리 지급정지를 해야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계좌의 그게 누군지, 그 사람이 누군지를 빨리 찾아내야 그 사람을 찾아가든지 급습을 하든지 해 가지고 돈을 찾아낼 거 아닙니까? 이 두 가지를 해결해야 되는데 지급정지를 하는 건 며칠 걸려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바로 합니다.

○**윤후덕 위원** 바로 되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112로 피해 신고를 하면……

○**윤후덕 위원** 그러면 예금주 그 신원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건 얼마나 확인해 줄 수 있어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영장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즉시 되지는 않고 수일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래서 어려운 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경찰분이. 법원에 가서 영장을 받아서, 그러면 한 2~3일 걸리지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은행에 가서 그 사람이 누구냐.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찾아내야지 이게 외국으로 도망갔는지 아니면 어느 집이면 빨리 경찰이 급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거기에서도 또 며칠 걸려요. 그러니까 최소 일주일에서 열흘, 2주일 정도 그렇게 걸리더라고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신속하게 하면 그렇게까지 걸리지는 않는데 하여튼 저희가 그래서……

○**윤후덕 위원** 최소 5일, 일주일 걸리더라고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금융기관하고도 협력체계를 강화해서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래요. 그 시간을 좀 줄여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대응팀에서 많은 분들이 모이잖아요, 다른 부서하고도. 그래서 그걸 좀 줄이십시오.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윤후덕 위원** 그런데 실제 정말 애석하게 박 군이 돌아가셨잖아요. 8월 초에 돌아가셔서 그게 확인됐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거 관련된 공소장이요, 대구 경찰서에서. 이걸 보니까 그분이 7월 16일 날 인천공항에서 출국을 했어요. 그런데 7월 23일, 7월 24일 정확하게 일주일 만에 그분이 가지고 간 계좌에 800만 원, 800만 원 2건이 입금이 됐어요.

그러면 그게 입금이 된 순간이나 거기에서부터 하루나 이틀 이내에 ‘아, 당했구나’ 하고 누군가는 신고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랬을 때 이분, 이 예금 계좌를 개설한 그 사람을 빨리 확인했으면,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를 빨리 확인하고 그 사람을 추적하고 찾아냈으면 사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어요, 실제가.

그래서 그만큼 리얼타임으로 움직이고 그리고 현지에 있는, 이미 해외로 나간 거잖아요. 그러면 현지 경찰하고 공조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제공조 협의체를 만들고 어제인가 엇그제 외국 경찰관들을 모아서 실제 검거작전 정보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공조하기로 했고 또 국내에 범정부 합동으로 보이스포싱 합동대응단을 140여 명 규모로 만들고 그 밑에 400여 명 규모의 수사단을 편성했기 때문에 국내에서의 그런 신속한 수사와 분석 그리고 해외 경찰과의 공조 이런 부분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면……

○윤후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이 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윤후덕 위원 정말로 리얼타임으로 국내에서도 움직이고 공조단, 캄보디아 현지에서 경찰과 함께 움직이기로 협의를 했잖아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윤후덕 위원 그렇게 해서 빨리 움직여서 생명도 찾아내고……

그리고 이 범죄는 진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해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그렇습니다.

○윤후덕 위원 이번에 좀 척결을 합시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리고 다음.

행자부장관님, 어제 국무회의 하는데 신문에 나온 것 보니까 정당의 현수막이 참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정당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또 장관님도 그런 장본인으로서 현수막 많이 올렸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많이 걸고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런데 이걸 처음에는 계속 팬찮은 정책을 이렇게 올리다가 나중에 가서 보니까 사람 이름까지 집어넣어 가지고 막 그렇게 상호 간에, 1당도 그렇고 2당도 그렇고 그 외에 3당, 4당, 5당…… 국회의원이 없는 정당은 더 심한 얘기들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심지어는 현수막을 게시하기 위해서 정당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거론이 됐습니다.

○윤후덕 위원 실제 그런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수막을 이룰테면 사람이 좀 다니는 그런 데다 게시하는 거라면 조금 이해

하는데 사람들이, 주말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공원, 휴식을 하는 공원에도 이렇게 혐오적인 현수막을 그렇게 해 놓으니까 분위기가 좀 삭 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그것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지금 정당의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에 의한 규제가 한편에 있고요 그다음에 정당법에 의해서 또 허용이 돼 있는, 두 법의 규율을 받고 있는데요. 저희 행정안전부에서는 각 지방정부로 하여금 정당 현수막뿐만 아니라 모든 현수막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혐오나 또 차별, 범죄에 해당하는 그런 표현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 즉각 철거를 해 달라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재정비를 했고요. 그걸 지방정부에 보낼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것이 근절되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는, 정당법상에는 ‘정당의 정책을 홍보하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정책과 무관한 정치적인 공세나 혐오표현 이런 것들이 들어 있는 현수막에 대해서 내용 규제를 선관위가 전혀 해 오고 있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윤후덕 위원** 장관님, 길게 말씀 들으면 제일 좋겠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022년 12월 1일 날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하면서, 그 전에는 정당이 선거기간 중에 현수막을 게시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정당의 활동을 좀 개방, 더 촉진한다고 법을 개정하면서 그때는 숫자의 제한도 없이 이걸 허용하는 그런 식으로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많으니까……

저도 한 번 할 때는, 어느 때에는 한 60개도 그렇게 현수막을 올린 적도 있었어요. 돈도 많이 들었지요. 그런데 그러다 이게 너무 많으니까 이걸 2024년 1월 12일 날 또 개정을 해서 읍면동별로 2개를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있었지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좀 줄이기는 했는데도 혐한 얘기들을 현수막에 많이 집어넣더라고요. 사람 이름 집어넣고 막 이렇게 하고 그래서 시민들한테 사실 호응도 없어요. 제 생각에는 좀 그래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오히려 정치에 대한 혐오감이나 정당에 대한 혐오감을 키우는 그런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래서 그 정당의 선호도가 더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1당이든 2당이든 3당이든 4당이든 5당이든. 제 생각에는 좀 그래요. 좀 자제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2020년 12월 이전으로 돌아가서 일반광고나 정당광고나 똑같이 해서 규제를 아예 해 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2022년 이전에는 정당법에만 허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의 장이 자의적으로 정당의 현수막도 옥외광고물법에 저촉된다고 해서 그걸 철거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래서 그걸 정당법에 허용된 현수막도 옥외광고물법에 허용하는 것으로 근거조항을 만들었고 이것이 전혀 손을 댈 수 없는 현수막이 된 겁니다.

이 부분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법 개정을 비롯해서 심지어는 정당법 개정까지도 논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윤후덕 위원**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통일부장관님, 이번에 경주에서 APEC을 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한반도에, 우리나라에 오는 과정에서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무려 다섯 번이나 만나자, 만나자,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 4월에 북경에, 중국하고 미국하고 정상회담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그때에는 우리 대통령님도 초청을 받은 그런 상태예요. 그러면 내년 4월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러브콜을 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 끝났나요?

육성으로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렇게 거의 비슷한 상황이 생기는데 이런 경우는 톱다운 방식의 정상회담이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맞습니다.

○**윤후덕 위원** 톱다운 정상회담이 잘되면 좋은데 이게 좀 불안한 게 있어요.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후유증이 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하튼 실무 접촉이 계속되면서 보텀업 방식의 정상회담을 해내는 게 그게 오히려 성과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북미 간에 정상회담을 하는 게 톱다운이든 보텀업이든 잘되면 좋은데 어떤 게 좋겠어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윤후덕 위원님 말씀처럼 평행해서 추진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경주 APEC 계기에 북미 정상회담이 불발된 것은 대단히 아쉽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확인된 것은, 북미 정상회담의 기회의 창이 열려 있다는 것을 확인한 점은 큰 수확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의 의지를 여러 번 밝혔고 또 북도 일정한 대미 대화에 대한 전략적 수요가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내년 4월까지의 기간이 한반도 지정학과 관련해서, 동북아 지정학과 관련해서 아주 관건적 시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시기에 한반도의 정세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견인해 나가기 위해서 보다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한반도 주변 4강과의 전략적 소통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윤후덕 위원** 예, 잘되기를 기대합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 이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관 위원** 최동석 인사혁신처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고충 처리와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호중 행안부장관님 또 참석해 주신 기관장님들께서도 관심 있게 한번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승인된 공무상 요양·순직 유족급여·장해급여가 22년 5900여 건에서 지난해 8000여 건으로 급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승인된 순직만 261건입니다.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이라든지 정신적 스트레스, 조직 내 갈등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보여 주는 지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처장님, 공무원 재해보상 승인 건수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고 하면 지금 현재 현장에서 고충을 제때 해소할 수 있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말씀하신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 지금 재해보상 청구 건이 워낙 많아져서 고충처리에 관해서는 사실상 인사혁신처에서 제대로 신경을 못 쓰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이재관 위원** 나중에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 2022년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지난 3년간 근무 중에 고충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6%에 이릅니다. 그리고 고충을 겪고도 정부의 고충처리제도를 이용하는 비율은 13%, 아주 낮은 수준이거든요. 이 낮은 수준에 대해서 처장님 잠깐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고충처리 문제가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인식은 하고 있지만 그것을 할 인력과 조직이 상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급한 것을 처리하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고충처리 문제는 조금 나중에 처리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적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재관 위원** 맞습니다. 지금 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도 맞습니다마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고충상담 신청을 하면 고충상담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임용권자라든지 중앙인사기관장이 지정한 그 담당 공무원이 고충상담을 합니다. 또 상담을 담당하는 사람의 부서를 보면 인사 내지는 감사 부서에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최근 5년간 고충심사 건수를 보면 그 내용상으로 보면 승진, 전보 같은 인사 문제입니다. 또 갑질, 부당업무 지시 등의 그런 고충이 72%입니다. 즉 고충상담의 내용이 대부분 인사, 감사와 관련된 내용인데 자기의 아픈 곳을 그 부서 담당자하고 상담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현재 제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제도는 있지만 그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 제도의 내재적인 문제점이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설문조사에서도 같은 기관의 담당자에게 호소하는 것이 불편하다라고 하는 것이 50%가 넘습니다.

이 내용을 저희들이 달리 생각해 보면 고충창구는 지금 현재 그러한 인사 내지는 감사 부서에서 담당하는 것보다는 뭔가 지금 현재의 조직에서 별도의, 외부의 독립된 기관에서, 부서에서 해 주기를 바라는 그 희망이, 그 바람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처장님 동의하시나요?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예, 동의합니다.

○**이재관 위원** 최근 5년간 6급 이하 공무원들이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청구한 건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9년 이전에는 6급 이하는 바로 부처의 고충심사위원회에 해야 됩니다. 중앙고충위에다 바로 심사를 하지 못합니다. 20년에 12건에서 23년·24년 50건으로 급

증을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 고충상담의 내용이 말씀드렸던 이러한 현재의 제도상으로 있으면 급증하는 고충의 건수에 비해서 그 처리의 내실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래서 고충처리 조직을 한번 봤습니다.

고충처리 조직은 예전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심리상담을 위한 심리건강이라든지 트라우마센터라든지 하는 것은 있지만 직장 내에서의 인사 고충이라든지 하는 그런 부분을 상담하는 제도는 예전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각 기관 부서에서 이러한 문제점의, 한계의 그런 것을 극복하기 위한 전담부서 설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데 각 부처의 고충처리 상황을 조사하고 또 컨설팅하는 그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불가피하게 조직의 보강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행안부장관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까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지금 말씀 주신 데 대해서, 특히 공무원 고충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을 잘 반영해서 조직 인사, 인원·인력 배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관 위원 사실 이 문제가 지적되고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좀 오래전부터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정부조직의 규모 문제라든지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린다든지 하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큰 개선점이 없었거든요.

그렇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조직 내에서의 그러한 고충이 생각 외로…… 지금 현재 이 통계는 모든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 현실에서도 잡히지 않은 그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는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방향으로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윤호중 행안부장관님 그리고 임기근 차관님께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6일 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본원에서 화재로 인해서 국민 불편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대정부 신뢰에 상당히 금이 간 일이 있었습니다.

장관님, 지금 현재 복구 상황이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지금 복구 상황은, 오늘 통계는 제가 아직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오늘 아침까지는 98% 복구가 이루어졌고요. 709개 시스템 중의 16개 정도가 아직 미복구 상태입니다.

○이재관 위원 그런데 이번 사고와 관련된 히스토리를 저희들이 알면 알수록 너무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현재 이 제도의 장기 대책으로 충남 공주에 제4센터를 건축을 합니다. 건설을 합니다. 그것은 재해복구 전용 데이터센터로서의 기능, 이러한 사안을 대비해서 센터를 짓는데 그것이 시작된 것이 2008년입니다. 2008년인데 지금 현재 18년째 지연되고 있는 것이지요.

본래 2023년에 건물은 준공이 됩니다. 그런데 2023년 11월에 행정전산망 장애가 발생되면서 그것에 따라서 보강을 하고 또 총액 사업비를 조정하는 그런 과정을 하다 보니까 작년 말까지였었는데 작년 말에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이게 됐다면 지금 현재 말씀하

셨던 40일 동안 98%의 복구, 지금 여러 가지 불편들이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계획대로 됐다고 그러면 수일 내 복구가 완료됐을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또 예산안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전-공주 간 이원화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61억 2000만 원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다른 예산에 후순위로 밀려서 이것이 24억 5000만 원, 60% 이상이 삭감됩니다. 그러니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그 이후에 후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기근 차관님, 이런 사고 재발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일단 이번 화재사고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국민들께 불편을 끼치고 불안을 초래한 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계획을 잘 세우고 필요한 예산을 충분하게 사업 일정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잘 반영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재관 위원 우선 당장 이 사업과 관련돼서 26년도 사업예산에 전혀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평년의 기준에 의해서 예산 반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이중화 예산이라든지 또 시스템의 보강이라든지 적잖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와 관련돼서 잠깐 이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부청사가 전국에 6500여 동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아……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놀라실 겁니다. 그렇게 많습니다. 그중에 올해 기준으로 30년 이상 된 청사가 1200여 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요가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예산의 투입으로 볼 것이 아니라 국가자산 관리라는 차원에서 저는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의 효율적인 관리 차원 또 사고의 예방이라는 차원에서 청사 관리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아울러서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번 에야말로 정말로 확실하게 제대로 외양간을 고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관 위원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돼서 외교부장관님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의 캄보디아 사망사건, 다들 오늘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짚어 보겠습니다. ODA 사업입니다.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의 사건·사고 대응 예산이 22년도에 1900만 원 수준입니다. 24년에 129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한국인 납치·감금 피해는 같은 기간에 3명에서 206명으로 급증합니다. 그런데 위험도는 급증하는데 예산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윤석열 정부 시절의 일이지는 하지만 외교부에서 이것 너무 안일하게 대비하신 것, 대처하신 것 아닙니까?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당시에는 이 범죄 유형에 대한 좀 대중적인 대응을 했던 것 아닌가, 그때 상황에 있어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관 위원 최근 3년간 주캄보디아 대사관 직원들의 출장 내역을 보니까 실제로 이런 범죄예방활동을 위한 것이 아니라 ODA 관련 출장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국민 안

전 대응이 뒷전이고 오히려 ODA 사업에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ODA 사업과 관련된 출장이 압도적으로 많다 보니까 그나마 적은 인력이 그것을 대응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자꾸 심화되고 비화되고 확산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님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김용수 예, 2차장 대신 나와 있습니다.

○이재관 위원 어디 계신……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김용수 여기 있습니다.

○이재관 위원 2021년에 1005억 ODA 예산이 편성됐었지요? 그 예산이 25년도에 4300억 원으로 급증합니다.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김용수 맞습니다.

○이재관 위원 맞습니까?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김용수 예.

○이재관 위원 그런데 국무조정실의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는 예산편성 전에 각 부처의 올라오는 예산들을 한번 사전에 심사를 해서 정부안으로 확정을 해서 국회에 보냅니다. 국회에서 확정이 되면 다시 집행하기 전에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또 심의해서 실행계획을 확정합니다. 맞습니까?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김용수 예, 맞습니다.

○이재관 위원 그런데 왜 이 민간협력 전대차관 예산 1300억 원은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까요?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김용수 그것은 좀 확인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관 위원 이것은 확인 차원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감사원장관한대행님.

○감사원사무총장 정상우 예, 직대 사무총장입니다.

○이재관 위원 심의가 생략된 것 그리고 시범, 이 사업이 내역으로 더 들어가면 시범사업이 애초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불용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또 엄청나게 예산이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증액이 됩니다. 물론 금년도에 저희들 추경예산 과정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집행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그 편성의 과정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과정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원사무총장 정상우 예, 살펴보겠습니다.

○이재관 위원 ODA 사업, 그 사업의 성격만큼이나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는 이 사업 하나의 문제로서가 아니라 다음 사업으로 이어지는 것만큼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 책임 있게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훈부장관님께 해외 독립운동 사적지와 관련돼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독립운동 사적지, 전 세계에 24개국 1000여 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집중되어 있지요?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예, 중국에 제일 많이 있습니다.

○**이재관 위원** 중국에 집중되어 있으면 관리 인력이 들어가 있나요?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현재 중국에는 보훈주재관이 없고 또 파견 형식으로도, 2022년도까지 근무를 하다가 그때부터는 파견 형식으로도 직원이 없습니다.

○**이재관 위원** 예, 한 명도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번에 최근 한중 정상회담 비공개 자리에서 중국 땅 어딘가에 남아 있는 항일 독립운동가들의 유해를 국가가 직접 찾아 모셔 와야 한다 말씀 주셨지요?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예.

○**이재관 위원** 실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상해나 심양이나 베이징에 우리 주재관이 나가거나 아니면 파견 형식으로도 우리 직원이 나가야 아마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재관 위원** 유해 봉환은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유가족도 설득해야 되고 관련된 지역 주민들하고의 협의 과정이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유해 봉환의 당위성에 비해서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현지에서 주민들과 접촉할 수 있는 직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행안부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챙겨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관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왕·과천 이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영 위원** 이소영입니다.

이번 예산안 정책질의 총 6일 중에 오늘이 이제 5일 차인데요. 내일은 제가 질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오늘이 마지막 질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결위는 무려 61개 국가기관의 수장이 모두 출석하는 어마어마한 위원회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부처 장관님들 그리고 모든 국가기관의 수장분들, 심지어는 헌법기관에서까지 출석을 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예결위를 열 때마다 참 개인적으로는 죄송한 마음을 많이 가지게 되는 게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61개 기관에서 6일 동안 이렇게 하루 종일 회의장에 계시는데 법무부장관님이나 통일부장관님은 하루 종일 질의를 받고 답변을 하시지만 반면에 하루 종일 출석해 계셔도 6일 내내 발언을 한 번도 못 하고 돌아가시는 기관장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감사로서 뭔가 죄송한 마음을 항상 느끼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 마지막 질의시간을 활용해서 이번 예결위 6일간의 기간 동안 한 번도 질문을 받지 못해서 한말씀도 못 하셨던 기관장분들께 국회에 요청할 사항이 있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짧게라도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종합정책질의 때부터 오늘까지 혹시 한 번도 질의가 없었던 기관이 있으면 손을 좀 들어 주시겠어요, 제가 볼 수 있게? 제가 어디인지 다 아는데요 일단 손을 좀 높이 들어 주시면…… 손을 좀 높이 들어 주시면……

국회는 질의 없었나요?

○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 이양성 예, 없었습니다.

○이소영 위원 국회가 없었고.

그다음에 중앙선관위가 없었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허철훈 예, 없었습니다.

○이소영 위원 다시 손 좀 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잘 못 봐 가지고.

개인정보위원회 없으셨고 소방청 없으셨고 국가교육위원회 없으셨고 민주평통 없으셨고 또 이태원참사 특조위 없으셨고. 또 제가 못 본…… 헌법재판소도 없으셨어요? 나머지지는 다 질문 한 번 이상씩 받으셨나요? 받으셨나요?

(「예」 하는 기관장 있음)

제가 사실 가장 죄송함을 많이 느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요 바로 이태원참사 특조위입니다.

특조위원장님, 이번에 질의 한 번도 못 받으셨는데 지난번에 결산 때도 아마 질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장 송기춘 예, 그렇습니다.

○이소영 위원 그래서 항상 출석을 가장 열심히 해 주시고 대참도 거의 없이 하루 종일 앉아 계시는데 질의가 없어 가지고 제가 항상 죄송했는데요.

특조위가 출범한 지가 한 1년 2개월 정도 흘렀습니다. 맞지요?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장 송기춘 예, 그렇습니다.

○이소영 위원 조사나 특조위가 가지고 있는 미션들이 잘 수행되고 있는지 또 그 미션 수행을 위해서 국회에 요청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간략히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장 송기춘 지금 개정법률안도 있습니다마는 시급한 것은 저희 위원회의 예산안을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통과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 위원회가 작년 6월 17일에 조사 활동을 개시하고 나서 1년간 활동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6개월, 내년에 6개월 정도가 되고 내년에는 활동 연장을 예정해서 12개월분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2개월로 예정된 그런 활동을, 저희들이 가능한 한 빨리 충실한 활동을 통해서 마치고 싶습니다마는, 예산안을 그렇게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편성한 예산이 그대로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조사관들이 조사 활동을 하면서 특정업무경비를 지급받고 있는데 이 부분이 유사한 활동을 하는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액수라서 사기에 조금…… 저희들이 죄송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정업무경비의 일정 부분을 좀 증액해서 통과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위원회 이름이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상규명을 통해서 아파하는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을 치유하고 그리고 또 이 참사로 인해서 등장한 사회적 논란을 종식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저

회 위원회가 또 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서 제안하고 그것이 실행됨으로써 안전을 위한, 안전의 단계가 한 단계 도약하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는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가 관심과 이런 지원을 통해서 충실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소영 위원 감사합니다.

기한 내에 충실한 활동 할 수 있도록 예산안이 잘 통과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주셨고 또 조사관분들의 특정업무경비가 너무 적게 책정돼 있는 것이 현실화·실질화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주셨는데요. 여기 예결위원장님도 계시고 야당 간사님도 계시니까 아마 잘 반영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송경희 위원장님!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송경희 예. 위원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소영 위원 취임하신 지 한 달 정도 되셨나요?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송경희 예, 그렇습니다.

○이소영 위원 분주한 날들을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개보위에 한번 여쭙보고 싶었던 거는 최근에 AI 가전제품들이 되게 많아지잖아요. 로봇청소기부터 스마트TV, 앞으로는 퍼지컬 AI가 더 확대되면 거의 모든 물건에 인공지능이 붙게 될 텐데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가정 내에서의 다양한 민감한 정보들이 또 그런 기기들에 정보로서 인입되고 들어가게 되고 그런 것들이 어디론가 전송돼서 잘못 사용되고 악용될지 모른다는 이런 우려들도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서 새로운 국면이 열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개보위가 이런 이슈들은 잘 대비하고 있습니까? 혹시 필요한 협조나 도움이 있나요?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송경희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최근에 그런 우리 일상에 들어온 AI 기반의 청소기라든지 여러 가지 제품들이 민감한 개인정보를 사실 많이 수집을 하고 있는데 그 처리 과정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기기 또 앱, 와이파이 공유기, 본사 서버 등에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그 흐름이 좀 복잡하고 비가시적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술분석센터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사전 실태점검을 통해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시정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 필요가 있어서 기술분석센터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액 신청을 했고요.

또 하나 절실한 것이 다크 웹에 대한 대응입니다. 최근에 다크 웹 이런 음성화 사이트를 통해서 개인정보 불법 유통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 분들이 보셨듯이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에서도 그렇게 블랙마켓에서 얻은 정보들을 우리 국민을 타겟으로 한 범죄에 활용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블랙마켓을 통한 개인정보 유통 같은 경우는 사고에 대응해서 일회성 단속으로 한다고 그러면 어디론가 숨을 수 있지만 또 다른 지역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탐지, 분석, 대응이 절실히 필요한데 그동안 이 사안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안에 반영되지 못해서 이번에 증액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립니다.

○**이소영 위원** 발언 기회 안 드렸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민감정보, AI 통한 민감정보의 어떤 위험성들을 추적하는 기술분석센터 그리고 다크웹 대응 관련한 그런 예산이 꼭 증액돼야 된다는 말씀 주셨고요.

소방청은, 사실 온 국민이 소방공무원들의 처우가 지금보다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처우개선을 지지하잖아요. 그런데 참 매년 매번 보면 온 국민이 지지하는 마음만큼은 처우개선이 원활하게 빠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주로 방해 요인, 누가 그렇게 방해를 합니까? 왜 잘 안 됩니까?

○**소방청기획조정관 이진호** 국민들의 지지만큼 재정 당국이나 관계부처에서도 많이 해야 주고 또 도움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조금 드리자면, 저는 지금 소방청 기획조정관입니다. 청장직무대행께서 지난주 목요일부터 지금 계속해서 울산 붕괴현장 직접 현장지휘를 하고 계십니다. 저도 어제 하루 갔다 왔습니다. 갔는데 다행히 중수본과 소방청에서 그리고 관계부처에서 정말 위험한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유족들께서 그 진심에 대해서 간간이 감사한 마음을 표하고 또 당신들의 안전도 중요하다 그런 말씀도 직접 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현장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지금 다섯 분은 사망을 하였고 두 분은 부상자고 그리고 두 분은 아직 거기에서 저희들이 지금 수습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위험요인이 있어서 안전 조치를 하고 수습을 하고, 아마 지금 24시간 수색 체제로 전환을 해서 어제부터는 야간 수색을 하고 있는데 덕분에 어젯밤 10시 그리고 오늘 새벽 5시에 두 분을 수습을 했습니다. 이제 남은 두 분이 계신데…… 여기서 차마 말씀을 못 드리지만 상당히 참혹한 어떤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활동을 하고 있는 소방관들도 심리상담을 받고 있고 유족분들도 심리상담을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소방관서에 심리상담사를 증원해서 배치하는 부분들 재정 당국하고 협의가 좀 돼서 작년보다는 좀 인원이 늘었습니다마는 전 소방관서에 배치를 하고자 하는 증액안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잘 처리해 주시면 우리 대원들 마음건강……

그리고 이런 큰 사고가 났을 때는, 울산에도 마음건강 심리상담사가 일부 있지만 타시도의 심리상담사들도 풀을 구성해서 지금 데리고 와서 하루에 한 다섯 분, 여섯 분 같이 상담을 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대형 사고가 나면 안 되겠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좀 잘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소영 위원** 심리상담사와 관련한 증액 예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요. 우리 기재부에서도 공감을 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잘 반영될 수 있게 저도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소방청기획조정관 이진호** 감사합니다.

○**이소영 위원** 그리고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님도 질문을 한 번도 못 받으셨는데요. 국가교육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혹시 국회의 도움이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국가교육위원장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가 잘 아시다시피 국가교육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기관이고 또 특히 우리나라 특유의 극심한 대입 경쟁교육 체제하에서의 사교육 문제 또 극심한 선행 사교육 문제 등 교육 난제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본래 국교위

법에 정해져 있는 법상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것도 벅차고 또 특히 추가적인 교육 난제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국교위의 조직이 좀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확대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기관에 신청을 해 놓은 상태고요. 그에 상응하는, 조직 확대에 상응하는 예산 증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산을, 조직을 확대시켜 주시면 국교위가 좀 더 유능한 조직이 되어서 국가적인 교육 난제에 빠른 속도로 대응하면서 문제를 풀어 나가 보려고 합니다.

○이소영 위원 감사합니다. 조직 확대와 관련된 예산 증액 말씀 주셨고 잘 알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실 저희 지역구에 있는 기관인데 또 부당한 공격과 비방을 많이 받기도 해서 가지고 제가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선거는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꽃이고 그래서 선거관리를 잘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토대와 근간을 잘 쌓아 올리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 함에 있어서 예산이랄지 정책이랄지 더 협조가 필요한 부분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허철훈 위원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정자원 화재가 발생한 이후 저희도 점검을 해 봤습니다. UPS실하고 서버실은 격벽으로 분리가 되어 있지만 UPS하고 배터리는 지금 같은 공간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화재에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6월 3일 동시지방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배터리하고 UPS를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여기에는 예산 한 8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난 12·3 비상계엄 때 저희 서버가 보관되어 있는 중앙선관위 선거정보센터가 침범을 당하고 서버가 촬영돼서 외부에 전송이 돼서 많은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또 불편함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거정보센터가 출입자 통제제가 제대로 안 돼서 보안이 취약하고 또 방호 역시 취약합니다. 그리고 서버실 공간이 부족해서 이중화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거정보센터를 독립 건물로 신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재정 당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기본설계비 3억 정도만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선관위가 가장 구체적으로 액수까지 말씀을 주셨는데 두 가지, 예산 8억 그리고 3억 잘 이해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 기관은 아쉽게도 시간이 부족해서 질문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 아마 제가 예산 관련해서는 다 따로 면담도 하고 들었던 기관들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실의 재정기획보좌관 나와 계시지요?

○대통령비서실재정기획보좌관 류덕현 예.

○이소영 위원 목소리가 좋으시니까 한 말씀하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대통령실에서 재정 담당이시니까 이번 예산안을 마련하고 또 지금 쪽 국회 심사 받는 과정까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번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꼭 유념하고 고려해 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거나 또는 대통령실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오늘 한 말씀하시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하시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재정기획보좌관 류덕현** 기회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목표는 기한 내 감액 없이 그대로 통과되는 게 제일 중요한 목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큰절이라도 올리고 싶은데 일단 마음은 그렇습니다.

제일 중점을 두고 있는 예산은 아무래도 민생 예산입니다. 올해와 작년 굉장히 어려운 민생 여건을 감안해서 최선을 다해서 민생 회복을 위한 예산을 짰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은 잠재성장률 회복을 목표로 한 예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1.8% 잠재성장률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사실 최근의 경제 여건이나 그리고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조금씩 거둬지고 있는 걸 보면 그 이상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AI 투자와 그다음에 에너지 대전환과 관련된 중요한 예산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잘 고려해 주셔서 심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소영 위원** 감액 없이 통과가 되는 것은 굉장히 힘든 목표인데 그런 목표를 가지고 계시군요.

어쨌든 지난주부터 하루 종일 앉아 계시는 것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셨을 텐데 정말 수고 많으셨고 이번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더 좋은 결과 만들 수 있도록 국회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두 군데 말씀 못 한 곳은 좀 서운할 것 같은데, 우리 국회하고…… 국회는 저희들하고 아주 근접한 거리에 있으니까 소통이 좀 자유스러울 것 같고 또 국무조정실도 총리님이 나왔으니까 대신해도 될 것 같은데 헌법재판소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이소영 위원** 민주당평통.

○**위원장 한병도** 참, 중앙선관위가 아니라 민주당평통. 두 곳도 짧게 먼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부터 말씀해 보시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기획조정실장 하정수** 현재 사무처장은 법사위 참석 중이라…… 저는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위원장 한병도** 예.

○**헌법재판소사무처기획조정실장 하정수** 저희 재판소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재판소의 책무를 성실히 잘 수행하겠습니다. 국회에서 항상 저희 재판소 의견을 잘 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도** 예산 말씀은 없으시네요?

○**헌법재판소사무처기획조정실장 하정수** 예, 없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다음에 민주당평통자문회의 말씀해 주세요.

○**민주당평통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방용승**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청년 세대의 통일 필요성 인식

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원인 중에서 가장 큰 이유가 청년들에게 우리 현실에 맞는 평화와 통일의 상에 대해서 잘 설명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점점 청년 세대들의 통일 인식이 낮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민주평통자문회의에서 이번에 청년 세대 위원들을 역대급으로 가장 많이 늘렸습니다, 30.5%로. 그래서 일단 청년위원들의 역량 지원 사업을 위해서 증액이 필요합니다. 정확하게 12억 5700만 원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국가사업으로 인식하시고 증액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해외 통일정책 강연회 증액 필요성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국외 출장 제한이 됨에 따라서 예산이 감소된 이후에 그대로 예산이 묶여 가지고 증액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포사회의 통일 담론 형성 그리고 K-평화에 대한 각 나라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대단히 필요한 예산이니까 그것도 좀 증액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도 잘 알겠습니다. 발언 기회 안 드렸으면 아주 서운하실 뻔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 5분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옹진의 배준영 위원님.

○배준영 위원 배준영 위원입니다.

유재성 경찰청장직무대행님.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배준영 위원 영종이 지금 인구가 13만이고 연간 7000만 명이 트래픽 하면 영종에 사는 분만, 오가시는 분만 해도 하루에 한 30만 명 정도 되는데 영종경찰서가 늦게나마 개소를 하려고 보니까 건축비가 올해 들어서, 2029년에 개소하는 것을 이번에 기재부에서도 도와주시고 행안부에서 도와주셔서 임시 예산으로 내년에 개청하게 되는 거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배준영 위원 내년 26년 7월까지 개청해 갖고 운영하는 데 아무 문제 없겠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분구 일정에 맞춰서 개소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감사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취영 문체부장관님, 제가 지난번 예결위 때도 말씀드렸는데 강화가 1232년부터 39년 동안 고도로서 있었는데 경주, 부여, 익산, 나주 이런 곳들은 사실 다 박물관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강화에 고려의 수도로서 39년간 있었는데 박물관이 없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강화에는 여전히 궁궐, 태묘, 종묘, 성곽, 팔만대장경이 있고 그런데 이번에 좀 본격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용역비를 좀 올렸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저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윤호중 행안부장관님께 제가 여쭙겠는데요.

북한에서 소음 공격이 있었습니다. 강화·파주·김포·철원 있었는데 아주 굉장히 기괴한 소음으로 정말 너무 고통을 받았지요. 잘 아실 겁니다.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배준영 위원 저희 관광·요식·숙박 등 지역 기반 사업이 흔들리고 정말 고통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것을 보상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 민방위기본법도 바꾸고 시행령도 바꾸고 고시까지 해서 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강화의 송해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시끄럽거든요.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는 가구마다 1000만 원씩 한 30가구 정도 줘 가지고 창호로 해 가지고 다 막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정부에서 애써서 가지고 이제 소리가 없어져 가지고 보상비 정도로 하는데 계산하다 보니까 하루에 한 이삼천 원 정도 해 가지고 7개월 동안 고통받았다 하고 제3종으로 하니까, 저희가 토털 하니까 일인당 한 42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1년간 이렇게 고통받고 이렇게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일인당 42만 원인데 지난번 받은 것에 비해서 너무 적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보다는 좀 많아야 되겠다 해서 제가 한 2배 정도로 증액을 해서 올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저도 배준영 위원님 질의가 있다고 해서요 말씀을 들어 봤는데 상당히 낮은 금액이었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런데 왜 이렇게 결정이 되었는지를 파악을 해 봤더니 군 사격장의 소음 피해에 대한 현재 보상기준의, 지금 군 사격장은 야간 사격이 없고 주간에 주로 사격이 있는데 이 지역은 야간에 고충을 받은 거라 그 보상금의 2배를 계산한게 지금 현재 그 금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과연 적절한 수준인지에 대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준영 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정말 범정부적으로 애써서 했는데 사실 죄송한 얘기지만 주고 나서 오히려 더 비난을 받고 이런 형태가 되면 좀 곤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한 번만 숙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알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방부장관님. 아, 차관님이시구나.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국방부차관입니다.

○배준영 위원 민통선하고 군사분계선에서 5km 정도로 조정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런데 강화 같은 경우에는 배로 나가서 잡는데 북방한계선부터 36km나 떨어졌는데 일출·일몰 전에 저희가 한 1시간 전에는 나가야지 그물을 놓고 고기를 잡는데 30분으로 묶어 놓으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로 수입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단 말입니다. 사실은 5km까지 당긴다고 그러는데 바다에 서는 36km인데, 이것을 사실은 24시간 잡아도 상관없는데 일출·일몰 한 30분 정도로 하는 건 좀 야박한데…… 그런데 이게 30분이 굉장히 큰 차이인 게 어로 수입이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해수부에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국방부에서 굉장히 좀 어려워하십니다.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면 어떨까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지난해부터 해수부와 저희 국방부, 해경, 지자체 등 관련 기관들이 논의해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화도 일대 어장은 백령도나 연평도처럼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안전 문제와 생업 그리고 경계작전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관련 기관들이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개혁신당 천하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하람 위원 최휘영 문체부장관님, e스포츠 그리고 스포츠포토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대한민국 e스포츠가 굉장히 활발하지요. 이번에 리그 오브 레전드 월즈에서도 사실 한국팀들끼리 결승전에 올라가서 또 페이커 선수가 다시 한번 우승을 하고 그랬는데, e스포츠계에서 스포츠포토 도입은 굉장히 큰 숙원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거의 관점으로 e스포츠는 스포츠포토에 편입할 수 없다라는 계속된 어떤 편견만 반복해 왔던 것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이 저는 있는데요.

장관님, 혹시 e스포츠의 스포츠포토 편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저는 이제는 검토할 수 있을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하람 위원 저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e스포츠 편입뿐만 아니라 스포츠포토 같은 경우에 사실 굉장히 큰 재정적 기여를 정부와 또 체육계에 하고 있지요. 그런데 결국 직접적인 경쟁 대상은 불법 스포츠 도박일 겁니다. 물론 저희가 불법 스포츠 도박을 용인하자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엄단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어느 정도는 우리가 불법 스포츠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합법 스포츠포토의 경쟁력을 키울 필요들도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주요한 쟁점들을 보면요 구매시간 제한이 있다는 것 혹시 장관님 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거기까지는 제가 잘……

○천하람 위원 이게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합법 스포츠포토가 요즘 피시로도 되거든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베프맨이라고 있는데 그게 오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만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닫혀 있는 시간이 어쨌든 밤 동안 9시간이나 되거든요. 요즘 스포츠포토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여러 경기들에 대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밤 시간에 다 막혀 있다 보니까 이 시간에 뭔가 게임을 즐기고 하려는 분들은 다

자연스럽게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쪽으로 가게 되는 부분인 거지요. 이게 저는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낮에 열려 있는 걸 왜 밤에 막아야 되는지 이 부분은 꼭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모바일 제한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피시 사이트가 이미 있습니다. 있는데 이걸 모바일에서는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당연한 얘기지만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들은 모바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웹페이지가 없으면 모르겠는데 기껏 웹페이지 만들어 놓고 모바일로는 못 한다? 저는 이것은 오히려 불법의 길로 밀어 넣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사실 본질적인 부분인데 물론 우리가 여기서 이익을 얻어서 정부재정 또 체육계에 써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 배당률하고 환급률 같은 경우가 외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내지는 공적으로 운영하는 데들에 비해서 너무 낮습니다. 실제 환급률 같은 경우가 영국, 싱가포르, 홍콩 이런 데는 80% 이상으로 돼 있는데 우리는 63% 정도 되거든요. 배당률도 대부분의 경기에서 보면 우리가 조금 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 다 불법적인 사이트로 가게 되는 하나의 원인들이 되는데 지금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정확한 규모는 확인이 안 됩니다마는 아무리 적게 잡아도 최소 21조 원 이상의 시장이 있다고 하고 합법 스포츠포토는 연간 6조 원 정도입니다. 지금 스포츠 시장이 계속 성장하는데도 불구하고 합법 스포츠포토는 성장을 못 하고 있거든요, 한 몇 년 동안.

그렇다라고 한다면, 물론 우리가 지킬 건 지키고 사행성이 과다하게 되는 것은 막아야 되겠지만 합리적으로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드린 구매시간 제한이나 모바일 제한이나 또 근본적으로 환급률의 문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합법 스포츠포토를 어찌면 지키기 위해서도 개선이 좀 필요할 걸로 보여지거든요.

장관님, 한번 의견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불법 스포츠 도박 막는 것 저희의 너무 큰 과제이고요. 이것은 단속도 물론 단속이겠지만 이렇게 합법 스포츠포토가 조금 더 사람들이 안전하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길에서부터 찾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금이 정말 잘 쓰여지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측면에서 말씀해 주신 의견은 너무 좋은 의견이고요. 저희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하람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힘 대구 북구갑 우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준 위원 문체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배지를 들어 보이며)

제가 늘 이렇게 가슴에 안경 배지를 하고 다니는 거 혹시 본 적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우재준 위원 이렇게 안경 배지를 하고 다니거든요. 이 안경이 뭐냐면, 국내에서 생산되는 안경의 85% 정도, 거의 대부분은 저희 지역구인 대구 북구에서 생산이 됩니다. 제가 그걸 홍보하기 위해서 늘 이렇게 안경 배지를 하고 다닙니다.

최근에 우리 한류가 엄청나게 유행이잖아요. K-컬처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많이 언급도 하시고 저도 정말 너무 자랑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K-컬처라는 게 단순히 그냥 문화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높아진 한류의 위상, 한국의 위상 그리고 한국이 동경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연관을 받는, 그 과실을 같이 누리는 그런 상품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대통령께서도 많이 언급을 하신 화장품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식품 같은 것들도 영향을 받지요. 이미지에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유의 상품들이 아무래도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또한 저는 영향을 많이 받는 상품 그리고 더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K-아이웨어, 안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이게 영향을 많이 받냐면요 몇 가지 사례들을 제가 보여 드리면, 우리 아이들이 몇 명 이렇게 사용을 하니까 젠틀몬스터 같은 이런 브랜드들은 이미 거의 매출이 1조씩 나오고요 이제 명품 반열에 거의 들어갔습니다. 아이돌 수지 씨가 착용한 블루엘리펀트라는 그룹은 바로 3000% 매출이 올랐습니다.

이게 이미지에 영향을 얼마나 받냐면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구에 오셔서 자기도 대구 안경 쓴다고 대구 안경 많이 써 달라고 이렇게 언급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업체가 바로 대박이 났습니다. 실제로 대구에서 사실은 원래 대통령께서 인기가 많은 분은 아닌데 안경 업체에서는 되게 좋아합니다. 되게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단지 이렇게 이미지에 영향을 많이 받을 뿐만 아니라 관광상품으로도 굉장히, 안경 관광이라는 거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그건 못 들어 봤습니다.

○우재준 위원 해외에서 외국인들이 왔을 때, 해외에서는 안경 하나 맞추려면 안과 갔다가 다시 안경점 갔다가 다시 렌즈 맞추려고 보냈다가 하면 2주씩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관님께서도 안경 사용하시지만 국내에서는 30분 하면 다 맞출 수 있잖아요. 안경점 가면 너무 쉽게, 마음에 드는 안경 하면 바로 거기서 눈 측정해서 바로 최상품의 안경을 만들어 주잖아요. 이런 시스템이 갖춰진 곳도 한국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왔을 때 이렇게 안경을 하나씩 맞춰 가는 이런 쇼핑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또 안경산업의 특징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중소기업 중심이지만 또한 수출산업 중심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고부가가치 사업입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이 한 글자가 찍히면요 사람 이미지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정말 가방 같은 거 하나, 정말 명품가방 이런 거 하나 있으면 비싼 돈을 주고도 많이 쓰잖아요. 이미 전 세계적으로는 충분히 메이드 인 코리아가 적힌 안경은 그만큼 상품의 가치가 있고 그만큼 더 많이 고부가가치 상품으로서 대접을 받습니다.

단지 이런 이미지상으로 유리할 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매우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렌즈산업 같은 경우에는, 렌즈 같은 경우에는 안경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발전하면 그다음에 거기서 발전된 기술들이 오히려 국방산업이라든지 다른 현미경산업이라든지 이렇게 전이된다라고도 일반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아이웨어

이것도 저는 우리 K-컬처, 한류와 함께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더욱 대통령께서도 오늘도 지방 산업의 성장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지방에 더 집적돼 있는 이런 사업인 만큼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 주고 조금 더 한류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 주시면 아마 지방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한류산업진흥법상에 보면 한류 연관 산업을 이렇게 고시하고 있습니다.

혹시 장관님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알고 있습니다.

○우재준 위원 그래서 마찬가지로 맥락입니다. 이렇게 한류와 함께 성장 가능한 이런 사업들을 고시해서 이왕이면 기회가 될 때 같이 홍보를 해 주고 이런 걸로 진흥을 해 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식품이라든지 제가 말씀드린 화장품 같은 것들이 들어갑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K-아이웨어, 안경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맞습니다. 한류 연관 산업으로 안경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고요.

저희가 내년 초에 한류 연관 상품 지정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때 패션 속에 안경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재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힘 충북 충주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 이종배 위원입니다.

저는 국방부, 외교부 또 시간 되면 국무조정실 이렇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분은 볼일 보셔도 좋겠습니다.

외교부차관님, 한미 관세협상 MOU 또 팩트시트는 언제 되는 거예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지금 미 측에서 내부적인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어떤 부분에 대해서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아직은 조금……

○이종배 위원 뭘 다 아는데…… MOU는 다 됐지요? 팩트시트에서 안보 분야가 안 됐다 이런 얘기던데. 엇그저께 다 확인했습니다, 여기 다른 분들한테.

안보 분야 그거 이번 주에는 됩니까? 팩트시트, JFS하고 MOU 다 이번 주에는 체결이 돼요? 지난주에 한다고 그래 가지고 다 기대하고 있었는데 안 됐잖아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 측 반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냥 마냥 기다리고만 있는 거예요? 외교부에서는 전혀 활동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기다리고만 있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면 언제쯤 돼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상대 측에서의 입장을 좀 기다려야 되는, 아직 정리가 좀 덜 돼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빨리 노력해서 해야지 국민들한테 지난주에 다 되는 것 같이 얘기해 났다가 안 되니까 실망하잖아요. 국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하잖아요. 빨리하세요. 빨리 노력을 하세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국방부차관님, 이두희 차관님.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국방부차관입니다.

○이종배 위원 핵잠입니까, 원잠입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핵추진잠수함, 즉 핵잠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걸 처음에 핵잠이라 그랬다가 또 정부에서는 원잠으로 바꿔서 부르기로 했다 그렇게 발표했잖아요. 한 열흘 만에 이렇게 용어가 왜 바뀌는 거예요? 지금 핵추진잠수함으로 바뀌었지요, 원자력추진잠수함에서?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처음에 원자력추진잠수함 할 때는 이게 혹시 핵폭탄을 탑재하는 것으로 오해할까 봐 이렇게 부르기로 했다 그랬잖아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이종배 위원 왜 이렇게 자주 바뀌어요? 누가 바꾸라고 그랬습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아닙니다.

○이종배 위원 대통령실에서 바꾸라고 그랬어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정부 내부에서 논의하면서 국민들이 좀 더 쉽게 인식하고 이해하기.....

○이종배 위원 아니, 그러면 처음에 핵잠이라고 했을 때 그냥 그대로 두면 되는데 또 그걸 정부에서 원자력추진잠수함으로 바꾸기로 했다 그래 났다 며칠 있다가 또 핵이라고 그러니까 혼동되잖아요, 국민들이. 신뢰를 떨어뜨리는 태도입니다, 그게. 자, 핵잠이고.

이걸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겁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기본적으로 국내 건조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염두에만 두는 거예요? 안규백 장관님은 국내에서 한다고 또 기획관리실장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런데 뭐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렇게 협의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한미 간의 협의가 다 종결이 되면 구체적인 계획 단계로 접어드는데 아직은 구체적인.....

○이종배 위원 지금 핵연료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미국에서 각 부처의 협의가 좀 뒤쳐지는 것 같은데,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는 ‘한화가 미국에서 원잠 두세 척을 10년 내에 생산할 계획이다’ 그런 기사를 봤는데 사실입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저희도 해외 언론은 보고는 있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이종배 위원 됐습니다. 차관님이니까 잘 모르시는 것도 같고 또 자신 있게 얘기할 수도 없는 것 같고……

국무조정실장님 나오셨나요?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김용수 2차장 대신 나와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2차장님, 헌법준중 정부혁신 TF 언제 구성합니까?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김용수 각 기관별로 11월 21일까지……

○이종배 위원 21일이요?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김용수 예.

○이종배 위원 기관별이면 몇 개나 돼요?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김용수 59개 기관으로……

○이종배 위원 장차관, 장관들도 모르고 국무위원들도 그거를 몰랐는데 거기에 내란에 참여하고 협조한 공무원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왜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 아주 불안하게 만드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적폐청산 해 가지고 다 그때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무원들이 일을 안 했다고요, 일을. 공무원들이 창의적으로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공무원 출신이지만 공무원들 그렇게 납작 엎드리게 만들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왜 이런 TF를 만들어서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잘 좀 검토하세요. 저는 옳은 정책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답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을 고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정 위원 오전에 이어서 인권위원장에게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혐오적 발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답변을 잘 못 주셨어요. 맥락을 살펴보세요야 된다는 말씀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제가 답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인권위에서 혐오에 관련된 어떤 논의라든지 회의라든지 지금까지 과정이 뭐가 있습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금년 9월에 1회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내년 1월에 또 혐오 관련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고민정 위원 토론회를 내년에 하신다.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지난 9월에도 했었습니다.

○**고민정 위원** 9월에 한 번 했고 내년엔 한 번 또 하신다는 거지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예, 그리고 앞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해 나갈 예정입니다.

○**고민정 위원** 그런데 예산은 절반 이상으로 깎으셨네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그게 사실은 저희가 내년엔 교육원 개청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출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좀 감액이 됐는데요.

○**고민정 위원** 지금 현재 가장 심각한 게 혐오표현에 대한 부분들을 국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어 하거든요. 그것을 주관하셔야 되는 부처가 인권위원회인데 가장 먼저 여기를 삭감하셨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니까 25년부터 절반으로 줄었네요, 그나마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증액해 주시면 그것을 저희가 잘 활용해서 우리나라의 혐오 표현……

○**고민정 위원** 아니, 저한테 ‘증액해 주시면’ 할 것이 아니라 이미 진작부터 혐오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계시면 두 배, 세 배로 늘려서라도 이 부분을 차단하셨어야 되는데 의지가 없으신 것 같아서 여쭙 겁니다.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저희가 내년 교육원 개원 때문에 그랬는데 증액해 주시면 저희가 정말 잘해서 우리나라에 혐오표현이 근절되는 데 이바지하겠습니다.

○**고민정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혐오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가 명확해야 되고 국민들의 상식적인 시선과 같아야 하거든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예, 저도 공감합니다.

○**고민정 위원**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명백한 혐오적 발언에 대해서 맥락을 봐야지 알 수 있다면서 계속 답변을 못 하셨어요. 그 맥락을 모르는 사람 대한민국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뉴스로 다 봤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분에게 혐오표현의 기준을 정하라는 것을 국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인권위에서 혐오표현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거나 한 것 알고 계세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알고 있지요.

○**고민정 위원** 언제 나왔습니까? 본 적은 있으십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2019년도에, 지난번 그것 하면서 저희가 한번 죽 검토를 해 봤습니다. 토론회 때……

○**고민정 위원** 예, 혐오표현 리포트가 2019년에 나왔지요. 그리고 24년도에 안내서가 만들어졌지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예.

○**고민정 위원** 거기에 의하면 출신이나 지역, 인종과 관련해서 차별·폭력의 선전과 선동을 하는 것을 혐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총괄하셔야 될 분께서 ‘얼굴 새까만 사람만 모으지 말고 하얀 사람 데리고 와라. 기레기들이 들어와서 방치한다. 특정 국가와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전염병과 감염병의 확산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 왜 답을 못 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은 어떤 맥락에서 어떤

경위에서 이런 발언이……

○고민정 위원 그러면 이 맥락은 어떤 건지 답변 주세요.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정말 에이즈, 항문암, A형간염 같은 질병이 확산된다는 저술 쓴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있습니다.

○고민정 위원 있지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예.

○고민정 위원 이것은 괜찮습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그 부분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고민정 위원 차별금지법하고 이 병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그것은 동성애 관련 부분이……

○고민정 위원 법이 만들어지면 질병도 확산합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그것은 동성애 관련된 부분의 발언과 관련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민정 위원 차별금지법에 그 부분만 들어 있습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다른 것도 있지요.

○고민정 위원 예.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고민정 위원 인권위원회가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알고 있지요.

○고민정 위원 모르시는 것 같아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인권위는……

○고민정 위원 보편적 상식을 지켜야 되는 것도 있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지켜지지 않고 있는 소수의 목소리에 대해서 보호하자고 하는 게 인권인 겁니다.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물론이지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소수자의 인권도 소중하고 또 그에 따르는 다른 모든 사람들의 인권도 존중돼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고민정 위원 그러면 현대성윤리문화교육원이라는 기관에서 강의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없습니다.

○고민정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저 포스터에 보면 위원장님 얼굴이 딱하니 들어가 있는데 고발이라도 하시겠습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그 경위를 파악한 다음에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겁니다.

○고민정 위원 어떤 조치 할 겁니까? 법적 조치 할 겁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그것은 어떤 경위를 파악해서……

○고민정 위원 법적 조치 할 겁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의한 사실도 없고 거기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고민정 위원 그래서 저 사람들을 법적 조치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그 경위를 한번 파악한 다음에 제가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민정 위원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제가 운영위 하면서 인권위원장님 인사청문회까지 다 했는데요. 인권과는 가장 동떨어진 분이십니다. 왜 그 자리에 계속 계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고……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고민정 위원 대한민국의 혐오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라도 그 자리에서 내려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소수자의 인권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고민정 위원 더 이상 답변 들을 의미가 없습니다. 그만하시지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동시에 아울러 우리 국민의 보편적 인권을 저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가인권위원회법에는……

○고민정 위원 그만하시라고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한다고 돼 있습니다.

.....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힘 충남 홍성·예산의 강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규 위원 1차 질의에 좀 보충하겠습니다.

검찰총장 대행이 법무부와 용산 대통령실의 외압에 굴복하여 대장동 일당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은 민주당이 특검으로 지금 탈탈 털고 있는 해병대 사건 수사에 비춰 볼 때 대장동 외압 폭거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또 내란 물의를 정치 중립의 공직사회로 확대하여 제2의 적폐청산의 광풍을 몰고 오고 있는 것은 헌법 존중 TF가 아니라 헌법 파괴 TF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정청래 대표가 주장한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 수사검사의 조작수사, 협박수사, 음주수사를 따져 보자면 이번 대장동 일당에 대한 항소 포기 세력에 대해서도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동시에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유재성 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제2중앙경찰학교 입지 후보지를 선정하고 있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그렇습니다.

○강승규 위원 지난해 전국의 47개 공모 후보지를 대상으로 1차 후보지 세 곳—충남 예산·아산 그리고 전북의 남원—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 후보지 선정 앞두고 연기했어요. 연기 이유가 뭐였지요? 짧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지금 연구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강승규 위원 추가 연구용역의 기준이 됩니까? 어떤 부분을 보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어떻게 공정하게 심사할 건지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이라든지, 비용편익분석 여러 가지를 지금 연구용역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승규 위원 그러면 입지 후보지를 선정하는데 세 곳 중에서 지역균형발전 이런 것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사항 같습니다. 일단 연구용역을 보고 최종 후보지 선정에 있어서는 공정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외부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정하게 선정할 계획입니다.

○강승규 위원 그러면 전국에서 교육생 후보들이 모이니까 교통 여건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정주 여건 등 이런 부분 등을 후보지 심사할 때 따져 보겠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고려가 될 것 같습니다.

○강승규 위원 그러면 지금 세 곳의 후보지로 압축이 돼 있는데 입지 여건, 여러 가지…… 그러니까 교통편의 여건이라든지 아니면 또 주변의 정주 여건 등을 볼 때는 충청도지역이 가운데에 적절하겠지요. 그런데 지역균형발전 이렇게 보면 아까 민주당의 남원 출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남원이나 이런 쪽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충남에서는 또 아산보다는 예산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좀 더 배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 제가 여기서 개인적인 의견을 표현하는 건 적절하지 않겠고, 하여튼 저희는 공정하게……

○강승규 위원 그렇지요. 객관적인 게 제일 중요하겠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강승규 위원 그런데 올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께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제2중경 학교는 충남의 아산과 전북의 남원을 후보지로 공약을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지금 후보지가 세 곳으로 압축해서 있었는데 이재명 후보께서 후보지로 선택한, 공약 후보지로 한 곳은 둘 다 민주당 의원 지역구예요. 그리고 저만, 충남 예산만 국민의힘 지역구인데 이곳을 쪽 뺐지요. 그러면 지금 후보지 세 곳을 놓고 심사를 할 예정인데, 내년 정도 한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대통령의 공약이 영향을 끼치겠네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일단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정하게 심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규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경찰학교가 이재명 정부에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지난 정부에서 1차 후보지 세 곳을 선정할 때도 그 당시에 여당 후보지 지역은 한 곳이었고 야당 후보지가 두 곳이었습니까. 그렇다면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 공약을, 대통령후보께서 공약을 걸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하더라도 최종후보지 선택에 정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기준이 돼서는 되지 않겠지요? 청장님이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규 위원 꼭 객관적으로 모두 다 수긍할 수 있게 또 교육의 명문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선정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을 이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진 위원 동북아의 물류 중심 향만으로 발돋움하는 평택항과 함께 병진 발전하는 이병진입니다.

여러분은 영원히 이병진을 잊지 못하실 겁니다.

빠르하시지요? 한번 이렇게 깎지 껴서 좀 풀어 주세요. 풀고 편안하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차장님, 제가 솔루션 네 자, 제가 만든 조어 있었지요? 뭐지요? ‘많제정적’, 그게 어려우면 ‘정적 많지?’ 이렇게 외우면 연상기법이 됩니다. 이것이 피할 수 없는 미래다. 결국은 예산으로 수렴되더라.

기재부차관님, 협조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위와 권위주의는 천양지차입니다. 권위는 누가 줍니까? 내가 권위 있게 한다고 권위가 옵니까? 국민이 주는 겁니다. 그렇지요?

법무부장관님!

○법무부차관 이진수 법무부차관 대참했습니다.

○이병진 위원 차관입니까?

권경애 변호사 혹시 들어 봤어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성함 들어 봤습니다.

○이병진 위원 그렇습니다. 학폭 피해자 소송 불출석으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모 S 갤럭시인데 키워드만 치면 이게 죽 나오잖아요. 변호사를 쳐 봤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지인이 입력돼 있는 게 몇 분인가, 딱 마흔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만나는 사람은 서너 명 되겠지요.

제가 이 얘기를 제기하면 여기 지인들이 저를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신념에서는 이게 용납이 안 돼 가지고 오늘 부득이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결국 유족이 승소를 했어요. 그렇지요? 그래 가지고 권경애 변호사는 자격 1년 정지를 받았습니다. 징계사유가 재판 3회 연속 불출석, 항소심 판결 미고지로 인한 상고 기간 도과, 단순한 직무태만이 아닌 중대한 변호사법 윤리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이병진 위원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들어가는 말을 하니까 딱 머리가 잡히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본다면 1년이 아니고 5년 자격정지도 가볍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변협의 징계 절차는 말이지요, 첫 번째 공정성, 두 번째 피해자 절차권 보장 이 두 가지가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없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있습니다.

○이병진 위원 있습니다.

첫째, 피해자 진술권 부재입니다. 재판이라든지 행정처분, 심지어 학교폭력까지 말이지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진술의 기회를 가집니다. 그런데 변협의 징계 절차에는 가해 변호사는 배석이 가능하지만 피해자는 서면진술만 합니다, 서면제출만. 말할 기회조차 없

습니다. 이게 문명 대국 21세기 대명천지에서 가능한 겁니까?

두 번째, 대한변호사협회 기각결정에 불복 절차가 없습니다. 권경애 변호사 사건에서 유족 측이 추가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변협이 일방적으로 기각했어요. 헌법소원 역시 불가능합니다. 변호사법 전반의 모든 징계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부여돼 있다, 부여돼 있지 않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병진 위원** 부여돼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변호사 징계 청구 시효도 문제가 있어요. 98조의6을 보면 말이지요, 시효가 3년으로 돼 있습니다. 3년만 변호사께서 침묵하면 말이지요, 시효 만료로 면책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다른 법령에 비해서도 지나치게 짧고 후진적인 제도입니다.

권경애 변호사 같은 사례로 국민들이 피해받는 현실을 어떻게 보십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병진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변호사 징계 절차 청원인이 직접 배석하고 진술할 기회를 마련해야 됩니다. 두 번째, 변호사 징계 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기산점을 위반행위 발생일이 아니고 피해자가 인지한 날로 개정해야 됩니다. 저도 변호사법 개정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전부터 쪽 언급했던 제도개선안이 있습니다. 변호사 징계 절차를 변협이 아닌 법무부에 가칭 변호사윤리위원회를 신설해서 자율 규제 한계를 보완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지금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국민들께서 피해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개선안을 적극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병진 위원** 저의 신념, 이 한 분이 억울해했지만 모든 국민과 연계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쪽지가 많이 들어와서 이 얘기를 꼭 하고 예결위에서 마치고자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의 안도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걸 위원** 국무위원님들 밤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방부차관님께 여쭙게요.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 관련해 가지고 여쭙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11년째 교착상태에 있었는데요. 다행히 이재명 대통령께서 문제 해결 의지를 밝히면서 지금 BH에 전담 TF가 구성이 되었는데요. 또 관계 기관 간에 난항이 상당히 많았습니

다. 특히 이전 부지에 있는 지자체에서 반대가 좀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중앙정부가 아주 집요하게 노력을 해 주셨어요. 그 덕분에 해당 지자체가 TF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연내 6자 TF가 공식 가동될 전망입니다. 국방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향후 논의와 문제 해결의 키는 뭘까요? 이전 지역의 수용성을 확보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그렇습니다.

○안도걸 위원 그걸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지역개발 패키지를 제시해야 되는데요. 지금 어떠한 내용으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국가사무지만 기본적으로 특별법이 만들어질 때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법을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상황이 많이 바뀌다 보니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고 또 국가 지원에 대해서 필요성을 공감하는 측면이 많아서 논의 중에 있고……

○안도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광주에서 요구하고 있는 6자 협의체 회의가 연내에 개최가 되고 하던……

○안도걸 위원 제가 진행 상황은 알겠고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구체적인……

○안도걸 위원 여기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되겠지요. 그게 중요한, 콘텐츠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그렇습니다.

○안도걸 위원 그래서 현재 지역에서 요구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쪽에 분산에너지특구를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고 또 ‘첨단산업 분야에 있어서의 기업 투자 유치를 해 달라’ 그리고 ‘AI 기반의 스마트팜을 조성해 달라’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최소한의 지원책들은 포함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기획재정부차관님 계시는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대안 제시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차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대구경북 공항 이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부 대 양여 사업의 한계가 드러난 것 같아요. 그래서 재정 당국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현재 이 사업 모델이 갖고 있는 한계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이랄까 지원 방안이 별도로 선제적으로 제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점에 공감하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기부 대 양여라는 기본적인 골격은 유지하고요. 그 부분을 부족할 수 있는, 보완 방안을 이리저리 지금 궁리하고 있습니다.

○안도걸 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체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가 어딴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광주입니다.

○안도걸 위원 예, 광주입니다.

특별법이 제정이 됐고 그에 근거해 가지고 중장기 발전종합계획도 지금 만들어져 있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수립이 지금 안 되고 있고요. 또 5년마다 수정·보완인데 그게 약간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획 내용이 제대로 이행이 또 안 돼요. 지금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주도적으로 발전 전략을 만드는 데 힘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야 비로소 지금 작은 용역이 하나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 글로벌 문화·관광타운 조성입니다. 이 용역에 장관님을 비롯한 문체부의 많은 지혜와 아이디어가 모아져야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 추진체계가 지금 유명무실합니다. 추진단이라고 있는데 단장이 공석이 된 지가 꽤 됐어요. 그래서 사실상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약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청을 신설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검토는 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지금 추진단 조직부터 정상화를 빨리해 주십시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관련해서 문화기술연구소 설립 문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조성법 취지에 맞는 내실 있는 프로젝트를 발굴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또 킬러 콘텐츠가 필요한데요. 아시아 문화기 때문에 아시아 문화를 융합하는 그런 킬러 콘텐츠를 제작하고 또 우리 아시아문화전당, 전 세계에서 가장 잘 갖추어진 창작 공간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또 상징조형물 조성 등 체감도 높은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계의 달인이신 장관님께서 직접 챙기시고 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같이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견 좀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그렇게 직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도걸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갑 윤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후덕 위원 제가 마지막인 모양이네요.

내일 고3 학생들이 수능시험을 보는 날입니다. 총정리 다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재외동포청장님.

○재외동포청장 김경협 예, 동포청장입니다.

○윤후덕 위원 자료에 의하면 청에서 1958년에서 2024년까지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을 한 사람…… 입양을 한 사람은 없지요. 입양된 사람이 11만 3000명 정도 된다는 것 같아요.

○재외동포청장 김경협 예, 그렇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 지금까지 미국의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이 한 15% 정도 된다고 그렇게 조사를 했더라고요.

○재외동포청장 김경협 예, 약 1만 8000명 그 정도 됩니다.

○윤후덕 위원 그런데 트럼프가 다시 집권하면서 이민정책이 아주 강경하잖아요?

○재외동포청장 김경협 반이민정책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윤후덕 위원 그래서 미국에서 상당히 불안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분들 중에서 한국에 다시 오신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몇 분 정도 돼요?

○재외동포청장 김경협 지금까지 5명이 추방됐고 현재 두 분 정도가 추방 위기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이 좀 더 이렇게 오시게 되지요?

○재외동포청장 김경협 점점 늘어날 가능성은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체류하거나 정착하거나 이렇게 되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청에서는 케어하고 좀 그래야 되잖아요. 그에 대한 예산은 좀 확보하고 있어요?

○재외동포청장 김경협 안타깝게도 예산이 없습니다.

○윤후덕 위원 없어요?

○재외동포청장 김경협 예.

우선 긴급하게 추방의 경우를 예상을 해서 청에서는 2억 원 정도를 요청을 했는데 아마 편성 과정에서 다 삭감된 것 같습니다.

○윤후덕 위원 아니요, 문제는 그래요. 청이 이게 위상이 약해서 그런지 그 앞에 계신 기재부하고 예산 협의하면서 잘려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요?

○재외동포청장 김경협 금년에 3년 차, 그러니까 설립된 지 3년 차의 신생 기관이다 보니까 아직 조직체계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예산은 이전의 재외동포재단 시절하고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줄어들고 있고 이런 상태로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어떻게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계신 차관님께도 제가 미리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입니다.

외교부차관님, 미국하고 정상회담을 하고 이렇게 많은 성과가 났는데 팩트시트를 아직 발표를 못 했잖아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윤후덕 위원 그것 중에서 원자력협정을 개정하려고 협상을 하고 있지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미측에서 저희하고 기본적인 합의를 마련하고 미측에 돌아가서 각 기관들이 저희가 마련한 문안에 대해서 내부적인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저희가 추정하거나 또 나름대로 파악한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조금 말씀을 삼가는 게 아직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윤후덕 위원 아니요. 외교부에 계신 분들은 얘기를 삼가고 그러는데 이게 이미 설명 자료를 국민들께 알려 드리고 그리고 설명을 하고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국정 운

영이고 그리고 또 성과에 대해서도 홍보할 수 있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 있는 외통위의 저 같은 국회의원은 여기저기서 물어보면 답변도 못 하니까, 저 4선 의원인지 모르는 것 같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력협정을 하는 데 두 가지 줄인 것 같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민간에 산업용으로 원자력협정을 하는 것은 기존에 개정을 하면서 일본 정도 수준까지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 또 다른 것은 핵추진잠수함을 이제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연료를 별도로, 군사용으로 원자력에 대한 협정을 별도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늦어진다고 하는 것 같아요. 맞는 얘기예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아직 협상의, 그러니까 큰 모습은 사실은 경주에서 갖추어졌습니다마는 협상의 잔여 프로세스가 좀 남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대방도 있고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윤후덕 위원** 아니, 그래서 장관님이 피하고 차관님을 이렇게 여기에 보낸 거예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장관님은 G7 회의에 가 계십니다.

○**윤후덕 위원** 알겠는데요. 조금 더 빨리 합의를 해서 국민들께 알 수 있게 좀 해 주십시오.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호칭 시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김대식·강승규·윤후덕·조계원·안도걸·김한규·고민정·박희승·이병진·허성무·이소영·박형수 위원님께서 회의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 주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무위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직원들과 보좌진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경위분들과 속기사분들 그리고 국회방송 직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비경제부처 대상 부별심사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25분 산회)

○출석 위원(47인)

강승규	고민정	곽상언	김남근	김대식	김상욱	김성희	김승원	김용만	김위상
김재원	김한규	노종면	박민규	박형수	박희승	배준영	서범수	서왕진	송기현
안도걸	우재준	윤후덕	이강일	이병진	이성권	이소영	이수진	이재관	이종배
이훈기	임미애	임종득	전종덕	정진욱	조계원	조은희	조정훈	조지연	차지호
천하람	최기상	최형두	한기호	한병도	허성무	황정아			

○청가 위원(1인)

김기웅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전문위원 정대영
입법심의관 이동훈
입법심의관 최철민

○국회측 참석자

국회사무처
사무총장 김민기
사무차장 박태형
기획조정실장 이양성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김용범
재정기획보좌관 류덕현
대통령경호처
기획관리실장직무대리 강병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사무처장 방용승
사무차장 박학민
감사원
원장권한대행 김인회
사무총장 정상우
국무조정실
실장 윤창렬
국무1차장 김영수
국무2차장 김용수
기획재정부
제2차관 임기근

예산실장 유병서
교육부
장관 최교진
차관 최은옥
외교부
제1차관 박윤주
통일부
장관 정동영
법무부
장관 정성호
차관 이진수
국방부
장관 안규백
차관 이두희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국가보훈부
장관 권오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성평등가족부
장관 원민경
기획조정실장 김기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오동운
차장 이재승
인사혁신처
처장 최동석
차장 박용수
법제처
처장 조원철
차장 김창범
재외동포청
청장 김경협
병무청
청장 홍소영
차장 최규석

방위사업청

청장 석종건

미래전력사업본부장 정규현

경찰청

청장직무대행 유재성

기획조정관 손제한

소방청

기획조정관 이진호

장비기술국장 윤상기

국가유산청

청장 허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창호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유철환

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 조소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송경희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차정인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송기춘

상임위원 위은진

○법원측 참석자

법원행정처

처장 천대엽

차장 배형원

○헌법재판소측 참석자

헌법재판소사무처

사무처장 손인혁

사무차장 김용호

기획조정실장 하정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측 참석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허철훈

사무차장 강동완